



<인권하루소식> 99년 10월분 총목차(1465-1486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476	10/16	1	해고노동자 40일 대 단식투쟁 - 고려화학 연기흡 씨, 2년새 2차례 부당해고/ 근로자 없는 근로자 복지법 - 민주노총 국회에 의견 청원/ <국보법 속보> 충북 종교인 공동활동 /
		2	최종길 교수 사망 26주기 맞아 진상규명 촉구/ 김형찬씨, 지난 10일 돌아와 - 심경정리 위한 잡적/ 양민학살에 의한 사망자 약 1천 6백명 /오트론노동자 또 폭행당해 - 사측 농성장 덮쳐
1477	10/19	1	왜 우리를 감시·통제하는가 - 보안관찰대상자 등 83명 정보공개 청구/ 복지를 향한 고난의 행진 - 전혜투 전국순회투쟁/ <국보법 속보> 2차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 열려/
		2	<인권시평> 미국을 전범으로 제소하자(이재훈 한겨레 기자)/주간인권흐름(10월 11일-17일)
1478	10/20	1	불법사찰 이대론 안된다 - 사회단체 회원, 근거없는 사찰에 민사소송 제기/ <새로나온 책> 「제2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관련 자료집 (1)」
		2	서초구청, 대통령 행차를 이유로 노숙철폐기 쫓아 내/ 성직자, 한전 민영화 반대 - 공공성 포기 철회 요구/ 검찰증거 비과학적 - 치과의사 모녀살해사건, 새 주장
1479	10/21	1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촉구 - 민주노총, 노동관계법 개정 입법청원/ 한전민영화 반대 - 성직자에 이어 교수도 동참/ 참고인에 구인장 발부 - 민주노총, "납득할 수 없는 일" <국보법 속보> 광주전남, 천막농성 돌입
		2	"생일잔치에 앞서 경찰폭력 근절하길, 인권단체 인권교육 등 경찰개혁 촉구/여성구직 약제에 약제 - 장시간 노동요구에 연령제한도/감청현황을 밝혀라" - 청주 정평위, 자료공개 요청
1480	10/22	1	80년대 고문경찰관 법정구속 - 이근안 고문사건 공범 경찰관 6명 "모두 유죄"/ 검찰, 국감에 거짓 답변 - 피해자에게는 사과
		2	개인정보유출, 본인만 모른다 - 통신통밀보호법 입법청원 등 정보유출 반대 시민행동/ 임대아파트법 개정 논쟁, 주민결정권 보장 촉구/ <만화사랑방> 보안관찰, 이젠 그만해라
1481	10/23	1	있으나마나한 집회의 자유 - 집시법 시행령, 확성기 사용·유인물 배포도 제한/ <집시법 시행령 주요 내용>
		2	에바다폭력사태, 재단축이 사주 - 원장 직무대행, 농아학생 입막음 시도/ "원적복지, 꿈도 꾸지 마라" - 41일 단식에 회사측 꾀적 안해/ "공교육 포기"반발 - 교육청, 수업료 인상 방침/
1482	10/26	1	독제자 미화에 국고를 털다니 - 시민단체, 박정희 기념관 지원에 강력 반발/핵심 비켜간 기만책" - 시민사회계, 국민회의 국보법 개정안 반대/<국보법 속보> 청년진보당, 단식농성 돌입
		2	유엔인권이사회, "국보법 문제"지적 - 한국정부 자유권조약보고서 심의/ <주간인권흐름>(10월 18일-24일)
1483	10/27	1	시대착오적 사상제관 진행 - 국보법 사건 피고인 최후진술권 박탈/ 폐렴·심장병에 멍든 철거촌 어린이 - 궁안마을 철거민, 명동성당서 모금운동/ 아셈 민간단체 포럼 창립
		2	학습지 업계 노조 첫 파업 - 저임금·장시간노동 구조 지각변동 예고/ <인권시평> '아줌마부대'가 만드는 '조용한 혁명'(윤정숙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1484	10/28	1	법무부 거짓말 이지경까지 - 유엔인권이사회 "호평", 사실과 달라/<새로나온 비디오> 「희망으로 그리는 세계 1,2」 (제작 올림피아프로덕션)
		2	에바다 파행 어디까지 가려나 - 교사들 학교출입 못하니 4일/검찰, 이유도 고지 않고 민주노총 관계자 참고인 수사/호세 라모스 호르타, "동티모르 독립은 자유와 인권의 승리"
1485	10/29	1	교수들, 국보법 폐지 농성 돌입 - 국가보안법 감의 등 강단 투쟁 병행/기자의 눈> 반미는 무조건 안된다?/<국보법 투쟁 속보> 인천지역 동참, 기독교계 정치권에 항의서한 발송
		2	20세기 돌아보며 새천년 인권보장 - 제4회 인권영화제 11월 26일 개막/인천 한양공영, 해고자 복지 약속 불이행/<만화사랑방> 유엔인권이사회 권고 속인 법무부
1486	10/30	1	진실규명과 국가의 사과부터-이근안 사건 처리 인권의 원칙에 맞게/민가협, '이근안 엄벌' 촉구
		2·3	99년 10월 목차(1465-1486호)

# 인권하루소식

## 99년 11월

### (제 1487호 ~ 1507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11월 2일(화)  
제 1487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외국인노동자 "단결만이 살길"

### 열악한 인권 개선 위해 노조설립운동 제기돼

최근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인권과 노동조건 개선의 일환으로 '외국인노동자 노조건설 운동'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외국인노동자 대부분이 산업연수생이나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제약과 노조가 없는 5인 이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현실적 제약을 받고 있어, 노조설립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조차 어려웠다. 그러나 IMF 이후 건설일용직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이 현실화되면서 외국인노동자들의 노조설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외노협)는 "노동법에 따라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로 볼 수 있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노협의 이윤주 사무국장(30)은 "영세사업장에서 외국인노동자만의 개별 노조를 세우기는 어렵다. 합법과 불법 노동자들이 함께 지역노조 설립을 구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사무국장은 "외국인 노조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

될 경우 법무부와 검찰의 탄압이 예상되는데, 외국인노동자들은 강제출국의 위험이 있어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힘들다"며 "당분간 국내의 노동 사회단체가 이들을 운동의 주체로서 적극 끌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정부, 외국인노동자인권 방치

그간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요청이 잇달아 왔고 96년에 여야에서 각각 입안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기도 했으나, 15대 국회 회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도 올 1월부터 외국인노동자가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제도의 실효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을 제기한 외국인노동자가 불법체류자로 밝혀질 경우, 노동부가 이를 곧바로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이 불안한

외국인노동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노조설립 운동은 '약자로서의 보호를 넘어서 노동권과 인권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진일보한 운동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외노협은 오는 3일 낮 1시 30분 종로성당 3층에서 '외국인노동자운동의 전망과 노조건설'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일본과 독일의 이주노동자운동 사례 등을 살펴본다.

### ◎국보법 반대투쟁 속보◎

#### 교수 1천명, 폐지 촉구

대학교수 1천여명이 국가보안법의 원전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11월 1일 현재 전북대, 서울대, 한신대 등 전국 63개 대학의 교수 1천64명이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이고 반민주적 악법이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남북간의 평화공존 및 평화적 통일을 저해하고 있으며 △북한에 유사법제가 존재하더라도 인권적 기준에서 그 존치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고 △민주화 조류와 더불어 전개되는 세계화의 기본주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야만적 악법"이라며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보안법의 존치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현재 농성투쟁을 비롯한 실천활동도 벌이고 있다.

### 주요공판안내

▶ 11월 5일(금)  
강제우, 문규현(국보법) 서울지법 형사 22부 319호 오전 11시 속행

### ◆ 99년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 ◆

2천년 총선을 앞두고 15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행정자치위원회 등 5개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인권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일목요연하게 묶었습니다. 이들 자료집은 복사비만으로 제공됩니다. 총 목차를 받고 싶으신 분은 사랑방 홈페이지의 '의견 및 게시판'란(<http://www.iworld.net/~rights>)을 보시거나, 이메일 주소 또는 ID를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즉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 2만6천원(520쪽)/법제사법위 3만원(618쪽)/보건복지위 4만원(831쪽) /외무통일위 3만4천원(686쪽)/환경노동위 4만3천원(869쪽)

인권  
시평

###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관한 몇 가지 단상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 정치인들을 접촉하면서 실감하는 일, 그것은 그들이 여당이고 야당이고 국가보안법의 내용에 대해서 별 큰 관심 없다는 점이다. 즉 국가보안법 몇 조 몇 항이 국민의 인권을 크게 억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개정 내지 삭제해야겠다는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 중 혹자는 어디를 얼마만큼 손질하는 것이 내년 선거에서 가장 안전한가를 생각하고 혹자는 자기(들)의 자존심에 결정적인 상처를 입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수 있는 선이 어느 선인가를 생각한다. 심각한 표정으로 "북의 위협"을 이야기하는 그들 자신 내심으로는 "북"을 별로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아마도 내년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그들은 국가보안법 철폐까지도 외칠 수 있을 것이다.

\* 일정한 역사적 조건에서 태어난 법이란 강제력 행사라는 방법으로 지배이데올로기를 유지·강화시킨다. 그런데 그렇게 유지된 이데올로기란 상당한 기간 생명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법이 필요 없게 된 후에도 계속 지배력을 발휘한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국가보안법에 별별 썰고 반공의 허위의식으로 길들여진 국민은 국가보안법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와도 그 새 시대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 시대가 변했다고 하지만 혁명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국보법은 감자기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희생자는 극히 일부 기득권 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이다. 왜 모든 국민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그러나 이것을 해내지 않으면 국가보안법 반대운동의 대중화는 불가능하다. 안이하게 '국가보안법=양심수'의 도식을 만드는 일, '국가보안법 피해자선언'을 발표해내는 일, 이것은 고립을 자초하는 운동이 아닌가? 그것은 마치 교도소에서 '양심수'와 '잡범' 사이에 계급이 있듯이 운동권 엘리트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 아닌가?

\* 박영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은 "우리더러 반국가단체라니 남북관계가 풀립니까?"라며 잘하고 있다. (월간 말 11월호)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남한 집권자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북한=반국가단체' 규정을 풀고 싶어 안달이다. 우리는 우리대로 철저히 남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현시켜 나가는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을 공격하면 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전 방위적 공격이 될 뿐만 아니라 먼 장래에 대비하여 우리 자신 속에 자리잡은 국가주의적 독선과 권위주의의 뿌리를 제거해 나가는 작업이 될 것이다. 우리의 역할은 증차대하다.

### 주간인권흐름

(99년 10월 25일-10월 31일)

- 1. 도마뱀 꼬리는 잡았는데...**  
고문기술자로 11년간 도피생활을 했던 이근안 전 경기경찰청 공안분실장 자수(28일) ... 이 씨 뿐 아니라 과거 고문행위에 연루된 책임자를 모두 색출하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 대두
- 2. 교수들, 국가보안법 폐지 농성투쟁 돌입**  
전국 각 대학의 교수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하며 농성 및 강단투쟁에 돌입(27, 28일) / 교수들의 집단농성은 95년 5·18특별법제정 투쟁이래 처음
- 3. 성적 속이는 못된 버릇 여전한군.**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법무부, 인권이사회가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거짓 홍보자료를 언론에 배포(26일)
- 4. 학습지 노동자, 첫 전면파업**  
제능교육 노동조합, 학습지 업계로는 최초로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항의하며 전면파업 돌입(26일)
- 5. 조레만도 못한 헌법?**  
지방자치단체 고용지 공무원 8백여명이 노동부가 조레 미비를 이유로 이들의 노조 설립을 불허한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29일)
- 6. 모처럼 속 시원한 판결!**  
서울지법 민사합의부, "외국 주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아닌 이상 외국의 사법(私法)적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미군부대 내에서 은행 지점장 등으로 일하다 해고된 홍, 손 씨가 낸 해고무효 확인청구소송에서 미국 정부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27일)
- 7. 교수 성희롱에 대학생 집단대응**  
대전 한남대생 2백여명, 교수의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집단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27일)
- 8. 정신장애인도 장애인 혜택 받는다**  
복지부, 내년부터 신체발달 장애인을 비롯해 심부전증·협심증 등을 앓는 심장 및 정신장애인들에게 장애인 등급을 부과해 장애인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29일)
- 9. 동성애자도 당당한 권리주체**  
영국 대법원,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들에게만 상속 가능한 국가보조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동성애자 파트너의 상속권 인정(28일)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a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11월 3일(수)

제 148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다국적기업을 감시하자"

### 세계화 명분, 인권·노동·환경침해

이른바 '세계화'시대. 국경의 제한없이 무한대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에 의해 노동권, 환경권 등의 인권침해 양상 또한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6개 단체는 2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다국적 기업의 노동·환경·인권 실태와 시민감시'라는 주제의 공동워크숍을 갖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부의 무분별한 외자유치정책과 다국적 기업의 횡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금속산업연맹의 노제열 정책실장은 "수출자유지역에서는 외자기업에 대한 특별로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는데 정부는 세금감면 등 혜택의 법제화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외국자본에 매각된 국내 기업의 경우 정리해고와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의 이창근 씨도 "다국적기업은 투기의 합법화나 내국인 고용보장 등의 이행의무 부과금지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제투기자본은 국제기구 등을 통해 제도화되고 있지만, 시민사회의 대응은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다국적기업의 인권위협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다양한 기업감시안을 제안했다.

불매운동 등 다양한 감시 필요

차지훈 변호사는 "OECD 회원국은 다국적기업을 감시하는 국가별 연락소(NCPs)를 설치할 의무규정이 있으며, 따라서 NCPs가 노동, 환경, 인권 분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거나 정부기구의 상설화 후 사회단체와 협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이 제도는 구속력이 없어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일단 이러한 방법이라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기업연구소의 김향섭 씨는 "시민들이 제3세계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업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거나 노동기준강화를 촉구하는 감시활동을 벌이는 등 다양한 방식의 시민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정진주 씨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도 70년대 국내에서 이뤄진 노동탄압을 똑같이 재현하고 있다"며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감시기구의 감시대상은 다국적기업과 정부, 국내기업이어야 하

며, 다국적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해 규제와 처벌이 가능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입원환자 지문, 방문채취

청주, 미입력자 후속조치 발표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사업과 관련, 청주시가 최근 입원요양자 등 전산미입력자에 대한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키로 하면서, 또다시 강제성 지문날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청주시는 지난달 22일 총 1만1천9백여명(관내 주민등록 대상자의 3%)에 이르는 화상자료(사진, 지문) 미입력자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청주시는 입원요양자 등 거동불능자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사진과 지문을 채취키로 했으며, 장기출타자는 통장과 협조 하에 사실조사와 최고·공고 절차를 거친 뒤 주민등록을 직권말소 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작업 진척에만 급급해 주민의 인권보호를 소홀히 한 발상"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는 "청주시의 계획에는 일선 공무원에 대한 인권보호 교육은 언급돼 있지 않다"며 "불이익의 가능성과 위압감 조성 등으로 인해 전산미입력자가 어쩔 수 없이 지문입력에 참여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점을 일선공무원들에게 분명하게 교육해야 하며, 단 한 사람도 지문입력을 강요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시청은 지난 9월 일선 구청과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려보내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화상입력 과정에서 무리하게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 국가보안법 존속시키려는 한나라당 규탄집회

- ◆ 일시: 11월 3일(오늘) 오전 11시
- ◆ 장소: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
- ◆ 문의: 김정희(02-741-5363/019-338-7409)

# 국회 앞 집회 · 쇠사슬 농성

## “국보법 철폐” 23만명 국회청원

“반민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연합 등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범국민연대회의)는 2일 낮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국회 투쟁을 선포했다.

이날 집회에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상임의장 등 각계 사회단체 대표와 1백 50여명의 사회단체회원들이 참가했다.

손호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대통령임을 자임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가 계속 증가하는 등 인권상황은 열악해지고 있다”며 “김 대통령이 인권대통령으로 거듭나고 사회가 민주화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을 부분개정 또는 대체입법시킬 것이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근수 전국연합 공동의장도 “현재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국가보안법 논의는 북을 염두에 두거나 국가안보를 위한 게 아니라 내년 총선을 위한 준비에 지나지 않다”며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나가면서 총력을 다해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집회에 이어 김기창 전국연합 인권부장 등 11명은 온몸에 쇠사슬을 묶은 후 국회의의 앞에 마련된 천막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범국민연대회의는 22만7천명의 서명이 담긴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범국민연대회의는 앞으로 대국회투쟁의 일환으로 국가보안법 관련 토론회를 오는 10일 개최할 계획이며 14일 열릴 민중대회에서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적극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 ◆ 99년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 ◆

2천년 총선을 앞두고 15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행정자치위원회 등 5개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인권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일목요연하게 묶었습니다. 이들 자료집은 복사비만으로 제공됩니다. 총 목차를 받고 싶으신 분은 사랑방 홈페이지의 '의견 및 게시판'란 (<http://www.iworld.net/~rights>)을 보시거나, 이메일 주소 또는 ID를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 2만6천원 (520쪽) /법제사법위 3만원 (618쪽) /보건복지위 4만원 (831쪽) /외무통일위 3만4천원 (686쪽) /환경노동위 4만3천원 (869쪽)

# <현장스케치> 유가협 농성 1년을 맞아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

“아들 딸 앞세운 어머니가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 거리로 나오긴 했는데 죽기 전에 특별법 제정되는 거 보는 건 다 틀린 일 같아.”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위로 금세라도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다.

지난해 11월 4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회장 배은심, 유가협) 회원 30여명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며 시작했던 천막농성은 한 해를 넘겨버렸고 마침내 사계절을 한 바퀴 돌고야 말았다.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농성을 시작하기도 꼬박 1년. 유가족들은 자식을 잃고 살아온 시간으로도 모자라 차가운 콘크리트 바다 위에 이불을 깔고 1년의 낮과 밤을 눈물로 지낸 것이다.

## 메아리 없는 외침 언제까지...

지난해 4월부터 유가협 회원들은 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벌였다. 그리고 그해 여름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및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한 후 5만2천9백여명의 국민서명을 첨부한 법 초안을 9월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수 차례에 걸친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자 면담. 그리고 또 수 차례에 걸친 삭발과 단식투쟁. 매번 치솟는 울음을 삼키며 다음엔 될 거라며 하루하루 버텨왔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안은 국회를 땀뚝고 있다.

“집에 못 들어간지도 2년째. 우리 집은 귀신이 사는 집이 돼버렸어. 정부가 바뀌면 세상도 바뀌고 우리 자식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세상이 바뀌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가봐. 법안은 통과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이런 어떻게 해야하는지 참 막막하기만 해. 5평 남짓한 천막 안에서 두꺼운 겨울잠바를 걸치고 앉아있던 배은심(고 이한열 씨 모친).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 끝에 배 씨가 다시 말문을 열었다. “4일 낚은 우리 유가협 회원들 다 불러놓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얘기할 참이네. 어차피 시작한 거라면 어떻게든 끝을 봐야지 이대로 물러설 수가 없지 않은가. 우리야 이제 다 산사람인데 이거라도 만들어놓고 가야지 좀 편하지 않겠는가”라고 농성 364일째란 팻말이 붙어 있는 여의도 유가협 천막농성장에 쓸쓸함이 감돌았다.

유가협은 회원들은 4일 농성 1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결의와 각오를 다질 계획이다. 메아리없는 이 외침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11월 4일(목)

제 148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 국보 개정 반대 한나라당 규탄

## 김용갑 의원 등 63명 ‘인권의 적’ 규정

한나라당 국회의원 63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는 물론 국민회의가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서도 결사반대를 외치자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는 3일 오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회원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김용갑 의원 등 한나라당 63인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승환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사무총장은 “국가보안법 개정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한나라당의 63적”이라며 “민족의 절반을 죄으로 규정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하지는 못할망정 국민회의가 제출한 합참기담의 국가보안법 개정안마저 반대하고 나선 이들의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의 백만호 정책기획차장도 “정형근 같이 독재정권시절에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도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조차 무시하면서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위해 뛰고 있다”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들을 낙선시켜 이들에 대한 준엄한 국민적, 역사적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집회참가자들은 한나라당 앞으로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군사독재 속에서 민주화를 가로막고 탄압해온 하수인들과 공안출신의 국회의원들, 부패한 관리와 타락한 언론인들이 정의의 투사인양 말쑥마다 인권을 들먹이며 국가보안법 개·폐 반대에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적 여망을 새 깎은 공세로 짓밟는 한나라당 극우 국회의원들을 인권의 적으로 간주해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회창 총재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이들 63인의 주장을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간주, ‘인권의 적’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규탄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한나라당 의원 63인의 이름을 한변씩 외치며 이들의 각성을 촉구했으며 항의서한을 한나라당에 전달, 국가보안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제시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63인은 지난 8월과 10월 25일 각각 국가보안법 개정예결사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시민사회로부터 집중적인 비난을 받아온 바 있다.

〈국가보안법 존치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63명 명단〉

## <인권하루소식> 합본 12호 발간

20세기 마지막 해 상반기 인권상황이 한 권의 책으로 묶였습니다.

◇ 기간: 1999년 1월부터 6월 (1281호부터 1401호)

◇ 가격: 1만원 ◇문의: 이창조 (☎ 741-5363)

강용식, 권영자, 권이현, 권철현, 김광원, 김기춘, 김동욱, 김명윤, 김영일, 김영준, 김영진, 김용갑, 김일윤, 김종하, 김진재, 김찬진, 김철, 김태호, 김호일, 나오연, 노기태, 박근혜, 박명환, 박성식,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우병, 박원홍, 백승홍, 변정일, 신경식, 신영국, 안택수, 양정규, 류홍수, 윤원중, 윤한도, 이강두, 이국현, 이규택, 이상배, 이상희, 이세기, 이윤성, 이운선, 이재창, 이해구, 이혜봉, 전석홍, 정문화, 정의화, 정창화, 정형근, 조응규, 조진형, 주진우, 하순봉, 허대범, 현경대, 황규선, 황성균, 황우여

## 국보 철폐 3백명 농성 돌입 전국에서 12일까지

출소한 양심수들과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3일 오전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정치수배자, 과거 고문조작사건의 피해자들, 보안관찰대상자와 양심수가족들을 포함한 3백여 명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위한 범국민농성단(단장 정연오)을 구성, 3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일까지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보장된 민중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은 물론 기득권세력의 정권안보에 악용되는 등 악명을 떨쳐왔다”며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보안법에 의해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성참가자들은 서울 명동성당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으며 각지역도 대전역, 부산역 등 11개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농성에 동참했다. 또한, 이들은 법무부 등에 국가보안법 운영 등에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 "당신의 결혼을 알리지 말라"

## 여성민우회등, 성차별적 구조조정 비판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와 이화여자 대학교 여성위원회 등 여성단체 회원 80여명은 3일 낮 12시 이화여대에서 '농협의 성차별적 구조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서대문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에서 정리집회와 포퍼민스를 가졌다.

이들은 '한 회사내 남성은 정규직으로 여성은 부정규직으로' 정식화되는 뚜렷한 이분화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노동연구원의 발표를 인용해 97년 대비 98년 직종에 따른 남녀고용율이 사무직의 경우 남자는 5.3% 증가했고 여성은 18.4%나 감소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예로 농협의 사례를 지적했다.

지난 1월 농협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사내부부 7백62쌍 중 여성의 명예퇴직을 강요, 퇴직자 중 여성이 91%인 6백88명에 이르게 했다. 농협은 구조조정 당시 신규채용을 앞섰다고 했지만, 이들 중 66%를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시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먹였던 농협은 지난해 372억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밝혀져 여성 노동자들을 정리하기 위해 기만한 것이라는 비난을 사게 되었다.

민우회는 "경영상의 정리해고를 이유로 사내부부에게 생활안정자라며 특히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퇴직강요는 타당하지 않다. 모든 사원들의 경제상태를 조사하고 정리해고의 대상이 선정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회사의 태도는 여성의 노동을 보조적 노동으로 여기는 차별적 편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결혼유무와 여성이라는 등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준에 의거해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농협 직원 김미숙씨와 김향아씨는 지난 4월 여성계와 함께 농협의 구조조정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 기소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 "특혜조항 삭제, 전면 개정" 국민행동, SOFA 공청회서 주장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신부, 국민행동)은 3일 오후 4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만규(43, 매항리미공군 폭음피해대책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50년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마을과 어장이 미군들의 폭격 연습으로 짓밟혀왔다"면서 "주한미공군만이 아니라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등지에서 출격해 폭격 연습을 하고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짓밟힌 생존권을 되찾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폭격장에 들어갈 것"이라며 비장한 심경을 밝혔다.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SOFA의 불평등한 조항들 때문에 미군 기지 내의 오염 실태도 미군기지 주변의 오염실태도 조사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SOFA 개정안에 미군의 환경보호 의무, 환경실태 조사 권리 보장, 원상회복 조항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희 서울지역 사무전문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도

"미군 기지내 용역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짓밟혀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면서 SOFA의 개정을 촉구했다.

발제에 나선 이장희교수(외국어대, 국제법)는 형사관할권 조항과 시설 기지 조항의 문제점들을 열거하고, "불평등한 SOFA 조항들을 과감히 개정토록 미국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한미방위조약을 포함하여 근본적인 전면개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장주영 변호사도 "민사청구권, 노무, 통관 등 조항에 관한 문제점 및 개정방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가로막는 불평등한 조항과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당한 특혜조항도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파업유도 수사팀 재구성 촉구 민변, 강원일 특별검사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창최영도, 민변)은 3일 최근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별검사의 내분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변은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특별검사제도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우려 "강원일 특별검사는 공안부 출신의 파견검사, 수사관들을 원대 복귀시키고, 시급하게 수사팀을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법무부, 검찰이 특별검사의 자료접촉 요청 등에 협조를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관련 국가기관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고, 만일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특별검사는 부득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한 점 의혹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 99년 국정감사 자료집 발간 ◆

2천년 총선을 앞두고 15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행정자치위원회 등 5개 주요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인권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일목요연하게 묶었습니다. 이들 자료집은 복사비만으로 제공됩니다. 총 목차를 받고 싶으신 분은 사랑방 홈페이지의 의견 및 게시판(http://www.iworld.net/~rights)을 보시거나, 이메일 주소 또는 ID를 알려 주십시오. 그러면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자치위 2만6천원(520쪽)/법제사법위 3만원(618쪽)/보건복지위 4만원(831쪽)/외무통일위 3만4천원(686쪽)/환경노동위 4만3천원(869쪽)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11월 5일(금)

제 149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30년만의 조출한 추모제

###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권재혁씨

사회주의자 권재혁 씨의 사망 30년을 맞아 4일 독립공원(옛 서대문 형무소 사형장)에서는 과거 동지들을 비롯해 각계열로들과 청년진보당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출한 추모제가 열렸다.

숙연한 분위기 가운데 고인의 약력이 소개됐고 사회자는 "당시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고인의 시신마저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 추모제 한번 지내지 못하다가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고인이 처참하게 죽어간 사형장에서 첫 추모제를 열게 됐다"며 추모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 씨는 지난 60년대 노동운동을 하며 전위당 건설을 준비하던 사회주의자로 공안당국에 의해 소위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의 수괴로 지목된 후 간첩누명을 쓰고 68년 구속돼 그해 11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당시 권 씨는 남한 변혁운동의 전략을 연구해 남조선 해방전략론이라는 문서를 작성했고 이를 동료들에게 배포한 바 있다. 권 씨는 혁명에 있어 북한과 남한의 사회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의 연계를 배제한 가운데 자주적이고 자생적인 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안당국은 68년 8월 통일혁명당 사건을 발표한 후

속된 공안분위기를 형성하고자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을 일으켰다.

평등세상 꿈꾼 사회주의자

이날 추모제에서 범민련의 김병선 씨는 "고인은 만석지기의 아들로 태어나 최고의 학벌을 수료하고 유학까지 다녀온 인텔리였지만 그것에 안주하지 않고 독재권력에 항거하며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을 전개한 살아있는 운동가였다"고 그를 회고했다.

같은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복역한 뒤 출소한 이을재(67) 씨 역시 "고인은 철저한 사회보장제도의 실현 등을 꿈꾸며 전위당 건설을 준비한 사람이었으나 당시 공안당국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다"며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나 아직도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반공법의 후에(국가보안법)와 당시 공안세력들이 버젓이 활보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가능하겠나"며 분개했다.

추모제를 준비한 청년진보당의 최혁 대표는 "아직 한국사회는 가족이 나서서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때라는 사실이 비통하다"며 "고인의 유

지를 받들어 국가보안법 등의 악법 철폐는 물론 소외받는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고문특별법' 제정 촉구 민가협, "배후 철저 색출"

민주주의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는 4일 오후 서울 탑골공원에서 304회 목요일집회를 열고 군사독재체제 하에서 발생한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은 "이근안에 대한 처벌은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고문 없는 사회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고문을 지시하고 이근안을 비호한 모든 배후세력도 가려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86년 반제청년동맹사건으로 끌려가 경기도경 대공본실에서 이근안에게 관절활기 등의 고문을 당했다는 박충렬 씨는 "석방직후인 89년 1월 이근안을 고소했으나 93년 공소시효를 넘겨버릴 때까지 검찰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아 결국 제정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됐다"고 분개했다. 박 씨는 "고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고 특별법을 제정해 과거 발생했던 고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전면적 진상조사를 위한 국가기구의 설치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고문범죄행위 등에 관한 진상규명을 비롯해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 치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 제4회 인권영화제 후원을 기다립니다.

- 일반후원회원 : 후원회비 1만원 (기증 - 해설책자, 기념품)
- 특별후원회원 : 후원회비 10만원 (해설책자, 쇼아, 칠레전투 등)
- 담당 : 인권운동사랑방 김정아, 남수영(문의: 02-741-2407)
- 입금계좌 : 국민 822-21-0276-824 서준식
- 한빛 112-07-226091 김정아-인권영화제

# 외국인노동자도 동등하게

## 일본 및 독일의 외국인노동자운동

지난 3일 종로성당 3층에서 '외국인 노동자 운동의 전망과 노조건설'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본과 독일의 외국인노동자 운동 사례가 소개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본지 11월 2일자 참조>

### 일본, 누구나 노조 가입

일본의 경우 약 70만에 이르는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가 건설·항만·생산직 등에 분포돼 있다. 이들은 쉬는 날 없이 근무하면서도 일본인 노동자 임금의 60%를 받으며, 산업제해·임금체불·해고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반면 일본에서는 외국인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으며, 요사이 이들만의 독자노조 움직임도 있다. 카나가와현의 카나가와시티유니온(일종의 지역노조)의 경우 현재 580여명의 조합원 가운데 외국인의 비율이 70%에 육박한다. 카나가와시티유니온의 무라야마 사도시 씨는 "외국인노동자운

동이 활성화된 것은 90년대 초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시민노동단체의 지속적인 항의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당시 일본정부는 노동부가 외국인노동자들의 상담을 접수받을 경우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고 있었는데(현재 우리나라처럼) 시민노동단체의 항의 때문에 1년만에 그러한 제도를 없앴다.

### 독일, 3년 체류자 영구체류 인정

독일의 경우, 50년대부터 국가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도입해 왔으며, 이들에 대해서 자국노동자에 준하는 사회보장대우를 해왔다고 한다. 여기에는 독일노동자들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한 것도 큰 역할을 차지한 것으로 설명된다.

특히 90년대에 들어 독일정부는 사회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법'을 제정해 3년간 체류한 외국인노동자가 직업이 있을 경우 영구체류권을 주고,

15년간 체류한 사람에게는 시민권을 주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윤우현 정책국장은 "외국인노동자라는 호칭은 이들의 귀화를 전제로 한 것으로, 정부의 개념을 포함한 이주노동자로 불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과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은 "외국인노동자를 지역별 노조나 산업별, 업종별 노조에 가입토록해 노조 안에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보법 반대투쟁 속보◎

#### 민교협 철야농성 돌입

민주회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손호철 외 4명, 민교협)는 4일 오전 11시 민교협 사무실에서 4일부터 6일까지 '국가보안법의 전면철폐를 촉구하는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철야농성에는 민교협의 집행부와 회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또한 민교협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지지하는 교수 1064명의 서명에 이어 3천여명의 서명을 목표로 제2차 전국교수서명운동에 돌입했으며, 강력한 실천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63적에 질의서 보내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국민연대)는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63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 국회의원 63명은 지난 8월과 10월 '국보법 개정 결사 반대'라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국민연대는 질의서에서 △어떠한 형태의 개정에도 반대하는지 △인권침해 시비를 없애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주는 개정에도 반대하는지 △최소한 7조 개정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또한 국민연대는 '63적에게 항의메일 보내기운동'을 시작했다.

<항의메일 접수>

http://freedom.jinbo.net  
rights@chollian.net

# 만화사랑방

이동수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11월 6일(토)

제 149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 “준법서약서도 폐지해야”

유엔인권이사회가 국가보안법 7조의 긴급한 개정은 물론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하고 나섰다.

유엔인권이사회는 5일 한국 정부가 제출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 조약) 2차 보고서(91년 1월-95년 12월)에 대한 심의결과를 발표해 "남북대치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한국정부는 분단으로부터 초래하는 초법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사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은 국제조약과 양립할 수 없는 구금, 조사, 특정한 형벌 등과 관련한 특별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했다.

또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해 "7조의 반국가단체 찬양은 그 처벌범위가 불

합리하게 광범위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7조가 자유권조약 19조(의사표현의 자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의사표현이 우연히 이적단체의 주장과 일치하게 되거나 또는 그 단체에 대한 동정심의 표현에 이른 경우까지 처벌하고 있어 규약에서 인정하는 제한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조약에 부합하도록 7조를 긴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준법서약, 석방조건으로 차별적용

나아가 이사회는 준법서약서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사회는 "사상전향제의 폐지는 환영할 일이나 이것이 준법서약제로 대체돼 석방의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수인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조약에 반하는 법을 따르겠다는 서약을 요구하는 준법서약서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로 이번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를 주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는 큰 힘을 얻게 된 반면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미루고 있는 정부측은 큰 압력을 받게 됐다. <관련기사 2면>

## 색깔론, 이대론 안된다

### 민교협, 영남권 집회 중단 촉구

4일 열린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정형근(한나라당)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거론하며 색깔론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4일부터 농성에 돌입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손호철, 민교협)는 5일 성명을 발표해 정형근 의원과 한나라당이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시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교협은 "민교협을 비롯한 민주적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이 반인륜적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촉구하고 있으며 특히 서경원 전의원 등이 정의원으로 부터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해 본인의 자질이 문제시되고 있는 이때 반성은 하지 못할망정 시대착오적이고 반개혁적인 망발을 일삼고 있다"며 "정의원의 발언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교협은 또 한나라당의 집회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뉴밀레니엄의 정당'을 자처하기 위해서는 문제만 생기면 부산 및 영남권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지역주위를 선동해 온 직태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행사와 동정

- ◇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시국대토론회  
 때 : 11월 6일 오후 5      장소 :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  
 주최 : 민권 공대위02-3142-8650
- ◇ 민중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주거권 실현 국민대회  
 때 : 11월 7일 오후 2시      장소 : 종묘공원  
 주최 :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02-3673-3031)
- ◇ 지역사회 장애인 보건·의료 서비스의 비람직한 접근방안 워크숍  
 때 : 11월 13일 오후 3시      장소 : 교통회관 1층 중강당  
 주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02-521-5364)
- ◇ "전세계 노동운동의 발전을 한눈에"-'99 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때 : 11월 15일-21일      장소 : 숭실대, 서울대 연건캠퍼스  
 주최 : '99 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조직위원회(02-7744-551)

#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5일 유엔인권이사회가 발표한 한국 정부의 자유권조약 2차 보고서 심의결과는 국가보안법 문제 등을 비롯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문제를 23개 조항으로 나누어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 대표적인 인권 문제로 거론되는 양심수 문제와 보안관찰법 등에 대한 지적은 제외됐다. 이와관련해 한국정부가 보고서와 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사회는 "1차 보고서 심의당시 규약의 실제이행에 관한 충분한 정보제공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보고서 역시 이러한 점을 보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아가 "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제기한 여러 질문에 대해 한국정부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양심수문제와 보안관찰 문제가 누락된 원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이사회는 총평을 통해 "한국정부가 조약이행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이사회에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사회가 한국의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중요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도·감청에 대한 지적이다. 이사회는 전화 도청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도·감청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집회시위의 자유와 관련해 이사회는 정부에 의해 주요 도로에서 집회를 가질 권리가 절대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자유권조약에서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또 구금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구금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가 조속히 설치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고문과 관련해서도 고문 등 가혹행위에 대한 고소사건 수에 비해 공무원이 처벌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검찰과 법원이 피고인과 공범의 자백에 광범위하게 의존하는 것이 결국 수사공무원에 의한 고문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사회는 "특히 호주제 등이 여성의

종속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부간의 강간이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점 △강간 범죄의 경우 여성이 저항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강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했을 경우 가해자의 범죄혐의가 소멸된다는 점 등을 비판했다. 여성고용과 관련한 불평등한 기회제공과 남녀간의 소득 불균형도 지적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이사회는 피의자 구금시 지체없이 관사를 대면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의 마련,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을 방해하는 제약의 해소 등을 권고했다.

##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끌어올려야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단체 연대회의는 5일 오후 3시 서울대학교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회의'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회에 상정돼 있는 여당과 민간단체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 문제점과 의문사 진상규명운동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김창록(부산대) 교수는 "의문사는 국가권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한 헌법상 침해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배상까지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연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현 법안의 경우 의문사 규정이 한정돼 있는 것을 비롯해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법에 준해 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 강제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주는 한편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며 "조사기간도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연장해야 하고, 자수나 기타 방법으로 진상조사에 도움을 준 가해자는 사면이나 감형해야 하고 대통령의 위원임명권을 견제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춘(성공회대) 교수는 "의문사는 그 내용에 따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으로는 독재시절 민주화운동 과정의 의문사를, 제주4.3이나 진보정당운동 등 전이나 국가위기 시기의 대규모 학살은 여론작업을 통해 국민적 인식을 높여나간 후 접근해야 하며, 공권력에 의한 고문, 구타 등으로 사망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법의 제정을 계기로 민주화 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소한 의문사의 책임자를 밝혀내 이들이 국가의 요직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정형근처럼 고문현의를 받는 인물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벌이는 등 구체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의문사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죽음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진정요구는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와 친인척으로 규정하고 있다. 진상규명위원회의 경우 대통령이 9명의 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진상조사기간은 6개월에서 최장 12개월로 조사 후 혐의가 발견된 사람에 한해서만 공소시효가 정지되며 이때 검사만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11월 9일(화)

제 1492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정부, 파업노동자 '폭력배' 매도

### 유엔인권이사회에 허위 보고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참가해 노동자들의 파업을 일방적으로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엔인권이사회 1791차 회의자료에 따르면, 정부 대표단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정부 2차 보고서 심의에 참가해 한국상황을 보고하면서 "정부노력에도 불구하고 98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 고통을 받은 노동자들은 비조합원과 회사 관리자를 쇠괴이프로 구타하고 공장시설을 파괴하는 등 폭력적으로 행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불법 폭력 행위를 자행한 노동자들에 대해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신중하게 법을 집행했으며 단지 적극 가담자와 지도자만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파업을 조직한 노조 지도자를 구속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직 노조 지도자가 구속되어 있는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과 다른 노동법에 따라 노조 결성과 가입, 파업권에 대한 어떤 제한이 존재하는가?"라는 이사회 의장 미디어 씨의 질문에는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한국정부가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제대로 된 심의가 어려웠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러한 정부측 행위와 관련,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발표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 반대하다 구속된 노동자들을 조직 폭력배쯤으로 매도하고, 현 정권출범이후 3백여 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고의로 숨겨 이사회에 보고했다"며 △정부보고 내용의 공개와 관련하여 문책 △허위보고에 대한 사과 등을 요

구했다.

◆ 자료: 유엔인권이사회 홈페이지 http://www.unhchr.ch

## 노동부, 장애인고용 외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고용의 의무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 장애인 고용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고등검찰청의 김동주 검사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김정열)가 기획예산처 등 장애인 고용이 0%인 6개 정부부처 장애를 직무유기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법 시행령 제34조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2%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추상적 의무일 뿐 구체적 행위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청과 해양검찰청은 "공안지령기구"란 이유로, 국무총리비서실은 "보좌기관"이란 이유로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개 부처장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장애인고용을 책임지는 정부부처도 법의 강제력을 부인하고 나섰다. 노동부 장애인고용과의 박종화 사무관은 "검찰의 결정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부처가 언젠가는 알아서 장애인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지 않겠느냐"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8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박옥순 정책부장은 "법을 만든 장본인이 법집행에 의지가 없고 이를 강제해야할 사법부 역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마당에 어떤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겠느냐"며 분개했다.

##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 단식 29일 ... 전국종교인대회 열려

8일 전북종교인협의회(회장 한상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전북종교인 40일 단식기도회'를 시작한지 29일째를 맞아 오후 2시 전주교백교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종교인 성직자 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는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이 공동주최했다.

### 청년단체들, 삭발식 가저

'민족의 자주통일과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한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한 청년연석회의(청년연석회의)' 소속 회원들은 8일 낮 12시 국회 앞에서 국보법 철폐를 위한 삭발투쟁식을 가졌다. 이날 삭발에는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 회장 전상봉 씨 등 7명이 참여했으며, 청년연석회의는 오는 14일 낮 12시 여의도둔치에서 한국청년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인 권  
시 평

### 사실은 사실대로

강내희 중앙대 교수(영문학/문화연구)

우리사회에서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는 것 같다. 사실을 사실이라 하는 것만큼 당연한 일도 없을 듯하나 사실이 사실로 판정나서는 안 되는 일이 많다 보면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것 자체가 모험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은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상을 파헤친다며 나서고 있는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과정을 지켜보면서부터다. 검찰이 조폐공사의 파업을 고의로 유도했다는 건 알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노사간 갈등이 생기면 공안세력이 대책회의를 갖곤 했다는 것이나, 탄압의 빌미로 삼기 위해 일부러 불법을 유도하는 것이 그들의 관행이라는 것도 대개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길이 별로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육하원칙을 따라야 하는 사실 구성의 형식적 요건 때문에 사실임을 알면서도 사실로 확정할 수가 없는 일이 허다했다.

조폐공사 파업 유도가 공개된 것은 진형구 전 검찰 공안부장 때문이다. 그가 낫술 몇 잔에 자신의 무용담을 자랑삼아 말한 '실수'를 지지르지 않았다면 편한 사실을 사실이라 할 수 없었을 것이고, 특검제 도입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편한 사실도 연루자의 실수가 나와야만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니 사실을 알리는 일은 늘 힘이 든다.

이번에도 어렵사리 특별검사제 도입까지는 이뤄냈지만 강원일 특별검사가 현직 검사를 수사팀에 끌어들이고 검찰 공안부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일이 꼬이고 있다. 특별검사보 몇 명이 해임되고 사퇴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 한국에서는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 도입과 관계없이 사실을 막는 사회적 장치와 세력이 계속 작동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우리사회는 자신의 정체를, 진실을 밝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과거 반민족 행위를 숨겨야만 하는 친일파, 정경 유착을 은폐해야 하는 정치인과 자본가 등 사실을 숨기고 왜곡해야 권력과 이익을 얻는 세력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을 사실로 말할 수 없는 사회는 진보를 기대할 수 없다. 인간적 삶의 여유는 해석의 여지와 자유에서 나온다. 동일한 사물을 보고서도 다른 입장을 정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다양한 삶의 가능성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해석의 가능성은 사실의 확보에서 비롯된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해석의 자유가 성립할 수 없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 것은 해석의 자유와 인간적 삶의 확보를 위함이다.

### 주간인권흐름

(99년 10월 31일-11월 7일)

1. 이번에도 판전 피울까?  
유엔인권이사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관련 한국정부의 보고서를 심사한 뒤,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와 7조의 즉시 개정" 촉구.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태도에 관심 쏠려 (11/5)

2. 안에서 세는 바가지 바깥에 나간들...  
한덕수 통상본부장, 방글라데시 무역장관과 만나 "수출가공지역의 노조활동은 투자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고용에도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말해 (10/31)

3. 믿을 수 없는 먹거리  
한국소비자보호원, 시판중인 두부의 82%가 유전자조작 콩을 사용했다고 밝혀 / 유전자조작 농산물 사용여부 표시 의무화 요구 이어져 (11/3)

4. 메아리없는 외침 1년  
민주화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시작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소속 회원들의 여의도 천막농성 1년 맞아 (11/4)

5. 니들은 실수했지만, 피해자들은...  
울 상반기 형사피의자에 대한 무죄율이 1십의 경우 지난해 0.07%에서 0.1%로, 2십의 경우 0.8%에서 0.99%로 크게 늘어나 / 무죄 확정 판결에 따른 보상금도 지난해에 비해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11/7)

6. 이주노동자 "단결만이 살길"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주최 토론회, 국내 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현실, 개선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운동이 벌어져야 한다는 주장 제기 (11/3)

7. 고문 배후, 안기부!  
(MBC 뉴스) 이근안의 동료 경찰들, 김근태 사건 등 80년대 고문수사는 안기부에 의해 지시를 받았으며, 청와대 등 윗선에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말해 (11/7)

8. 또 '녀'였군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공산당이 쓰는 전형적 선전선동이며, 빨치산 수법"이라며 특유의 색깔론 제기 (11/4)

9.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반대 투쟁  
대학교수 1천여명 국보법 폐지 촉구 서명 (11/1) / 범국민연대회의, "국보법 철폐" 23만명 서명 국회에 전달 (11/2) / 국민연대, "국보법 존치" 주장하는 한나라당 의원 63명 규탄 집회 (11/3)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11월 10일(수)

제 1493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영세사업장 여성인권 사각

### 장시간 노동에 4대보험 가입률 30% 이하

영세사업장의 여성노동자들은 하루 최대 10시간 이상 일하고 있지만, 사업주들의 4대보험 가입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한여노협)는 지난 10월 서울 안산 등 전국 7개 지역 4인 이하 사업장 여성노동자 2백14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과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대상은 주로 판매직과 비생산직 종사자로 정규직은 1백77명, 비정규직은 37명이었다.

조사결과,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53.9시간씩 노동하고 있었으며, 판매직 노동자들은 하루평균 10시간 이상(주당 61.1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평균 임금은 66만9천원에 불과했고,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역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13.2%에 불과했고 의료보험은 19%, 국민연금 19.2%, 고용보험은 32.4%만이 가입하고 있다.

근기법 무시...비정규직 더 열악

또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인권보호 조항마저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따라서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들은 휴

가사용(70.7%)을 비롯해 임금인상(67%)과 4대 사회보험 적용(45.9%), 노동시간단축(33.7%) 등을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훨씬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57만원으로 정규직 노동자의 72.2%에 불과하고 해고를 당할 때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휴식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조사대상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출산관련 휴가를 주는 사업장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한여노협의 박진영 조사부장은 "98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여성노동자의 71%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영세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정부의 홍보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와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여성노동자의 '법적 권리 확보'를 위해 11일부터 전국 7개 지부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캠페인과 불법사업체 고발, 노동부의 행정지도 촉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준수여부(%)	정규직(%)	비정규직(%)
해고 예고	33.3	36.9	16.2
휴게 시간	38.8	41.2	27.0
요양 보상	27.2	30.7	10.8
건강 검진	15.2		
유급 휴일	55.5	58	43.2
출산 휴가	7.6	9.2	0
남녀 차별	발생률 16.6	발생률 15.4	발생률 21.6

## 재판정 사상시비 계속돼 법원, "복 찬양하면 비공개 재판"

개인의 사상을 이유로 한 부당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월 법원이 국제사회주의자들 소속 회원의 법정진술권을 제한한 데 이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진술 내용 중 복찬을 찬양할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9일 서울지방법원 합의23부 김대휘 부장판사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하영욱(36) 씨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의 변론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으나 진술내용 가운데 공소된 사실 이외에 새로이 복을 찬양하거나 사람들을 선동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 씨의 모두진술을 듣기 위해 오는 18일 2시 서울지법 319호 법정에서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 폭행검사 무혐의 처리 인권운동사랑방 항고 방침

피의자를 폭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고발된 현직 검사 등 검찰관련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지난 10월 안희권(전 서울지검 소속) 검사와 김내인(전 안희권 검사실 계장) 씨 등 검찰 공무원 3인을 피의자 김유복 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항고할 방침이다.

한편 김 씨 역시 지난 8월 안 검사 등을 독지폭행혐의로 고소한 바 있으나 검찰은 아직 기소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았다. <관련기사·10월 2일자>

# “비리 시설장 영구 퇴출해야”

## 10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 개정 제안

사회복지시설 내 강제불입 사건과 관련해 한국여성단체 연합 등 10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8일 오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이 사건에 대한 △국무총리 공식사과 △재발방지약속 △정부합동 진상조사 실시 △피해자 국가 배상 등을 요구했다. 또 강제불입시설을 비롯한 사회복지 시설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장애아동 부양을 위한 가정지원제도 설립 △장애이복지대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 △사회복지법 개정 △사회복지시설 예산의 현실화 △시설개선 전담기구 운영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가 밝힌 사회복지법 개정 골자는 아래와 같다.

◎시설문제의 핵심은 시설 설립자 및 그 지인으로 구성된 이사진들에 의해 시설이 사유화돼 운영된다는 것이다. 또한 설립자가 시설내 비리로 해임된 경우에도 기존 이사들을 통해 시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영리성을 내포한 '사회복지사업법'이라는 명칭을 공적인 시설의 운영, 관리라는 관점에서 '사회복지시설운영등에관한법률'로 개정하는 한편 법안도 시설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한다.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운영위원회 설치를 강제 규정으로 바꿔 시설 운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사회 구성은 현재 설립자 본인과 그 지인에 의해 이 사회의 3분의 1이하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있는 조항을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을 적용해 5분의 1하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임원을 선임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시설운영과정에서 임원의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원 자격을 영구적으로 취소해 시설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시설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이사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전원 이사자격 승인을 취소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 관선이사들로 임시이사를 구성,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야한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 22조(취임승인취소)와 26조(설립허가 취소)를 강제규정으로 바꿔 취임승인과 설립허가에 대한 취소가 가능해야한다.

◎시설내 인권유린 행위는 "시설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입소 및 퇴소거부, 강제노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를 포괄해 소정의 폭력행위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라는 내용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 해산시 일부 시설제별 인사는 잔여재산을 또 다른 복지법인에 귀속할 위험이 있으므로 해산법인의 잔여 재산은 국고로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특별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하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귀속되도록 해야한다.

# 민중대회, 오는 14일 여의도서

## 각계 민중 4만명 결집 예상

노동자, 농민 등 각계 민중들의 생존권 요구와 민주개혁 요구를 집약시키는 99민중대회가 오는 14일 여의도공원에 열린다.

"생존권 사수·경제주권 수호! 국가보안법 폐지! 노동시간단축·농기부채 해결!"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민중대회에는 노동자·농민·빈민·청년·학생·종교인 등 각계에서 4만명의 참가를 목표로 준비되고 있으며, 각계인사 4천여 명을 대회 준비위원으로 조직할 계획이다. 민중대회 준비위원회는 이번 민중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12월 12일 제2차 민중대회를 치를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민중연대투쟁을 위한 전선조직을 제편·강화한다는 계획이다. 99민중대회는 각계 민중들이 총집결하는 대회인 만큼 우리사회의 인권·민주개혁 과제가 총체적으로 제기되며, 대회 준비위원회는 핵심 요구안을 11개로 정리했다.

### <민중 11대 요구안>

- ◇정리해고 중단, 주40시간제 실시, 고용안정 보장!
- ◇농기부채 해결, 저농축산물 가격정책 철폐, 농업제해 보상법 제정!
- ◇빈민탄압 중단, 주거권 및 노점상 합법화 보장!
- ◇국가보안법 철폐, 범민련·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및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 ◇공기업의 무분별한 민영화 및 해외매각 중단, 한미·한일투자협정 및 WTO협정 중단, 경제주권 수호!
- ◇경제파탄 재벌총수·비리 정치인·관료 처벌, 부정축재재산 환수!
-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철폐, 교육제정 6% 확보를 통한 교육의 공공성 보장!
- ◇의보통합 즉각실시, 산업재해 근절, 민중건강권 보장!
- ◇방송개혁 언론개혁 단행, 공정보도 보장!
- ◇주한미군 양민학살 사과·배상, 한미행정협정 개정!
- ◇여성노동력 착취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중단, 여성의 고용·임금차별 중단!

인권하루소식은 내일부터 사흘간 민중 11대 요구안에 대한 해설을 연재합니다.

### 인권하루소식 합본 12호 판매

새 천년을 앞둔 99년 상반기(99년 1월-6월)의 한국 인권현실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인권하루소식 합본 12호가 나왔습니다.

구입문의: 02-741-5363 / 가격: 1만원 (우송료 별도)

# 인권하루소식

##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11월 11일(목)

제 1494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학습지교사, “우리도 노동자”

## 학습지 업계사상 최초로 노조 설립

학습지 업계 사상 최초로 학습지 교사들의 노조가 탄생할 전망이다.

(주) 제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은 지난 8일 「제능교육교사노동조합」을 설립하고, 9일 서울 중부노동사무소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학습지 교사들이 비정규직 직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학습지 교사의 정규직화는 물론 근로조건을 바로잡고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은 수나마 노조를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은 모두 비정규직 사원인데 이는 사용자가 경제적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습지 교사들은 연월차 휴가는 물론, 생리휴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산재·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규정화된 출퇴근과 사용자측에 의한 업무의 지시 등의 관계를 충족할 경우 이들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어, 정규화된 출퇴근은 물론 사용자의 지시를 받는 학습지 교사들 역시 노동자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된 김수복 씨는 "교사들이 아파서 일을 못하거나 회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회원이 줄어들 경우에도 이에 따른 손실은 교사들이 부담하게 돼있다"며 "제대로 된 노동환경도 보장하지 못하는 사업계약은 현대판 노비문서"라고 주장했다. 또 "회사가 노조설립을 결사반대하고 있어 해고 등의 탄압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기위해 이 절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최근 노동부에서는 비정규직 직원인 골프장 캐디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린 바 있으나 사법부는 비정규직

직원의 노조설립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학습지 교사들의 노조설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10월 말부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근절과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규직원들의 제능교육노조(위원장 손미승)는 "교사들의 노조가 제2의 전교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교사들과 연대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투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본지 10월 27일자>

##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 1천만명 넘어 UNDP·참여연대, 외환위기 이후 빈곤실태 점검

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 빈곤실태를 점검하는 민간단체의 종합적인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유엔개발계획(UNDP)과 참여연대는 10일 서울대 컨벤션센터에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감시시스템'이라는 주제로 공동 포럼을 열었다.

류정순(가정학, 상명대교사)씨는 "월소득이 23만 4천원 이하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국의 빈곤율은 18.8%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빈곤층은 무려 1천만명이 넘게 된다. 정건화(한신대, 경제학)교수는 "총소득의 경우 96년 하위 20%의 소득이 상위 20%의 30.5%였으나, 99년엔 17.4%로 격차가 두 배 가까이 확대되었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구주 실업자 78.4%가 실업 이전에 생산적 노동자였으며 외환위기에 대한 처방책으로 도입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빈곤의 심화, 확대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빈곤계층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검토한 허신(순천향대, 사회복지학)교수는 "정부 실업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업자는 단 13.5%에 불과하고, 빈곤율이 20%에 육박함에도 전 인구의 4%만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 정부의 빈곤대책에 여전히 광범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은 빈곤퇴치 대책으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강력한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들었으며, 우선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예산의 확보를 꼽았다.

참여연대는 UNDP의 재정 지원을 받아 이 보고서를 11월말까지 수정, 보완하여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출판하게 된다. 빈곤퇴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UNDP는 98년에도 「빈곤퇴치:한국의 경험과 교훈」이라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한편, 포럼 참가자들은 정부의 불충분한 통계자료에 치중하여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 '빈곤감시 시스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된 점, 빈곤퇴치를 위한 민간의 전략이 제시되지 못한 점등의 한계를 지적했다.

###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① 노·농·빈, 생존을 건 요구

99민중대회의 11대 요구안 가운데 머리를 차지하는 것은 역시 민중생존권 요구들이다(관련기사 본지 11/10일).

△정리해고 중단, 주40시간 노동제, 고용안정 △농가부채 해결, 저농축산물 가격정책 철폐,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철거민 주거권 보장, 노점상 합법화 등 노·농·빈의 오랜 요구사항들이 올해도 여전히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된다.

<자료제공 - 민중대회 준비위원회>

####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요구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김영삼 정부는 농업 시설현대화와 규모화라는 명분 아래 30-5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자금을 투자했다. 그러나 UR협상 실패에 따른 무차별적인 수입개방과 저농축산물 가격정책, 그리고 IMF 사태로 인한 농자재 값의 폭등과 소비감소 등은 농촌 사회를 붕괴직전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 현재 농가당 수익률은 5% 정도인데 반해, 대출이자율은 14%대에 달함으로써 부채를 갚지 못하고 파산하는 농가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농가부채에 의한 연쇄파산 현상은 농업생존의 중단과 농업 생산기반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돼 결국 농촌사회의 복구를 위해서는 농가부채의 해결이 필수적인 과제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연대보증피해 농민에 대한 특례조치 △연체이자 탕감 △원금 및 이자상환의 5년 유예 및 장기저리자금으로의 전환 △농가부채특별법의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농가부채와 관련해 농업제역시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한 농업제역은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상실시키고 투자비용을 날려버리며, 농사를 짓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그러나, 현행 농어업제해대책법은 제해구조지원의 미비한 대책에 불과해 실제로 지난 8월 태풍피해를 입은 거

창의 한 농민은 농약대금으로 '5백원'을 수령하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에 농민들은 농업제역으로 인한 소득 손실의 보상과 재생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농업재해보상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 정리해고 중단, 주 40시간 노동

정부는 "99년 9월 현재 실업률이 4.8%를 기록하고 실업자수가 1백6만여 명으로 줄어드는 등, 실업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엔 구직을 포기한 실업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층,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는 일용노동자들의 존재가 빠져 있다. 특히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이미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고용불안 상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소득구조 불평등의 심화 △근로조건 악화 △노동자의 빈곤화 등 부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민중진영의 판단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리해고의 중단은 노동자들의 사활을 건 요구다.

또, 99년 상반기 10인 이상 상용노동자의 노동시간 평균이 주 47.1시간에 달하는 등 장시간노동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장시간노동은 산업제역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산재발생률을 줄이고, 일

자리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 40시간 노동제(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현행 주 12시간 인 초과근로 제한규정을 주 7시간으로 축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실업자 노조가입 인정 및 공무원 노조 인정 △노조 전일자 임금 지급 금지조항 및 파업제한 조항 철폐 △산업기술연수생 제도 폐지 및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노동법 전면적용 등이 노동계의 주요 요구사항이다.

#### 순환식 개발에 따른 선대책 후철거

김대중 정권 하에서도 강제철거와 철거민에 대한 폭력사태는 계속되고 있다. 98년 도원동 강제철거를 비롯해, 울 들어서도 수원 권선4지구, 구리시 최촌마을, 서울 송인동 공간마을, 방배동 등지에서 이주대책없는 강제철거가 잇따랐다. 이에 철거민들은 △민간주도의 주택개발사업을 국가가 주도할 것 △개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공영구임대주택의 건립 △순환식 계획개발을 통한 '선대책 후철거' 정책의 시행을 대안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울 7월 대전에서 노점상 율창영 씨가 분신하는 등 노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은 노점상들의 저항을 계속 불러왔다. 지금도 부산과 울산에서는 야시안게임 개최를 앞두고 환경미화라는 명목 아래 강제철거와 노점단속이 진행중이다. 노점상에 대한 정책적 발상의 전환과 이에 근거한 노점의 합법화가 대다수 빈민들의 요구이다.

### 국보법 7조 또 다시 남용 논란

광운대생 4명 구속, 농활자료집이 이적표현물로 둔갑

국보보안법 제 7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구성)에 의한 구속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일 경찰청 흥제동 대공분실 형사들은 김기호(97학번, 현 전기공학과 학생회장, 공대 학생회장으로 입후보) 씨를 비롯한 광운대생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해 이중 4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이들이 97년 98년 해방광운자주대회를 건설해 북을 찬양고무하고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내놓은 증거자료는 97년도에 만들어진 농활자료집 등이어서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경찰의 연행은 대학선거에서 한총련 계열의 당선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11월 12일(금)

제 1495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 일하러 왔다가 성노예 생활

### 국내 외국인여성 인권실태 심각

한국 클럽에서 일하는 외국인여성의 대다수가 율라행위를 강요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하루 12시간의 노동과 과도한 벌금부과, 봉급체납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대표 김윤옥, 한교여연)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송탄, 동두천, 의정부, 군산, 부산 등 5개 지역 클럽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 2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오늘 기독교회에서 '성산업으로 유입된 외국인여성 현장 실태조사 보고회'를 통해 발표한다.

한교여연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여성의 대부분은 자국내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현지 외국인승출회사의 주선을 통해 입국한다. 그러나 이들은 당초 서비스직에 응모해 입국한 것과 달리 본인 의사와

는 무관하게 클럽에서 춤을 추는 일을 강요받고 매일 12시간 이상의 노동에 시달린다. 한달 월급은 평균 2백50달러(30만원) 정도. 그나마 처음 3개월간은 알선료, 비자 및 수속비 명목으로 월급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한 율라행위까지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클럽 주인은 이들이 도주할 것을 우려해 한 달에 한번의 휴가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이들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3천달러(3백60만원)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인여성들은 사실상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필리핀 여성 P씨(23세)는 "처음에 들어간 클럽에서 손님과 마주보면서 무릎에 걸터앉아 춤을 출 것을 강요당했다"며 "만약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당장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다"고 밝혔다.

한교여연의 고동실 간사는 "대부분의 외국인여성들이 매월 6백에서 8백달러(70-90만원)의 월급과 한달 2회 휴가 등을 근로조건으로 알고 한국에 들어오나 이는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뿐더러 이들의 생활은 매우 비참한 형편"이라고 밝혔다. 또한 "작년 한해 동안 입국한 외국인여성만 2천여 명에 달해 외국인여성들의 인권침해 상황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인권단체나 정부의 외면 속에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고문진상규명위 설치하라"

고문피해자 기자회견

고문피해자들이 고문수사관에 대한 형사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방양균, 박동운, 조상록 씨 등 광주·전남지역 고문피해자 6명은 10일 오후 광주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문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와 고문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에 대한 민국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정권은 수십년 동안 고문에 의한 강제 진술로 용공사건을 조작해 많은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었다"며 "모든 고문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기관의 고문 및 조작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고문 국회의원 정청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대표 서경원, 시민모임)은 13일 오전 10시 한나라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제2의 이근안' 정청근의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할 계획이다.

### <인터뷰 자료> 성노예 취급받는 외국인여성들

◎ 필리핀 여성 Q씨(22세)

"웨이츄레스로 일하는 줄 알고 왔는데 계속 춤만 추고 있다. 남들보다 유스를 적게 파는 날은 무지하게 욕을 얻어먹고 별로 그날 밤 계속 설거지를 해야한다. 계약서상으로는 한 달에 2번 휴일이 있지만 지난 6개월 동안 한 번도 쉬어본 일이 없다. 한번은 한 미군이 유스 한잔을 시켜 톨으로 오라고 해 갔더니 바지지퍼를 내리고는 오럴섹스를 요구했다. 외국인 여성이 일하는 클럽에서는 매매춘이 이뤄지고 있으며 화대 중 1/4가 업주에게 배당된다."

◎ 필리핀 여성 L씨(25세)

"춤을 춘다는 것을 알았지만 웃을 벗는다는 것은 몰랐다. 한 친구가 촛불쇼를 연습하다가 심한 화상을 입었는데 가르치는 한국 남성이 '왜 울어, 쇼하기 싫으면 말해'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말하지 못했다. 그러면 큰 일이 난다. 아줌마에게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했지만 아줌마는 무섭게 화를 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다."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②

“공기업 민영화 · 투자협정 중단”

99민중대회의 11대 요구안에서 주목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공기업 민영화 및 국제투자협정 논의 중단” 요구다. 이는 현재 민중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향후 민중들의 삶 전체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국민생존권을 팔아먹다니!

현재 ‘공기업의 민영화(해의매각)’ 문제가 가장 첨예한 대립을 불러오고 있는 분야는 전력산업이다.

정부는 방만한 경영의 효율화와 외자유치를 할 수 있다는 논리 아래 한전 등 국내 전력산업의 해의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 노조측은 “한전이 해의매각(민영화)될 경우, 우선 전기요금이 최소 20%에서 40%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반가계 뿐 아니라 각종 산업생산도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한전 매각방점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사실 ‘이윤없이 장사할 수 없는’ 민영기업의 본질상 공공성보다는 이윤에 집착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소수기업의 이윤을 위해 전체 국민이 수탈당하는 사태가 충분히 예견되고도 남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전력산업의 민영화가 국민들 몰래 ‘취쉬’해가며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지난 9월 18일-19일 현대리서치가 전국의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61.3%)의 국민들이 한전의 해의매각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한전 노조의 이경호 홍보국장은 “전력산업의 민영화는 결국 소수 자본의 이익을 위해 국민 전체가 약탈의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며 “이 싸움은 국민 대 정권, 국민 대 ‘자본의 정권’ 간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고 질라 말한다.

이처럼 전력산업의 민영화 또는 해의매각을 둘러싼 민중진영과 정부·자본 간의 대결은 앞으로 진행될 다른 공

업들의 민영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자본의 자유, 생존권의 후퇴

한일·한미투자협정은 협정 당사국간에 자본의 투자·투기활동을 철저히 보장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투자협정의 핵심은 외국자본의 모든 투자와 투기활동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해고의 자유’ ‘임금억제와 노동강도 강화’ ‘국가 공공성의 약화’ ‘소유권의 철저한 보장’ 등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질서를 더욱 강화시킴으로써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심각한 후퇴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내 노동자·민중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투자협정은 또 미일·자본주의의 강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상 대외종속의 심화와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빈곤의 세계화’를 중단하라!

오는 11월 30일 미국 시애틀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3차 각료회의가 열린다. 여기서는 향후 3년간에 걸쳐 21세기의 세계 투자 및 무역질서를 규율하는 뉴라운드 협상이 개시된다.

뉴라운드는 농산물 및 서비스시장의 추가개방과 관세인하 등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전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국적자본의 이윤추진에 방해가 되는 모든 규제가 철폐되어 전세계 노동자와 민중들의 제반 권리를 악화시키는 논의가 진행된다.

이에 99민중대회는 전세계 민중의 빈곤과 열악한 생존을 강요하는 WTO 뉴라운드 협상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서준식 대표(레드헌트 사건)

항소심 첫 공판

오늘(11월 12일) 오후 3시 서울지방법원 321호 법정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최근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자수하면서 고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10일 강금실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최영도)’ 소속 변호사 13명은 이근안을 함주명(83년 남파간첩사건)씨 사건과 관련해 고문 및 위증죄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대원칙에 따라 고문범죄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는 공소시효 제한이 절대로 적용될 수 없음”을 주장했다. 다음은 고발장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편집자주).

- 고발인 : 강금실/김도형/김선수/김승교/김연수/박성호/박찬운/백승현/장주영/조광희/안영도/윤기원/차병직
- 피고발인 : 이근안
- 피해자 : 함주명

1. 고문과 허위증언

피해자 함주명은 83년 2월 18일부터 45일간 불법감금돼 고문을 당했다. 개성이 고향인 함주명은 월남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대남공작원으로 자원해 남파되자마자 54년 자수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이근안 등은 그를 체포해 “간첩행위를 자백하라”는 강요를 하며 온갖 고문을 하고 살해협박까지 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고문을 호소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83년 12월 29일 항소심에서 이근안은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고문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증언까지 했다. 결국 피해자는 이근안의 허위증언을 바탕으로 16년이라는 기간동안 감옥에서 처참한 세월을 보냈다.

2. 반인도적 고문범죄의 공소시효는 배제되어야 한다.

이근안의 고문범죄와 위증죄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7년, 5년)가 이미 지난 상태다. 그러나 헌법 제6조 1항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고문을 반인도적 범죄와 국제관습법의 국제범죄로 규정해 시효와 관계없이 해당국가에 철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고문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한다.

고문이 반인도적 범죄라는 것은 뉴른베르그 재판 이후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유고슬라비아 전법재판소 및 르완다 전법재판소의 근거규정에도 고문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1998년 로마에서 만들어진 국제상설형사재판소법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고문이 반인도적 범죄요 국제관습법의 국제범죄라는 사실은 다른 일반범죄와 그 처벌에 있어 특별한 취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 혹은 국제관습법의 범죄는 ‘보편적 관할’이 적용된다. 즉,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피노체트에 대한 처벌 움직임이 바로 그 사례다.

둘째, 일반 범죄와는 달리 국제관습법에 의한 처벌도 죄형법정주의의 위반이 아니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유태

인학살의 장본인인 아이히만은 이스라엘에서 처벌할 때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아이히만의 행위가 국제관습법에 위반되는 반인도적 범죄라는 점이 강조돼 처벌이 가능했다.

셋째, 반인도적 범죄에 원칙적으로 공소시효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1968년 ‘전범 및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시효부작용 조약’이 만들어짐으로써 더욱 보편화됐다.

우리나라가 ‘시효부작용조약’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의 한 일원이 되고 또한 헌법 제6조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을 인정한 이상,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작용은 우리사회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고문범죄행위가 공소시효를 넘은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헌법과 국제법규에 어긋나는 것이며, 수사기관이 수사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이 사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하여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3. 형사소송법 제 422조의 재심사유와 재심청구의 문제

만일 형사소송법을 토대로 공소시효를 적용한다면 이근안의 고문범죄와 허위증언이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이근안은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22조는 이같은 경우를 예상해 특별한 재심사유를 정해 놓았다. 즉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얻을 수 없는 때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이근안에 대해 진실 규명만 해준다면 피해자는 재심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시효의 적용여부를 떠나서 사실여부에 관한 수사는 암울한 시대의 가장 극비로 가려진 비극적 참상을 진실의 빛으로 비추어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작업이며, 고문으로 인간의 존엄을 짓밟히고 오늘날까지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의로운 심판대에 서서 누명을 벗을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로운 일이다.

1999. 11. 10 고발인

제4회 인권영화제(11/26-12/2) 후원을 기다립니다.

- 일반후원회원 : 후원회비 1만원 (해설책자, 기념품)
- 특별후원회원 : 후원회비 10만원 (쇼아, 칠레전투, 4회성명작 중 1)
- 담당 : 인권운동사랑방 김정아, 남수영(문의: 02-741-2407)
- 입금계좌 : 국민 822-21-0276-824 서준식
- 한빛 112-07-226091 김정아-인권영화제

만화사랑방

어동수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11월 13일(토)

제 1496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해외 진보인사 또 입국금지

### 미국 노동운동가 공항서 강제출국

외국의 진보운동가 가운데 한 사람이 또다시 국내입국을 금지당했다.

오는 15일부터 서울 송실대에서 진행되는 '99 제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2일 김포공항으로 들어온 스티브 켈퍼(미국 노동운동가) 씨는 한국 당국에 의해 입국을 금지당했다. 켈퍼 씨와 함께 들어온 일행 5명은 입국이 허용됐으나, 당국은 켈퍼 씨를 오후 8시 20분발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편으로 강제 출국시켰다. 또 일행 5명이 김포공항 측에 강력히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들은 국내에서 항의 행동을 벌일 계획이다.

해외의 진보적 인사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는 지난 10월 홀거 하이데 교수(독일), 크리스토프 아기통(프랑스 실업자운동가) 씨에 이은 세 번째로 한국정부가 해외 진보인사의 입국을 적극 차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본지 10월 14일자 참조).

미국 노동네트워크의 운영자며 노동당 지부 부의장인 켈퍼 씨는 하이데 교수, 아기통 씨와 마찬가지로 98년 서울에서 열린 국제노동회의와 실업자 대행진에 참석한 바 있다.

### 서준식 대표 항소심 열려

〈레드헌트〉상영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12일 오후 3시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소1부(윤여현 재판장)는 인정신문에 이어 97년 당시 서준식 대표의 담당

경찰관이었던 장효석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공판을 마쳤다.

서준식 대표는 지난 9월 7일 1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받았고, 보안관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본지 10월 8일자 참조〉 다음 재판은 12월 17일 오후 4시 속개된다.

### "보안관찰 자료공개하라"

#### 정보공개청구소송 잇따라

"반국가 사범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의 운영실태가 공개되는데 반해 그 법에 준해 처벌받는 보안관찰 관련 자료가 비공개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법무부가 보안관찰 관련 자료가 북한의 흑색선전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며 이를 3급 비밀자료로 분류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보안관찰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잇따라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8월 박지현(서울대 법학박사과정) 씨가 보안관찰 자료의 비공개결정 취하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낸 데 이어,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도 오는 15일 보안관찰 자료의 비밀취급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10월말 본인에 대한 보안관찰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문규현 신부 등 보안관찰 대상자 83명도 오는 11월말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과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상 등은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3급 비밀로 분류·관리되고 있어 외부에 공개될 경우 보안관찰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피처분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며 △북한의 흑색선전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자료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안관찰대상자들과 관계자들은 법무부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소송을 제기한 박지현 씨는 정보공개법과 관련해 "정보공개로 인해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 정보공개를 차단할 수 있어도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인에 대한 정보라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통계자료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며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고근에 씨는 "법의 개정과 폐지 혹은 보완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법의 운영에 대한 정보와 자료공개가 필요하지만, 보안관찰법은 일체의 자료들이 법 제정 이후 단 한번도 공개되지 않아 보안관찰처분이 남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 제4회 인권영화제(11/26-12/2) 후원을 기다립니다.

- 일반후원회원 : 후원회비 1만원 (해설책지, 기념품)
- 특별후원회원 : 후원회비 10만원 (쇼아, 칠레전투, 4회성영작 중 1)
- 담당 : 인권운동사랑방 김정아, 남수영(문의: 02-741-2407)
- 입금계좌 : 국민 822-21-0276-824 서준식
- 한빛 112-07-226091 김정아-인권영화제

##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③ "건강권·교육권 보장"

### 의료보험 즉각 통합 요구

정부와 여당이 2천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의료보험 통합을 6개월 연기하기로 하자, 민중들은 의료보험 통합의 즉각 실시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료보험의 통합은 지난 10여 년간 민중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안인 데다, 의료보험 통합 연기의 배경에는 내년 총선에서 고소득·기득권 세력의 표를 놓치지 않으려는 정부·여당의 계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현행 의료보험 체계의 문제점은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의료비 부담을 지고 있다는 데 있다. 2백27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76만원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똑같이 3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제발총수의 보험료가 고작 1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이 현 의료보험 체계의 실상인 것이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바로잡는 작업은 한시가 급하다.

실제로 1백40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을 단일기구로 통합할 경우, 전체 직장근로자의 65%가 보험료를 인하받게 되며, 특히 월소득 52만원 이하의 저소득 노동자는 51%의 인하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의료보험 통합에 따라 보험료가 1만원 이상 오르는 사람은 일부 고소득자들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대상자의 11.6%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 평등교육 실현 요구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시장과 경쟁의 논리를 도입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현재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BK21(두뇌한국 21) 정책으로 대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기조는 '돈벌이가 되는 학문과 교육기관'만을 장려·양성

는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한편,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질 높은 보호와 평등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의 0.9% (OECD 국가 평균은 7%)에 불과하며, 따라서 영유아교육이 대부분 사교육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유아 취업률이 OECD 가입 국가 중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만들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이 출발점부터 불평등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그것이 다시 경제적 불평등으로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 "유치원, 유아학교의 무상 공교육화의 실현"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민중의 요구사항이다.

### 행사와 동정

◇'제2의 이근인', 정형근 시법처리 촉구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  
· 때: 11월 13일(토) 오전 10시 곳: 여의도 한나라 당사 앞  
· 주최: '제2의 이근인', 정형근을 심판하는 제사회단체 연석회의(준)

◇민연련 창립 14주년 기념 '언론개혁 한미당'  
· 때: 11월 13일(토) 오후 2시 곳: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주최: 민주언론연합내 언론개혁실천단

◇99 제 1차 민중대회 및 전국노동자대회  
· 주최: 99 민중대회위원회  
-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11월 13일(토) 저녁 7시 중앙대학교  
- 전국노동자대회, 99 제1차 민중대회  
11월 14일(일) 오전 11시 여의도 교수부지

◇99 제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 주최: 99 제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조직위원회 (7744-551)  
- 세션과 워크숍 때: 11월 15일-17일 송실대 사회봉사관  
- 제3회 국제노동영화제 때: 18일-21일 낮 2시 · 서울의대 학생회관  
- 제3회 전국 노보전시회  
11월 18일-21일 오전 11시 서울대 의대 보건대학원 1층

◇〈토론회〉 10대의 성신업 유입과 남성 성문화  
· 때: 11월 16일(화) 오후 2시-5시 · 곳: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장 (4층)  
·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576-5450)

◇〈토론회〉 국민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 어떻게 볼 것인가  
때: 11월 16일(화) 오후 2시-5시 · 곳: 국회도서관 대강당  
주최: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천·하)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11월 16일(화)

제 1497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민가협, 재수감 양심수 석방운동

### 준법서약 폐지 주장하다 재수감

준법서약서 폐지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가석방이 취소돼 재수감된 송계호(30) 씨의 석방운동이 벌어진다(관련 기사 10월 7일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민가협)는 15일 "준법서약제 폐지 등 법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

은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라며 "이를 문제 삼아 송 씨를 재수감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비난했다. 민가협은 또 "법무부도 준법서약제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이 일자 준법서약서 작성 시 준법서약 제도를 비판하는 내용을 써도 무방

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송 씨의 조건 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민가협은 송 씨의 석방을 위해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앞으로 가석방 취소 처분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 진정서, 성명서 등을 보낼 계획이다. 또한 여러 인권사회단체와도 연대해 송 씨의 석방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 순천교도소에 수감중인 송 씨는 "서약서를 쓰고 석방되었을 때 신체는 자유로웠으나 마음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마음은 자유롭다"고 밝혔다.

송 씨는 97년 4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정책실원으로 일하던 중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돼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98년 8·15 특사로 가석방됐다. 석방이후 송 씨는 준법서약서의 폐지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석달여 간 농성을 벌였는데, 재수감 당시에는 고향인 전남 나주에서 농사를 짓던 중이었다.

한편 송 씨의 대리인인 이상희 변호사는 지난 10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 가석방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송 씨의 만기일은 2천년 5월이다.

◎ 민가협 : 02-763-2606, 김대중 대통령 팩스 : 02-770-0253, 김정길 법무부 장관 팩스: 02-504-3337

## 주요공판안내

▶ 11월 17일(수) 유덕상 외 5인(업무방해 등) 오전 9시40분, 서울지법 317호, 3단독, 선고

▶ 11월 18일(목) 권영길 (일반교통방해 등) 오후 5시 서울지법 317호, 3단독, 속행

▶ 11월 20일(금) 이장희 외 1인(국가보안법 찬양·교무 등) 오후 2시, 서울지법 524호, 4단독, 속행

## 인권 이 사람들은 다 어찌할 것인가

공선옥(소설가)

나의 친지는 혼자서 요구르트 배달을 하며 남매를 키우고 있다. 근 10년 동안 그 일을 해서 먹고는 살고 있지만 그 생활의 내용이란 게 그야말로 생활이 아니고 그냥 '생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손바닥은 갈라져 핏물이 배어 나오고 발톱은 뭉그러져서 더 이상 나오지 않은지 오래. 하루종일 고층아파트 계단을 일일이 밟고 오르내리며 배달을 하고 위험한 찾길을 손수 짚고 지나다니다가 교통사고 위험에 부딪친 것도 수십 번. 남편이 실직을 당해 집에 들어오지 않다가 최근에 이혼을 했다. 남편없이 아이들을 키우며 돈을 버는 것이 같은 이를 흔히 '여성가장'이라고 한다. 이혼, 혹은 사별, 혹은 남편의 실직으로 인해 가정살림뿐 아니라 경제적인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이러한 저소득 여성가장들에게 우리사회는 과연 얼마만한 관심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가.

결론을 말하자면 아무 것도 없다. 요구르트 배달을 하는 그녀는 많을 때는 한달 수입이 60만원 가량이 된다. 하지만 그것도 고객이 많거나 수급이 많은 때 얘기고 거의 매달 미수금분만큼의 돈을 빚내서 대리점에 갖다 내야 그만한 돈이 나온다. 수중에 가진 돈이 없는 그녀는 벌어서 빚 갚고 그러고 나면 한달 겨우 입에 풀칠할 것만 남는 생활을 근 10년째 해오고 있는 것이다.

그이는 얼마전 모자가정에 주는 지원금(1인당 7만원?)을 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갔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그곳 동사무소 관할 하에 지원해 줘야 할 주민이 너무 많고 지원금액수는 정해져 있어 움직일 수 있고 다만 얼마라도 벌어서 살수 있는 아줌마같은 사람한테는 돌아갈 지원금이 없다는 말만 듣고 돌아서야 했다. 게다가 그녀는 지금 생활이 성실하지 못했던 전남편이 지운 카드 빚으로 그녀가 얼마 안되는 새간살이들에 노란 딱지들이 두어번 붙고 나서 최근 경매처분 되었다. 어느날 재활용센터 남자가 와서 경매낙찰 증명서를 보여주고는 모든 것을, 그야말로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싸쓸이 해 가버렸다 한다. 가져간 사람 또한 생활보다는 생존을 하는 사람이기 쉽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물건들에 미리 누가 '가압류'인가 '가처분' 신청을 해놨으면 경매처분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바로 경매처분을 한 카드사 직원을 통해서 알았다 한다. 경매처분 해놓고 그 사실을 알려주더라. 그녀가 나한테 빚진 것 없지만 혹시 다음에는 그녀네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들, 입고 있는 옷가지, 덮는 이불, 밥그릇까지도 전부 경매처분될까 두려워, 아니 그이 인생 자체가 경매처분 될까 두려워 이제 그녀를 나는 가압류하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가압류하지?

정년 20대 80의 세상은 오고야 말았다. 골고루 가난한 세상은 영영 헛된 망상일 뿐인가.

## 주간인권흐름

(99년 11월 8일-11월 14일)

1. 고문범죄 단죄는 세상 끝날 때까지... 민변, "고문은 국제법과 헌법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85년 일명 남파간첩사건(피해자 함주명씨)과 관련 이근안을 고문과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 (10일)

2. 빈곤은 나몰라라 서울시, 내년 예산을 6.1% 증액하면서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 관련 예산은 74.9% 삭감한 1360억원으로 편성한다 반해 월드컵 준비예산은 58.8%나 증액된 6114억으로 편성(8일) / UNDP와 참여연대, 외환위기 이후의 빈곤실태 발표.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민은 1천만명 이상인데 생활보호대상자는 국민의 4%에 불과"

3. 해외진보인사 입국 절대사절 법무부, '99 제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에 참석하려던 독일의 홀거 하이데 교수와 미국 노동운동가 스티브 켈러씨를 강제출국시켜 (14일)

4. 쟁기는 게 없다면 왜 감수나? 인권운동사랑방, 보안관찰 대상자 및 보안관찰 자료의 비밀취급처분 취소 요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15일)

5. 또 사상재판인가? 서울지방법원,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하영옥 씨의 1심 공판에서 "북한을 찬양하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견해 밝혀 (9일)

6. 장애인 고용, 말뿐이었다 검찰, 장애인 고용을 0%인 정부부처에 대해 무혐의 처리 / 노동부 관계자, "장애인 고용은 노력할 사안이지 강제력은 없다"고 말해 (9일)

7. 일은 굵게, 사회보장은 외상 4인 이하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10시간 장시간 노동 시달리면서도 4대보험 적용은 30%도 못받아 (10일)

8. 성노예 강요받는 외국인여성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클럽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이 윤락행위 강요당하며 임금체불·폭행·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실태조사결과 발표 (12일)

9. 미국은 노근리에서, 한국군은 베트남에서 <한겨레 보도> 베트남 정부, 베트남 전쟁당시 노린 등 4개 지역에서 한국군이 학살한 양민의 명단이 5천여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으나, 한국 국방부는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 힘들었다"고 반박 (13일)

## 느린 걸음도 죄가 되다니

### 민중대회 참가 장애인, 시가행진 중 강제연행

민중대회에 참가했던 장애인들이 대거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이유는 걸음이 느리다는 것.

14일 99민중대회에 참가했던 서울장애인연맹 등 장애인단체 회원 30여명은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집회를 마치고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역으로 평화 행진을 하던 중 경찰기동대 소속 전투경찰들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당시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거나 목발을 짚고 행진 중이어서 행진대열에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었다. 이때 서울경찰청 제3기동대 35중대 소속 전투경찰들은 아무런 예고도 하지 않은 채 행진하던 장애인들을 강제로 연행했다. 연행된 장애인들은 모두 마포경찰서로 이송됐으며 이 과정에서 지체장애인 위성심(45) 씨 등이 허리를 다치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연행된 장애인들은 경찰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마포경찰서 정문 앞에서 5시간 정도 항의농성을 진행했다. 마포경찰서장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아마도 장애인들을 서울역까지 안전하게 후송 조치하도록 한 것이 중간에서 잘못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장애인들은 연행한 3기동대 35중대 소속의 한 전경은 "3기동대 부대장의 지휘를 받아서 움직였을 뿐"이라며 "너무 늦게 가 교통의 흐름을 막는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서울장애인연맹의 조희도 홍보국장은 "당시 경찰은 아무런 예고나 경고도 하지 않은 채 장애인들을 강제로 연행했는데, 서장 말대로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조치였다면 서울역에 내려주어야지 마포경찰서로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고 비난했다. 또 "장애인이 늦게 걷는 것은 당연한 일로 이마저도 원통한데 그것을 이유로 장애인을 쓰러뜨리 취급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서울시경찰청장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현장 책임자 등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전.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11월 17일(수)

제 1498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스티브 켈러, 직접 와라"

### 법무부, 입국금지 이유 공개 안해

노동운동가 스티브 켈러 씨의 입국 금지금지조치와 관련해 법무부가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관련 기사 본지 11월 13일).

법무부는 16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켈러 씨를 왜 입국금지 시켰는지 밝힐 수 없다"며 "이는 본인이 직접 해명을 요청한 경우에만 답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정이나 그 밖에 국가기관에 의한 입국금지 대상자가 얼마나 되고 입국금지자로 분류된 사람인 누구인지는 요청기관이 어디든 밝힐 수 없고 본인이 요청했을 경우에만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또 "입국금지 사실은 이후에 있을 입국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본인에게만 고지되는 것이며, 이는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른 것으로 우리는 행정만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켈러 씨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행정법 위반자로 입국이 거부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측의 입국금지조치와 관련해 '99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준비위원회'(공동대표 김진균, 준비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해 "크리스토퍼 아기통 씨에 이은 켈러 씨에 대한 강제출국 조치는 단순한 미국 노동운동가의 추방이라는 의미를 넘어 한국의 노동운동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준비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켈러 씨의 입국허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켈러 씨도 한국정부에 입국금지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한편 미국에서 한국정부로부터 입국금지를 당한 사실을 알려낼 계획이다.

켈러 씨는 99 제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12일 한국을 방문하려다 공항에서 입국이 금지돼 미국으로 강제 출국했다. 또한 같은 날 독일 브레멘 대학의 출거 하이에 교수 역시 입국을 거부당해 강제 출국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 7조 삭제없는 개정 무의미 연대회의·국민연대 공동토론회

국민회의의 국가보안법 개정시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국민회의가 국보법 2조와 7조의 부분 개정을 골자로 한 국보법 개정시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와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등 국보법 반대 운동에 나선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열고 국민회의측 시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한인섭(서울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7조 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한 애매성과 광범성 그리고 그 조항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법관들 사이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50년대까지만해도 사형집행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국보법 사건이 현재는 실행까지도 못 가고 집행유예로 종결되고 있고 기소율도 턱없이 낮아지고 있다"며 "이는 국보법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의구심은 높아진 반면 범행의 실질적 위험성은 감소했기 때문으로 지금이야말로 국보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조시현(성신여대) 교수는 "국제법상 선전선동의 금지는 전쟁 등 반인도적 범죄에만 적용되고, 단체구성과 가입도 인종적, 민족적 증오를 부추기기 위한 단체일 경우에만 제한하고 있다"며 "국제법 등에 어긋나는 7조를 굳이 국민회의 등이 유지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사무국장은 "80년대 이래 국보법 구속자의 92%가 국보법 7조에 의해 구속됐고, 이중 7조 3항(이적단체 구성)에 의한 구속이 98년 한해동안 72%에 달한다"며 7조의 완전삭제를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1백20여명이 참여해 국보법 개폐에 대한 열기를 확인케 했다.

### "배후, 색출해 처벌해야" 유가협 등 경찰청 항의시위

"이근안의 배후를 추적, 처벌하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공동대표 배은심, 유가협) 회원 30여명은 16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근안의 도피행위를 지원한 경찰의 행위를 비난했다.

이근안으로부터 고문을 당했던 권운상 씨의 어머니는 "이근안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틀간 잠을 자지 못했다"며 "고문의 배후세력과 이 씨를 비호했던 세력의 실체가 철저하게 규명돼 다시는 우리 아들 같이 고문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은 "89년 이근안을 검거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형식적으로 검거전담팀을 구성해 그의 도피를 방조해왔다"며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특별기고

## 또하나의 전쟁터 : 버마태국 국경지대 난민캠프를 다녀와서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루벤에게 한국으로 돌아오는 즉시 안부를 전하러 했는데 다소 늦었습니다. 당신과 아쉬운 작별의 악수를 나누던 그날, "이제 돌아가면 나의 어린 조국을 재건하는 일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하던 당신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신이 조국 동티모르와 어린 아들과 반기운 재회를 했을 무렵, 저는 버마태국 국경지대에 위치한 난민캠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했던 인권활동가 훈련프로그램이 끝난 직후, 때마침 태국 인권단체 FORUM-ASIA에서 버마난민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Pim이란 친구가 현장조사를 계획하고 있던 터라 동행한 것이었지요. 방콕에서 버스를 타고도 8시간을 달려 배글로(Bae Gloe) 캠프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대면한 것이 아이들의 썩은 눈망울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거세당한 자들의 절망감이 캠프 전역을 음울하게 휘감고 있다고 느낀 건 저의 착각이었을까요?

62년 네원 장군이 이끄는 군부쿠데타 이후 36년째 군부의 철권통치가 계속되고 있는 버마의 민주화는 당신의 조국 동티모르의 독립만큼이나 국제사회와 인권운동의 오랜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조국이 독립을 향한 힘겨운 발걸음을 하나씩 내딛고 있는 지금까지도 버마는 여전히 캄캄한 터널속을 헤매고 있는 듯 합니다. 3년째 폐쇄된 대하, 낯선 이국땅에 유배되어 있는 수십만 난민의 존재가 버마의 현실을 웅변적으로 대변하고 있으니까요.

버마의 민주화가 주요한 국제 인권이슈로 자리잡은 반면 버마내 소수민족들이 겪어온 인권침해의 역사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나조차도 이곳 4만여 카렌족 난민들이 거주하는 배글로 캠프를 방문하기 전까지 이들의 문제를 거의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버마족 외에 카렌(Karen), 산(Shan) 등 1백30여개에 달하는 소수민족이 버마의 또다른

구성원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었는지요.

이들 소수민족들은 버마군부에 의한 강제노역, 조직적 강간과 학살, 강제이주, 강제추방 등 무차별한 인권침해의 희생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버마군부가 소수민족 말살정책의 일환으로 AIDS에 걸린 군인들을 동원, 이들 소수민족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강간한다는 상상하기 힘든 추악한 소문까지 들었습니다. 군부는 심지어 국경을 넘어서까지 소수민족 출신 난민들이 거주하는 캠프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 주목받지 못한 또하나의 역사

버마군부의 오랜 탄압으로 군부에 대한 소수민족의 증오심은 버마인 전체에 대한 불신과 증오심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캠프에서 만난 카렌족 대부분이 확신에 찬 어조로 버마가 비록 민주화된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은 분리독립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년전 반란군을 도왔다는 혐의로 남편이 버마군에 의해 무참히 학살당한 장면을 목격했다는 한 카렌여성 은 아들이 크면 국경지대에서 분리독립을 위해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는 카렌해방군에 입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증오가 또다른 증오를 낳고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이 분리독립을 쟁취한 후에도 이웃나라 버마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세계평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일텐데, 이 뿌리깊은 불신과 증오심을 어떻게 푸나 착잡한 심경을 가누기 힘들었습니다.

캠프내 상황도 예상보다 훨씬 더 열악했습니다. 나뭇잎으로 간신히 지붕을 이은 집들, 불결한 식수, 부족한 식량... 전기마저 없어 해가 지면 촛불에 의지해 생활해야 합니다. 버마군대의 공격을 피해 최근 난민들이 새로 이주하고 있는 음피암(Um Picm) 캠프는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짙은 안

개 때문에 낮에도 태양을 볼 수 없는 데다 거센 바람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다. 해가 진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무려 12시간을 앓은 담요 한 조각에 의지해 언제 바람에 날아갈지 모르는 지붕 아래서 밤을 지새워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유엔과 인도주의적 구호단체들이 지급한 식량을 빼들러 다시 난민들에게 파는 부패의 사슬이 형성되어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지요.

캠프에 머무는 동안 또하나의 우울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국정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수십만 버마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로 규정, 11월 3일까지 태국을 떠날 것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장을 발표한 것이지요. 군부의 강제노역이나 강제징집을 피해 버마를 떠나야 했던 이들 이주노동자들은 이제 태국의 감옥 아니면 목숨을 건 본국귀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이없게도 미얀마군부가 자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국경을 폐쇄했기 때문이지요. 버마와 태국을 잇는 강에 시체가 떠다닌다, 몇몇 여성이 국경을 넘어 군인에 의해 강간을 당했다, 오도가도 못하는 버마인들이 작은 섬에 갇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상황을 뒤로 하고 귀국길에 오르는 발걸음이 가벼울 리 없었겠지요. 그렇게 잠시나마 난민들의 고단한 삶의 현장을 함께 한 이후부터 버마의 군부독재가, 또 중심으로 편입되지 못한 혹은 스스로 중심을 창출하지 못한 소수민족의 절망적인 현실이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낍니다.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아시아지역 13개국의 참가자들이 국경과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뛰어넘어 우정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아시아 민중들이 당연하고 있는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해방이 곧 나의 해방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천.하.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11월 18일(목)

제 1499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일할 권리' 요구 단식돌입

### 장애인들, 여의도에서 천막농성

장애인들이 직접 단식농성을 벌이며 일할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오후 3시 '장애우 일할 권리 찾기 연합'(대표 박호성, 일권연) 소속 회원 및 장애인 단체 활동가 60여 명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장애인 직업 보장'을 촉구하며 천막농성 선포식을 가졌다. 박호성 씨를 비롯한 일권연 회원 6명은 이날부터 12월 15일 까지 단식을 하기로 했다.

장애인고용률 0.54% 불과

이처럼 장애인들이 직접 단식농성까지 벌이게 된 까닭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철저히 무시해 왔기 때문이다. 91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3백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2%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어 장애인고용률은 0.54%에 불과하다. 얼마 전 한국갤럽의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중 70%가 실직 상태에 놓인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더구나 노동부는 이 법에 의해 지난 9년간 장애인 고용을 회피한 기업으로부터 수천억원의 부담금을 받았지만, 이 기금은 실직 장애인을 위해 직접 사용되기보다 고용지원금이나 편의시설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기업에 지원되어 왔던 것이다. 이날 일권연은 결의문을 통해 "장애

인에게 있어서 직업은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수단인면서도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통합의 수단"이라며 "장애인은 시혜적인 복지 아니라 직업을 통한 자립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기금 수천억원을 빈곤 장애인에게 생계비로 나눠줬으면 이들의 빈곤상태가 조금은 개선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고용촉진공단을 통한 단순취업알선이 아니라 국회에 계류중인 직업재활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혜보다 자립지원 절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조문순 간사는 "현 고용촉진법은 소수의 경증 엘리트 장애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시·청각 장애인, 뇌성마비 등 정신신체 장애인, 40-50대 후천성 장애인들은 공단에서 취업서류조차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취업이 불가능한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소규모 자영업을 원하는데 정부는 이렇게 거리에 나오는 노점들을 철거할 것이 아니라 노점을 통해서라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포식에 이어 장애인들은 집회 장소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가려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집회에 참석한 허유성 씨 등이 다리를 다쳤

다. 결국 이들은 자리를 옮겨 여의도 순복음교회 옆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 깡패 동원, 노조원 폭행 고려운수, 완전월급제 갈등

택시노동자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며 1백90여일째 장기파업을 벌여온 고려운수(사장 송현준) 사업장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서울지부 동부지역 사무처장 김광철 씨에 따르면, 17일 오후 1시경 회사측 관리자들과 사측의 사주를 받은 용역깡패 60여명 등이 지게차를 들이밀고 사업장으로 쳐들어와 파업중인 노조원들을 폭행했다.

당초 사측은 파업이 장기화되자 사업장 폐쇄를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17일 용역들을 동원해 택시를 강제로 빼내려 했던 것이다. 이 또한 노조원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무산됐다.

한편 주변에 배치된 서울 동부경찰서 경찰들은 "폭력사태가 발생해도 노사간의 싸움인 이상 개입할 수 없다"며 용역들의 폭행을 방조해 조합원들로부터 비난을 샀다.

고려운수 노조는 지난 5월 12일부터 완전월급제 도입, 삼진아웃제(부당노동행위 세 차례 적발시 사업주를 구속 처벌하는 제도) 쟁취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왔다.

### ◎ 알림 ◎

인권운동사랑방 이메일 주소 변경 humanrights@sarangbang.or.kr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11월 중 주소 이전. 인권하루소식은 바뀐 주소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www.sarangbang.or.kr

## "우리가 당신의 가족이었다면..."

생사기로서 내몰리는 결핵환자들

"제발 늙으신 어머니 보다 먼저가지 않게만 해주세요"

결핵 난치성 판정을 받고 국립목포결핵병원에서 1년째 투병중인 김정희(28) 씨는 퇴원을 종용하는 주치의 송민협에게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하지만 김 씨와 짝은 마찰을 빚었던 주치의 송 씨는 김 씨가 외박으로 병원을 잠깐 비운 사이 김 씨의 퇴원수속을 끝마쳤다.

### 눈물 호소도 외면받고 강제퇴원

김 씨 같은 난치성 환자에게 퇴원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난치성 환자들은 더 이상 좋아질 것이 없다. 한 순간이라도 몸 관리가 소홀해질 경우 영영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김 씨는 함께 퇴원을 종용 받은 김동석(37) 씨와 함께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를 찾았다. 온몸에 번진 결핵균을 잡기 위한 수술도 여러 번.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과의 서상권 서기관은 수술 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김동석 씨의 상태를 살피고는 이들을 다시 국립목포결핵병원으로 돌려보냈다. 얼마간이라고 못박진 않았지만 적어도 올 겨울만은 병원에서 더 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주치의를 비롯해 병원 의사들은 김 씨 등의 치료를 거부했다. 의사의 지시를 어기고 상부로 쫓아 올라가는 바람에 문책까지 받게 됐다는 게 이유였다. 결국 원장이 주치의를 자임하고 나서 치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주치의와의 갈등으로 김 씨는 지난 한 달간 살이 무려 5kg이상 빠지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지금은 모든 의사들로부터 무서운 환자라는 별명을 얻으며 기피대상 환자로 꼽히고 있다.

### "죽을 때까지 치료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 병원에는 저와 같은 환자들이 무려 30여 명이나 됩니다. 모두 인젠가는 치료상태와 상관없이 이 병원에서 강제 퇴원을 종용받게 될 처지죠. 죽을 때까지 치료를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한 달에 1만원을 내고 치료를 받는 환자라 해도 우리 역시 인간입니다. 다른 환자를 위해 때가 되면 정리하고 떠나야한다는 것도 있는데, 자신과 뜻이 잘 맞지 않다고, 2인이 지났다고, 환자상태와는 전혀 무관하게 무조건 강제퇴원을 종용해오는 의사들을 보면 구역질이 납니다." 김 씨는 계속 기침을 토해냈다. 김 씨는 "나는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결핵에 걸리고 싶은 사람은 없었다고, 만약 우리가 당신의 가족이라면 그렇게 하겠냐고"며 울분을 참지 못했다. 의사들의 횡포와 예상을 줄이겠다며 국립목포결핵병원의 민영화를 외치는 정부의 목소리 뒤론 생과 사의 길림길에 선 결핵환자들의 진한 눈물이 흐르고 있다.

##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①

오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동국대학교 학술문화회관에서 제4회 인권영화제가 열린다. 외국 작품 28편, 국내 작품 14편 가운데 주요 상영작을 소개한다(편집자주).

###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 All Power To the People

미국/1997/리류리 감독/115분/다큐멘터리

게막작으로 선정된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는 1966년부터 82년까지 미국 흑인 민권운동을 이끌었던 좌파정당 '흑표범당'의 왜곡되고 묻혀있던 이야기를 집착하게 다룬 다큐멘터리이다.

영화에는 이 정당에서 활동했던 민권운동가들이 등장하는데 백인경찰을 죽였다는 혐의를 뒤집어쓰고 17년 동안 옥살이하고 있는 무미아 아부자말의 옥중인터뷰도 접할 수 있다. 그의 무죄가 입증되고 있지만 최근 필라델피아 주정부에 의해 그의 사형집행일이 공고된 상태.

영화는 미정부 문서를 분석하고 전 FBI나 CIA요원, 흑표범당의 일원, 인권운동가들을 인터뷰함으로써 역사에서 왜곡된 좌파계급 정당의 활동을 반추함과 동시에 미국이 '코인텔프로'(미국 FBI의 대 파괴자 정보활동)라는 가공할 계획을 통해 이들에게 어떠한 인권침해를 일삼았는지를 또박또박 보여주고 있다.

한때 흑표범당 당원이었던 리류리 감독은 "진실 없이 사과도 없고, 사과없이 진실도 없다. 진실을 밝히고 솔직히 사과할 때만이 화해도 가능하다"는 일침을 던진다. 유럽 7개국에서 방송되었지만 미국에서는 방송금지된 작품이다.

### 에스코바의 자살골 Escobar's Own Goal

아일랜드/1998/마이클 휴이트 감독/51분/다큐멘터리

영화는 언론인이며 축구팬인 리처드 샌더스가 지구상에서 가장 폭력적이며, 국제적으로 코카인 밀매가 성행하는 콜롬비아의 매드린을 여행하는 행적을 담는다.

콜롬비아에서 축구란 스포츠 이상의 의미다. 콜롬비아의 거의 모든 사회 시스템은 마약상에게 장악돼 있는데 축구 역시 예외는 아니다.

94년 월드컵. 콜롬비아의 대표팀은 미국과의 경기에서 절대 지면 안 된다는 마피아의 위협을 받는다. 그러나, 후반 34분경 수비수 안드레 에스코바는 자살골을 넣고, 그 결과 콜롬비아는 경기에서 패하고 만다. 경기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고향 매드린을 찾은 그는 마약 거래상에 의해 살해당한다.

총탄으로 삶을 마감한 콜롬비아 축구선수의 삶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유명한 축구선수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하루 평균 60여명이 살해당하는 콜롬비아의 폭력적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이기 때문이다.

## 제4회 인권영화제(11/26-12/2) 후원을 기다립니다.

- 일반후원회원 : 1만원 / · 특별후원회원 : 10만원
-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김정미, 남수영 (문의: 02-741-2407)



### 제4회 인권영화제 (11/26-12/2) 상영일정표

(장소: 동국대학교 학술문화회관)

11월 26일(금)

<예술극장>  
19:00 개막식  
20:00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 (120분)

11월 27일(토)

<예술극장>  
6:00 국가범죄-레드헌트2 (90) \*  
8:10 세계인권선언의 역사 (30)  
8:50 우리 친구야 (4)/변방 (95)  
  
<소강당>  
1:00 슬픔과 연민 (4시간 20분)  
5:30 이골리 (8)/얼스틴가의 비밀 (89)  
7:20 우리 집에 불이 났다 (19)  
탈북소년들 중국에 가다 (35) \*  
8:40 끝나지 않은 싸움-에바다 (50) \*

<제1세미나실>  
6:00 프리야 (100)  
7:50 나이 아이 나의 땅 (4)/알로펜도 (63)  
9:10 다시 못 올 사흘 (46)

<제2세미나실>  
7:00 열대야 (195)

11월 28일(일)

<예술극장>  
12:00 이골리 (8)/꽃파는 할머니 (50)  
1:10 멈추지 않는 대량학살: 대인지뢰1 (20)  
진실이 있는 곳 (30)  
2:10 에스코바의 자살굴 (51)  
3:30 소리/ (13) 무명천 할머니 (20) \*  
5:00 소코로 노브레 (23)/다시 못 올 사흘 (46)  
6:20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 (120)  
8:30 잃어버린 지평선 (4)/프리야 (100)

<소강당>  
1:00 멈추지 않는 대량학살 : 대인지뢰2 (15)  
소코로 노브레 (23)  
2:00 먼지의 집 (50) \*  
3:30 화해의 문 (4)/우리 친구야 (4)  
독방의 활력 (6)/기차길옆공부방 (50) \*  
5:00 나의 아이 나의 땅 (5)/이란식 이혼 (80)  
6:30 잃어버린 지평선 (4)/조국은 없다 (20) \*  
잠에인 김진욱씨의 결혼이야기 (40) \*  
8:30 모략당한 나의 이름 (60)

<제1세미나실>  
12:00 멈추지 않는 대량학살 1 (20)/이란식 이혼 (80)  
1:50 얼스틴가의 비밀 (89)  
4:00 부대행사 : 21세기를 준비하는 사람들  
6:00 우리 친구야 (4)/변방 (90)  
7:50 우리 집에 불이 났다 (19)/피로 물든 청춘 (50)

11월 29일(월)

<예술극장>  
1:00 슬픔과 연민 1,2부  
3:00 무명천 할머니 (20)  
3:30 장신구와 구슬 (52)  
4:30 기차길 옆 공부방 (50)  
5:30 생일축하합니다. 모그라비씨 (77)  
7:00 독방의 활력 (4)/민들레 (59) \*  
8:30 소리 없는 흔적 (56)

11월 30일(화)

<예술극장>  
1:00 슬픔과 연민 3,4부  
3:00 피로 물든 청춘 (50)  
4:00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부분

12월 1일(수)

<예술극장>  
12:00 열대야 (195)  
3:00 알로펜도 (63)  
4:10 끝나지 않은 싸움 - 에바다 (50)  
5:00 꽃파는 할머니 (50) \*  
6:30 독방의 활력 (6)/나의 아이 나의 땅 (4)  
콜롬비아 치육의 전쟁 (30)  
7:20 모략당한 나의 이름 (60)  
8:30 국가의 살인 (77)

12월 2일(목)

<예술극장>  
2:30 또 하나의 세상 (42) \*  
3:30 멈추지 않는 대량학살: 대인지뢰2 (15)  
꼭 한걸음씩 (45) \*  
5:00 황제의 새 옷 (53)  
6:00 세계인권선언의 역사 (30)  
7:00 폐막식/폐막작 상영 (올해의 인권영화상 수상작)

\*표시는 '감독과의 대화' 마련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천.하: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11월 19일(금)

제 1500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철거응역 다윈 다시 활개

### 서울 봉천동·상암동 강제철거 시도

겨울철 강제철거와 철거폭력의 악순환이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18일 오전 8시 서울 관악구 봉천3동에서는 철거용역회사 다윈(옛 적준) 소속 40여 명이 포크레인을 이용해 공가를 철거했다. 용역원들은 철거대책위원회(철대위) 사무실을 완전 포위한 채 철거를 시도하며 주민들과 투석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최순실 씨는 용역원에게 복부를 발로 차여 서 병원에 입원중이며, 전숙 씨는 어깨인대가 늘어나 4주 진단을 받았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공기철거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용역들이 머리채를 잡고 발로 밟는 등 폭력을 저질러 주민 8명이 크게 부상을 당했고, 특히 안학만 씨는 콩팥이

파열돼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주민 전숙 씨는 "용역들은 철대위 사무실 안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번 철거를 자행했다"며 용역원들의 반인간적 작태에 분노했다.

봉천3동에는 현재 5백여 세대가 남아 있으며 3백여 세입자 세대 중 35세대가 철거를 반대하며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98년 도원동 사태를 비롯해 강제철거로 악명 높은 다윈은 지난 5월부터 이 지역에 상주하고 있다.

경찰 외곽봉쇄 속 철거 진행

같은 날 또 다른 철거지역인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는 전투경찰 3개 중대가 마을입구를 봉쇄하고 대학생 등의

출입을 막기 위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상암동 철거용역회사인 천보 소속 50여명은 경찰이 외곽을 봉쇄한 상황 속에서 공가를 철거했고, 이에 주민들은 철대위 사무실을 중심으로 바리케이드를 치고 용역들과 대치했다.

상암동에서는 지난 9월 17일 강제철거에 저항하던 주민이 실신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상암동 지역에는 30여세대가 남아 있고 철대위에서 활동중인 세대는 총 12세대다.

한편 서초구청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이던 방배동 철거민 신주희·이상준 씨는 17일 새벽 3시경 구청측에 의해 강제로 인근 여관에 옮겨졌다. 이들이 노숙투쟁을 시작한 이래 구청과 용역에 의해 여관이나 복지관에 강제 입소된 것만도 7차례나 되며 식거나 이불은 이들이 멀다하고 강탈당하고 있다.

## "외국인 블랙리스트 웬말"

젤짜 동료들 항의시위 계획

최근 스티브 젤짜(미국 노동운동가) 씨의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젤짜 씨의 동료들이 18일 외신기자회견을 가졌다(본지기사 11월 13일자).

엔 오넬(수학교사, 미국 전국교사연맹 소속) 씨 등 국내에 들어와 있는 미국인 5명은 이날 오전 11시 한국인론재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중 정부에서도 외국인 블랙리스트가 운영된 점은 실망스럽다"며 한국정부에 하의 뜻을 표시했다.

엔 오넬 씨 등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동운동가 젤짜 씨의 강제출국에 대한 노동계의 대응을 촉구했고, 이에 민주노총은 항의성명을 발표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오는 21일 미국에 돌아간 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국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 만화사랑방

이동수



### “정형근이 직접 고문했다”

방양균 씨, 고문수사관 지목

서경원 전 의원의 비서관 방양균 씨가 정형근(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직접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방 씨는 또 정형근 의원과 함께 자신을 고문한 수사관은 전 안기부 직원 김군성(63)이라고 밝혔다.

방 씨는 18일 오후 2시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경원 전 의원의 방북 당시 서 의원과 함께 안기부에 붙잡혀 정형근 의원으로부터 직접 고문을 받았다”면서 “김대중 평민당 총재와의 관계를 부인하자 심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방 씨는 또 “김군성 등이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와의 관계를 인정할 경우 사형을 면하게 해준다는 물론 안기부 특별 체용을 약속해왔다”며 “심한 고문에 못 이겨 서경원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1만달러를 전달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 씨는 “고문수사관의 신원이 확인된 이상 검찰은 정 의원과 김군성 씨에 대한 고문수사에 착수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 재능교육 노조위원장, 6일째 단식투쟁

“회사측, 사원에 허위사실 유포”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 금지를 요구하며 지난 10월 26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던 (주)재능교육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손미승 씨가 회사측의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6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손 위원장은 “노조가 파업을 불사하며 회사측에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허위사실을 회사원들에게 유포하고 교섭에도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노사관계 극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14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재능교육측은 노조와의 교섭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측 안을 합의안인 것처럼 속인 채 일반 사원들에게 배포해 노조원들과 관련단체로부터 지탄을 받아왔다.

### 인권하루소식 지령 1500호

〈인권하루소식〉이 오늘로 지령 1500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권시킴기가 되겠다는 일념만으로 겁없이 출발한 〈인권하루소식〉이 이젠 막중한 책임감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햇수로 7년. 뜻하지 않게 관심에 쫓은 모습을 보일 때도 많았습니다. 지령 1500호를 맞이하면서 항상 이 땅의 민중들과 가까이 하는 인권하루소식이 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며, 여러분의 애정어린 질책과 격려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 인권하루소식 편집진 일동

### 〈현장〉 안양시청 앞 철거민 노숙투쟁

반복되는 철거폭력, 멍드는 심신

“이불 치우라고 했잖아.”  
“당신들한테 할말없으니 가쇼.”  
“우리가 여기 누구 때문에 와 있는데 그래, 시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이게 왜 소리 질러, 또 한번 시작해볼래? 야, 권어.”  
눈 깜짝할 사이,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다. 사내들은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던 귀인마을 주민들에게 달려들었고 그들이 덮고 있던 이불 등을 쓰레기통에 내던져 버렸다. 주민들이 험껏 저항해왔지만 앞 뒤 가릴 것 없이 덤벼드는 사내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불과 3-4분도 지나지 않아 상황은 종료됐다. 바로 앞에서 이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던 시청 직원은 자기에게 돌아올 비난이 두려웠는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주민 한 명이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물건들을 주섬주섬 챙겨오자 쾅한 눈의 아주머니 한 분이 털썩 주저앉으며 절규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려고 살아야 하능교?”

경기도 안양시청 정문 앞에서는 매일 똑같은 폭력이 반복된다. 시청에서 고용한 철거용역들은 귀인마을을 철거한 것도 모자라, 가수용단지를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용역들의 폭행 때문에 지난 10월 18일 14명으로 시작했던 노숙투쟁 인원은 현재 3명으로 줄었다. 6명은 용역들에 맞아 병원에 입원했고, 아이들은 폭력을 피해 병원과 친구의 집으로 몸을 숨긴 것이다.

“철거가 들어오기 전만해도 4식구가 제맛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현대가 고용한 철거용역들이 마을에 들어와서는 철거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폭력으로 내쫓았습니다. 맘 같아서야 아이들에게 험한 꼴 보여주기가 싫어 딴 곳으로 떠나고 싶었는데, 가야할 곳이 있어야지 가죠. 그래서 시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는데, 애들 엄마는 용역들에게 맞아 보름째 병원신세를 지고 있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은 교과서마저 용역들에게 뺏겨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있습니다.” 최승호(51) 씨가 긴 한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오늘은 지난번에 비하면 약과예요, 지난 12일 밤엔 용역들이 농성장을 완전히 박살 내고 갔어요. 물건이란 물건은 모조리 부셔서 주어오지도 못하게 만들었고 이를 만류하던 주민들은 병원에 차례로 실려갔죠. 농성이 라고 시작한 했는데 시장이고 시의원들이고 우리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저 용역들을 고용해 우리를 쓰레기처럼 없애버리려 하죠” 어머니 박순금(81세) 씨가 용역에게 맞아 전치 21주의 부상을 입고 입원중이라는 분석암(46) 씨의 말이다.

스산한 바람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하지만 귀인마을 주민 14명은 바람을 피할 곳도 없이 시청 앞에서 용역들의 폭행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었다.

### 야만의 20세기를 반추하는 인권영화제

한국영화 약진...올해의 인권영화상...뉴라운드반대 섹션

쌀쌀한 기운이 심지 않게 옷 속을 헤집고 들어오는 계절이 돌아왔다. 그리고 예정된 손님처럼 어김없이 ‘인권’과 ‘영화’가 의중계 만나는 소박한 잔치, 인권영화제의 소식을 전한다.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동국대학교 학술문화회관으로 찾아오면 값없이 그 자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준비한 상영작은 국내영화 14편, 해외영화 32편 등 총 46편.

지난 1년 동안 나라 안의 ‘표현의 자유’는 얼마나 진보했을까? ‘표현의 자유’를 측정하는 ‘바로미터’ 인권영화제의 대답은 진보도 퇴보도 아닌 ‘답보’다. 올 봄 개정된 영화법에서도 완전 등급제는 아직 보수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영화제 역시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 한해 등급심의가 면제된다. 여기에 ‘표현의 자유’를 원칙적으로 제약하는 국가보안법, 그 시대착오적 권능이 다음 세기까지 이어진다면 퇴보가 아닐까.

올해 인권영화제의 가장 눈에 띄는 경향은 ‘한국영화의 약진’이다. 국내작이 항상 기근이었던 전례에 비해 올해는 만선의 고깃배. 인권영화제의 문제작인 〈레드헌트〉의 2탄 〈국가범죄-레드헌트2〉를 비롯해 〈꽃파는 할머니〉 〈끝나지 않은 싸움-에바다〉 〈기차길 옆 공부방〉이 국내에서 최초로 상영된다. 〈국가범죄-레드헌트2〉는 전작의 문제 의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희생자들의 증언에 더욱더 집요한 카메라를 들이댄다. 감독은 정성스레 촬영한 제주도 사계를 증인의 밀그림으로 사용하는데 이는 흡사 ‘아름다움과 끔찍함이 공존하는 지옥’과 같다. 이 외에도 4·3 다큐멘터리 제작단이 제작한 4·3 피해자 시리즈 〈무명천 할머니〉와 부산 영화제, 다큐영상제에서 수상해 상복을 누리고 있는 〈만들레〉 등 14편이 관객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풍조는 ‘인권’을 다루는 국내 작가들이 서서히 지지개를 편 것과 인권영화제 측이 한국영화 선정의 폭을 넓힌 것이 가장 큰 이유. 주최측은 선정

조건이었던 ‘국내 최초 상영’을 완화해 관객에게 국내 영화를 두루 섭렵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인권’영화를 가려내어 ‘올해의 인권영화’를 선정 시상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 사형앞둔 무미아, 개막작 주인공

개막작은 미국 민권운동을 주도했던 ‘흑표범당’의 전모를 다룬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 : All Power to the People〉로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미국에서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가 외면당하고 있는 측면을 다각도로 드러내 준다. 미국의 대표적 양심수로 17년 제 복역 중인 ‘무미아 아부자말’ 역시 흑표범당 당원이었다. 얼마전 그의 사형이 확정되어 전세계의 양심적 세력들은 그의 석방을 외치며 연대하고 있다. 무미아의 옥중인터뷰도 수록되어있는 이 작품은 유럽 7개국에서 황금시간대에 방송되었지만 미국에선 방송금지된 영화. 일테면 ‘흑표범당’은 반국가단체(또는 이적단체)이며 이 작품은 ‘고무 찬양’에 해당되는 모양이다. 인권영화제는 영화제 전 기간동안 ‘무미아 석방’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무미아 석방을 요구하는 엽서를 관객들이 직접 작성하고 영화제가 이를 모아 미대사관으로 보낼 것이다. 이 작품과 함께 〈모락당한 나의 이름〉과 〈앨스턴가의 비밀〉은 미국의 인종 차별이 지닌 독성을 폭로하는 영화들이다.

11월 30일은 ‘WTO뉴라운드 협상’이

시예들에서 개막되며 또한 이에 대항하는 ‘전세계 민중행동’이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날이다. 영화제는 전지구적 민중 행동에 연대하기 위해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부문을 준비했다. 북미자유협정으로 빛어진 멕시코·캐나다 노동자들의 참혹한 삶을 주관적 카메라 시선으로 담아낸 〈황제의 새 옷 The emperor’s new clothes〉등 신자유주의의 횡포에 대항하는 작품 2편과 ‘WTO 뉴라운드 협상’을 관객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를 복속하는 퀴즈대회를 마련했다.

또한 인권활동가를 초청해 20세기를 반성하며 21세기의 인권의제를 관객과 함께 전망하는 토크쇼 ‘21세기 인권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준비중이다.

작년 상영작 목록에 올랐으나 운송사고로 누락된 〈슬픔과 연민 Sorrow and Pity〉도 놓치지 말아야 할 작품. 2차 대전 당시 프랑스를 휩쓸고 간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와 그에 복무했던 지식인의 허위를 받게버겨 놓은 이 작품 역시 ‘표현의 자유 중주국’으로 자부하는 프랑스에서 80년대까지 방송이 금지된 작품이다. 4시간 20분의 상영 시간을 염두에 두고 시간을 넉넉히 비워둬야 할 것이다.

영화제가 시작될 즈음 ‘새 천년’이란 단어는 더욱더 극성스럽게 유행으로 번질 것이다. 다가오는 세기에 대한 속 빈 희망보다는, 인권보다 야만이 휩쓸고 지나간 20세기를 진정으로 반성할 수 있는 ‘인권영화제’가 되기 위해 막바지 준비에 사력을 다할 일만 남았다. [김정아·인권영화제 기획]

### 제4회 인권영화제(11/26-12/2) 후원을 기다립니다.

- 일반후원회원 : 후원회비 1만원 (해설책자, 기념품)
- 특별후원회원 : 후원회비 10만원 (쇼아, 칠레전투, 4회성명작 중 1)
- 담당 : 인권운동사랑방 김정아, 남수영(문의: 02-741-2407)
- 입금계좌 : 국민 822-21-0276-824 서준식  
한빛 112-07-226091 김정아-인권영화제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천.하: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11월 20일(토)

제 1501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시민사회, 대 국회 선전포고

### “인권·개혁법안 8개 즉각 처리” 촉구

국보법 폐지·인권법 제정 등 인권·개혁법안의 처리를 미루고 있는 정치권을 상대로 각계각층의 시민사회세력이 선전포고에 나섰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민주방송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등 인권·개혁법안 공동연대기구들은 19

일 오전 11시 국회 후생관에서 「반민주악법 철폐와 민주개혁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범국민연대행동)을 결성하고 법안 처리에 관한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의 결단을 촉구했다.

범국민연대행동은 “국가보안법 등 8대 법안은 국민의 권리와 복지의 증진,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로 한 시도 지체할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

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 관련법안의 손질을 촉구했다.

범국민연대행동은 “정치권이 당리당락을 위한 정쟁 속에서 국회를 파행으로 가져가는 등 본연의 임무를 지버리고 있으며, 의도적으로 8개 법안의 개폐를 지연하거나 그 내용을 심대히 왜곡하고 있다”며 “여야 정치인들은 정쟁을 중단하고 반민주악법 철폐 및 민주개혁법안 제·개정 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민연대행동은 오는 11월 27일과 12월 1일을 ‘반민주악법 철폐 및 민주개혁법안 재개정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의 날’로 정하고 국회 앞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갖기로 했다. 또, 김대중 대통령과 3당 대표자와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들은 본격적인 정권 반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범국민연대행동이 요구하는 8대 쟁점은 △국가보안법 철폐 △인권법 제정 △의문사 진상규명 △명예회복보상법 제정 △노동시간단축 특별법 제정 및 근로기준법 개정 △민주적 통합방송법 제정 △교육관계법 재개정 △통합의료보험법 개정 및 약사법 개정(의료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 시행) △부패방지법 제정 등이다.

### ◎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

#### 전북 종교인, 40일 단식기도 정력

10월 11일부터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단식기도에 들어갔던 한상렬 목사(전주 교백교회) 등 전북종교인협의회 회원들은 19일, 40일간의 장기 단식기도회를 마감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오후 2시 전북 코아백화점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전북도민 총력결의대회를 열기로 했으며, 오는 22일 전주 전동성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국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국민회의, “선전·선동하는 이적단체만 처벌”

국민회의는 19일 오전 임채정 정책위의장 주재 하에 ‘국가보안법 대책 특별위’ 2차 회의를 열고 국가보안법 7조 3항을 일부 손질해 존치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부 개정될 7조 3항은 당초 ‘이적단체를 구성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했던 방안에서, ‘이적단체를 구성하더라도 구체적 선전·선동 행위에 나설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을 좁혀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를 내주 초 당론으로 확정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회의는 찬양·고무(7조 1항)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7조 5항), 불고지죄(10조) 등은 삭제하기로 했다. 또한 현 50일 까지 가능한 국보법 사범의 구속기간을 일반형사범과 같이 20일로 단축하기로 하고(19조 2항), 국보법 사범을 체포한 수사·정부기관요원에 대해 상금을 지급하기로 돼 있는 규정을(21조 2항) 없애기로 했다.

반국가단체(2조) 조항과 관련해서는 조항에서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정의 중 ‘정부참정’부분을 삭제, 북한의 태도변화 여부에 따라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 해고자, 회사 차에 뺑소니 당해

### 향의하던 노동자, 경찰 강제연행

회사차량이 농성중인 해고노동자를 천 후 뺑소니를 천 어 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오토론 해고노동자 장명남 씨는 18일 오후 5시경 구로 오토론 공장 앞에서 퇴근투쟁을 벌이던 중 회사차량에 치어 병원으로 후송됐다.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 장 씨는 “문 앞에서 차량정리를 하던 조제욱 업무과장이 나를 벽으로 밀쳐 쓰러트린 후 그 상태에서 차를 통과시켜 오른쪽 발등을 차에 밟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주변에서 장 씨의 사고과정을 목격한 장 씨의 동료 등은 사측에 사고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의 신원공개와 사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는데, 사측은 이를 수용하기는커녕 경찰에 이들을 신고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시위를 벌이던 노동자 14명은 1백여명의 전투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한 채 남부경찰서로 연행됐으며, 19일 오전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로 분산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재 수사의 불공정을 주장하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전국해고노동자복지투쟁위원회(전해투)는 “강남경찰서 김왕철 경찰관이 연행 노동자들에게 경찰이 작성한 조서를 시인할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강광용 경찰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연행자들의 목을 3-4차례 구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남경찰서 수사2계는 “노동자들 회사 앞에서 차량 통입을 막으면서 시위를 벌여 연행된 것”이라며 “사고는 피해자가 자가용 위에 올라가는 등 차량진입을 방해한 후 발을 차 바퀴아래 일부러 집어넣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폭행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전해투 소속 노동자 등은 18일 남부경찰서 앞에서 철야농성을 전개한데 이어, 19일 오후 오토론 공장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 행사와 동정

◇ 장애인 일할 권리 찾기 대규모 집회  
때 : 11월 20일(토) 오후 1시 장소 : 여의도 국민은행 앞  
주최 : 장애인 일권리 찾기 회원 등 (02-3473-1560)

◇ 제 4회 인권영화제  
때 : 11월 26일(금)-12월 2일(목)  
장소 : 동국대학교 학술문화회관  
주최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영화제 (02-741-2407)

◇ 제 4회 전주 인권영화제  
때 : 11월 26일(금)-30일(화)  
장소 : 전북대학교 합동강당 103호  
주최 : 인권영화제 전주 조직위원회 (0451-231-9331)

##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②

### 슬픔과 연민 Sorrow And The Pity

프랑스/1972/마르셀 오펠스 감독/다큐멘터리

〈슬픔과 연민〉은 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에서 발생한 일들의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를 집요하게 파헤친 작품으로, 당시 프랑스의 분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영화는 변절과 협력, 저항과 해방이라는 민감한 주제들을 당시에 기록된 귀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 회고와 재해석을 통한 다양한 시각으로 보여준다.

2차 세계대전 시 뉴스 릴 필름과 레지스탕스로 활약했던 사람들, 또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에 대한 감독의 끈질긴 추적은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집요한 인터뷰로 이어진다. 그러나 감독은 인터뷰에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입장을 마음껏 내세우도록 만든 다음 당시의 자료필름이나 또 다른 사람의 인터뷰를 등장시켜 그들의 허위를 들추어낸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로 평가받는 프랑스에서조차 TV 방영이 한때 금지되었을 정도로 프랑스인 모두가 감추고 싶어하는 가슴아픈 진실을 잔인하게 들춰낸 〈슬픔과 연민〉은 우리에게 다큐멘터리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준다.

### 세계인권선언의 역사 For Everyone Everywhere

미국/1998/다큐멘터리/빅토리아 솔츠 감독/제작 유엔

〈세계인권선언의 역사〉는 유엔이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세계인권선언의 역사를 다룬 교육용 다큐멘터리이다.

50년 동안 알려지지 않은 인권에 관한 소중한 자료들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이 영화는 4개 대륙을 무대로 촬영됐으며, 세계인권선언을 창설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담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의 모태는 아이러니 하게도 가장 반 인권적인 전쟁이었다. 약 5천명의 사상자를 낸 2차대전의 참상과 나치가 저지른 만행은 국내에서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는 언제든지 전 인류의 인권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 교훈에 기초해 45년 창설된 유엔은 인권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서약을 헌장에 담았고, 46년에 유엔 인권위원회를 설치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담은 ‘선언’과 구체적인 권리와 제한 범위를 명시한 ‘조약’을 만들어냈다. 이중 ‘선언’은 48년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그러나 ‘조약’은 현재까지 채택되지 못했다.

세계인권선언은 우리가 추구해야할 인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권위 있는 ‘인권 헌법’이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천·하)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11월 23일(화)

제 1502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뺑소니 차 찾던 해고노동자, 구속

### 연행자 진술거부도 문제가 돼

회사차량이 해고노동자를 치고 달아난 사건과 관련, 회사 앞에서 사고 운전자의 신원확인을 요구하던 해고노동자들이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구로구 앞에서 연행된 이상희(오른쪽) 해고노동자복지투쟁위원회 위원장과 장성환 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원상회 북 투쟁위원회(전해투) 위원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관련기사 본지 11월 20일 자>

이 위원장과 장 위원장은 지난 18일 회사차량이 이 회사 해고노동자 장명남 씨를 치고 달아나자 사측에 사고차량 운전자의 신원확인을 요구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시법 위반혐의로 강제연행됐다.

검찰은 "해고와 관련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 씨가 집회를 여는 등 실력행사를 주동했으며, 집시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를 취했다"며 이 위원장을 구속했다.

하지만 오후 해고노동자들은 "회사차량이 사고를 내고 회사 안으로 도망쳐 사고운전자의 신원확인을 요구하고 사고현장을 보전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을 뿐"이라며 "이에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분개했다.

한편 이 위원장과 함께 연행된 전해투의 장 위원장은 지난 14일 금속연맹 주최로 열린 '산재노동자 고 이상관 씨 사인 진상규명' 집회를 불법 시위로 이끌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전해투측은 "그 집회는 금속연맹의 집회로 우리가 나설 처지가 아니었고, 집회가 문제라면 주최측에 문제를 제

기해야지 왜 우리 위원장을 구속하는지 모르겠다"며 "경·검찰이 전례투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중 위원장이 연행되자 없는 혐의까지 만들어내 위원장을 구속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해투와 오후 해고 노동자들은 두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며 강력한 항의행동을 준비 중이다.

한편 이 위원장 등과 함께 연행됐던 오후 해고 노동자 12명은 지난 20일 모두 석방됐다.

## 제소자, 생필품 불만 잇따라 인권단체, '교정협회' 정보공개청구

생필품 등에 대한 제소자들의 불만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실천 시민연대 등의 인권단체는 22일 법무부에 생필품 선정을 담당하는 교정협회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교정협회는 교도소에 수용된 제소자들에게 식품, 생필품, 의류 등을 공급하는 법무부 소속의 재단법인으로, 교정공무원에 대한 복지, 후생사업, 제소자 교정교화업무의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교정협회가 공급하는 물품의

질이 일반물품보다 매우 나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제소자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협회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들은 "교정협회를 잘 알아야 제소자들의 후생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며 교정협회의 △제소자에 대한 교정교화 사업 지원 내역 △수익사업의 종류와 내용 △최근 2년간 총 매출과 순이익, 지출내역 △최근 2년간 교정협회와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 양군모, 단식농성 돌입 '병역법 시행령 개정' 요구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며 조계사에서 4백여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양심수군문제를위한모임(대표 문치웅, 양군모)의 회원들이 22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양군모 회원들은 양심수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만 27세 이상의 고령자와 형기 합산 2년 이상자일 경우 군대를 면제하고, △장기간에 걸친 수배자거나 실형 복역자들의 경우 공익 근무요원으로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군모는 오는 26일 농성 4백일을 맞아 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국방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을 계획이다.

## 제4회 인권영화제(11/26-12/2)가 후원을 기다립니다.

- 일반후원회원 : 후원회비 1만원 (해설책자, 기념품)
- 특별후원회원 : 후원회비 10만원 (쇼아, 칠레전투, 4회 상영작 중 1)
- 담당 : 인권운동사랑방 김정아, 남수영 (문의: 02-741-2407)
- 입금계좌 : 국민 822-21-0276-824 서준식
- 한빛 112-07-226091 김정아-인권영화제

인 권  
시 평

## '386세대'는 없다

이제훈 (한겨레 기자)

아마 96년 봄이었을 거다. 봄 대동제를 매개로 '취청거리'는 대학사회'를 취재하려 했다. 85년 대학에 들어가 단 30초도 버티지 못한 거리시위부터 87년 6월 항쟁까지 경험한 나로서, 90년대 학생운동이 어딘지 미덥지 않았다. 그 '미덥지 못함'을 찾아 비판적으로 기사를 쓰려한 것이다. 그때 대학생들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이 땅에서 대학생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지식인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는 어찌보면 초보적이고, 달리 보면 무척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다.

기자로써 본분에 벗어난 행동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난 각 대학 총학생회 간부들을 만나 '취재 반, 토론 반' 하는 식으로 '미덥지 못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가려 했다. 많은 학생회 간부들이 80년대 학생운동의 '신화'에 주눅들어있었고, 그때 거리를 누비고 공장으로 숨어들었던 '선배들'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었다. 한 총학생회 간부의 '질투'는 예기치 못한 것이었다. 허를 찔린 기분이었다. "우리에게 따라 배워야 할 선배가 없어요. 80년대 선배들은 자기는 다르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60년대나 70년대 민주투사로 싸우다 변절한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설피고 미덥지 않아 보이는 건, 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때 난 절반은 인정하고, 절반은 부정했다.

99년 겨울 들머리, 그 후배의 지적은 100%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타당한 것 같다. '386세대'란 말이 무슨 유명상품 브랜드처럼 온갖 곳에 머리를 들이밀고 있다. 그들은 싸이클로리진 제도정치권을 개혁할 '젊은 피'로, 또 사회구석구석에서 권위주의와 비효율에 맞서 '진지하면서도 자유분방한, 또 능력있는' 개혁의 투사로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고 있다. 심지어 민주화운동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한 보수일간지에서조차 '386세대' 장기 연재물을 실었고, 또 다른 일간지는 '386칼럼'이라는 걸 지면에 실고 있다.

'386'='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 대학을 다닌 30대'. 이런 식이라면 나도 '386세대'다. 그러나 나는 '386'이고 싶지 않다. 이 자리에서 '대학을 다니지 않았거나, 못다닌 30대는 그럼 뭐냐'는 식으로 사회적 배제가 짙게 밴 '386'이라는 조어법의 '반인권적' 뿌리를 문제삼을 생각은 없다. 그 말에는 고단했던 군사독재 시절 온몸을 던졌던 젊은이들의 끈끈한 동지애와 분노, 열정 따위가 담겨있기도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언젠가부터 잊을만하면 한번씩 소위 '386세대'의 새로운 모임이 결성됐다는 각종 안내장이 날아든다. 어떤 모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회원이 돼 있다. 뼈빠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임이 내건 거창한 명분에서 나는 제도정치권에 진입하려는 '야망'을 본다. 닷할 일만은 아니다. 다만 나는 그저 몹시 우울하다는 점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우리 이제 '386세대'란 말은 그만 쓰자. 가슴이 아프다.

## 주간인권흐름

(99년 11월 15일-11월 21일)

1. "할 일이나 좀 제대로 해라"  
국가보안법 폐지, 인권법 제정 등 8개 인권·개혁법안의 올바른 제·개정과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를 요구하며 시민사회단체, 「반민주악법 철폐와 민주개혁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 결성 (19일)

2. 제 2, 제 3의 이근안 속출  
이근안에게 고문을 받았던 함주명, 박충렬 씨가 이 씨 이외에 다른 경찰관도 고문에 참여했다고 밝히, 고문수사관 한종철, 이동구, 이봉구 씨 등 (18일) / 이근안의 배후세력 박치원 전 치안감도 직접 고문에 나섰다 는 주장이 제기돼

3. 장애인 수난시대  
장애인들, "일 할 권리"를 요구하며 여의도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 (17일) / 민중대회에 참여했던 장애인들이 걸음이 느려 교통흐름에 차질을 준다는 이유로 경찰에 강제연행 돼 (14일)

4. 숫자를 줄이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어드나?  
보건복지부, 1백92만명에 이르는 전체 생활보호대상자를 2천년 1백76만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히.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예산도 4.1% 삭감돼 (16일)

5. 미군이 사람잡네 - 양민학살에 이어 고엽제 살포  
68-69년 주한미군이 한국군을 동원해 베트남 전쟁 때 사용했던 고엽제를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에 대량살포한 것으로 밝혀져 (15일)

6. 금정굴, 알고 보니 한국경찰의 소행  
한국전쟁 시 1백6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어 온 고양시 금정굴 사건은 경찰이 북한군에 협조한 부역자를 색출한다는 미명하에 민간인들을 수직 폐광굴로 끌고 가 불법 처형한 사건으로 밝혀져 (21일)

7. 탈북자의 70% 이상이 기아로 죽은 가족 있어  
탈북난민보호 유엔청원 운동본부가 "중국에 있는 탈북자 1천3백83명을 조사한 결과 이중 77% 이상이 굶어죽은 가족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밝히

8. 특별검사팀, 털면 먼지난다  
파업유도 사건의 강원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팀의 운용방침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김형태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3인, 사임계 제출 (18일)

9. 또 퇴짜. 노동부, 민주노총 설립신고서 반려  
노동부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합원으로 돼 있다"며 민주노총의 설립신고서를 다섯 번째 반려하자 민주노총, 강력투쟁 시사 (16일)

###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③ ▶ 한국편

#### 기차길 옆 공부방

1999/감독 서경화/제작 푸른영상/50분 /다큐멘터리

일제시대부터 형성된 인천의 대표적인 빈민가 만석동에는 11년 전부터 이 곳의 지역공동체를 이끌어 온 '기차길 옆 공부방'이 있다. 이 공부방의 정신은 가난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들은 '가난'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의 정신을 지키며 사는 대안적 가족공동체를 꿈꾼다. 영화는 공부방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이들과 부모들의 치열하고도 따뜻한 이야기를 담는다.

감독은 '마음이 가난해서 복 있는 사람들'의 행복한 공동체와 1년간 동거동락 하면서 그들의 삶을 카메라에 담아내는데 성공했다.

#### 또 하나의 세상

1999/감독 김동원/제작 푸른영상/42분/다큐멘터리

행당동 철거민들은 3년여에 걸친 철거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95년 말 임시거주 시설에 안착했다. 영화는 가난과 철거를 딛고 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운동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건설하고 있는 행당동 철거민들의 삶을 담고 있다.

강제철거는 개인이나 가족 공동체의 의사에 반한 상태에서 적절한 보호장치 없이 이뤄진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를 심각한 주거권 침해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강제철거가 주거권 뿐만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 등 다른 권리마저 위협하기 때문이다.

#### 무명천 할머니

1999/4.3 다큐멘터리제작소/김동만/다큐멘터리

작품은 제주 4.3 항쟁 때 고향집 앞에서 총을 맞아 턱을 잃고 평생을 기구하게 살아온 83살의 진아영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할머니는 그날의 공포를 지고 평생을 살아왔다.

이 영화는 4.3 피해자의 측면에서 할머니의 비운을 짧은 시간이지만 강력하게 보여준다.

#### 먼지의 집

1999/연출 네트워크/50분/다큐멘터리

진폐증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사북에 간 제작진은 그 곳의 긴박한 상황을 보고 계획을 수정하여 '석탄산정제'의 일환으로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광부들의 투쟁을 담았다. 사북 동원단지의 하청업체인 제일기업은 폐업을 결정하고 노동자들에게 해고를 알린다. 갑작스러운

해고통지에 노동자들은 보상거부운동을 펼치며 저항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대표부는 일방적으로 사측과 타협을 보고 이에 노동자들은 보상안에 대한 이견으로 동료들과 심한 갈등을 겪게 된다.

생존을 위해 지하 막장에 몸을 던져왔던 노동자들이 인생의 막장을 경험하게 된 속내를 카메라 앞에 토해낸다.

#### 꽃 따는 할머니

1999/감독 박성미/제작 다큐인/50분/다큐멘터리

한국전쟁 이후 미군 기지촌을 떠돌며 살아온 꽃다운 처녀들은 이제 할머니가 됐다. 생계를 위해 클럽에서 꽃을 따는 할머니들, 이들의 다른 이름은 미군 위안부.

한국전쟁 이후 가난한 여성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기지촌에 몰렸듯이 할머니들 역시 먹고살기 위해 기지촌을 찾게 됐다. 1백년을 벌면 80살은 포주에게 바치며 살아야 했던 할머니들은 이러한 착취와 함께 사회적 멸시와 냉대 때문에 그렇게도 지긋지긋한 미군기지를 떠나지 못하고 시든 화초처럼 생을 마감하고 있다.

감독은 "강제적이란 문제는 반드시 물리적 차원에서만 해석할 수 없다"고 작품을 통해 주장한다.

#### 꼭 한 걸음씩

1999/감독 태준식/제작 노동자뉴스제작단/45분/다큐멘터리

영화는 청구성심병원 노조의 투쟁 보고서로, 위장 폐업과 구사대의 폭력, 회유와 협박 등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사측의 횡포와 그에 직면해 싸워야했던 노동자들의 힘겨운 투쟁을 영상으로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정권과 언론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시민들의 발목을 잡거나 환자들을 방패로 삼아 투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본권과 생존권의 문제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을 강요한다.

영화는 유엔된 기본적 권리를 복원하는 일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 끝나지 않은 싸움 예바다

1999/감독 박종필 /다큐인 제작/50분/다큐멘터리

농아원생들에 대한 제단축의 참혹한 인권유린으로 세간에 많이 알려진 농아학교 예바다. 국민의 정부는 예바다의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분쟁과 폭력만 되풀이 될 뿐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3년여의 걸친 예바다 농아원생들의 투쟁은 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혁명적인 투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예바다 투쟁이 승리하느냐 패하느냐에 따라 장애인 복지의 향후 20년이 발전이 될지 퇴보가 될지 결정될 것"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천하: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11월 24일(수)

제 1503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사장이 노조원 폭력 사주

### 고려운수 사태 새 국면...서울시 중재키로

지난 17일 고려운수(사장 송현준) 사업장에서 발생했던 용역강제의 노조원 폭력사태는 사장의 치밀한 준비 하에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본지 11월 18일 자>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승규, 민택노련)은 23일 송 사장이 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비롯해 폭력 행위를 사주한 메모, 경찰에 보낸 시설보호요청서 등을 공개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송 사장은 지난 17일 용역업체 (주)퍼스트인터뷰와 7백 50만원에 용역 30명을 동원하기로 계약했다. 송 사장은 이어 용역들에게 노조간부 7명의 사진을 확대 배포했으며, 주민들의 이목을 끌려해 회사진입 이전에 용역들에게 택시기사용 점퍼와 직용용 현 장갑을 착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 동부경찰서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노조가 불법파업으로 사내를 장악하고 있어 사내정리 시 노조 측과 물리적 충돌이 야기될 수 있다"며 시설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용역들은 17일 오후 1시경 지게차를 들이밀고 사업장으로 쳐들어와 파업중인 노조원들을 폭행했다. 당시 폭력사태로 노조원 30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 중 3명은 아직도 병원에 입원중이다.

사장이 폭행을 사주한 내용의 메모가 발견되자 고려운수 노조원들은 "사장이 서울시 방점으로 정해진 완전월급 제 시행을 미루며 노조원들의 파업을 유도하더니 이제는 폭력사태까지 유발하고 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송 사장을 구속시키고야 말겠다"고 분개했다.

고려운수 조합원들은 완전월급제 실

시를 요구하며 지난 5월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송 사장은 노조원들과의 교섭을 회피하며 파업이 장기화되자 사업장 폐쇄를 해왔다. 한편 고건 서울시장은 23일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려운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교통관리실장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고려운수 서울시 시민 진상조사·중재단」에 파견해 진상조사 및 노사 교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민택노련은 "사태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개입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했다.

### 아동권리조약 채택 10년과 아동인권의 현실

지난 11월 20일은 유엔에서 아동권리조약을 채택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자본주의 초기의 아동들은 노동에 투입돼 질병과 기계에 압사당하고 심지어 전쟁에 동원되는 등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20년대부터 국제사회에서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고 2차대전 이후 세계인권선언과 양대 국제인권조약이 탄생하면서 '아동의 권리'는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태어난 것이 1989년의 유엔 아동권리조약이었다. 아동권리조약은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독자적 개체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성인의 권리에 못지 않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지금 전세계 아동의 권리수준은 어떠한가?

유엔에 의하면 현재 전세계의 18세 이하 아동 30여만명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는 전세계 5-11세 아동 5-6천만명이 위험한 직장 에서 일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태국이나 네팔에서는 15세 이하 여자가 이가 공장지대에 보내지거나 역주변에서 매춘행위를 한다고 전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제노동기구는 18세 이하의 아동이 매춘과 노예, 포르노,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약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 유엔은 15세 이하 아동을 징집하는 것은 신설될 국제형사 재판소(ICC)의 법규에도 어긋나는 전쟁범죄로 규정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결의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여러 나라들은 아동의 전쟁동원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91년 이 조약에 가입한 우리나라에서 아동권리는 아직 관심권밖에 놓여 있다. 인천 호프집 사건에서 불을 낸 입아무개(14세)군이 가출 후 콜라텍 등지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면서 일당 천원도 제대로 받지 못 것이 드러났다. 은밀한 형태로 아동에 대한 권리침해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지금 시점에서 얼마전 우리나라를 방문한 국제노동기구의 엘리스 우에드라고 정책개발국장의 지적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아동노동현황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가정내에서 벌어지는 기사노동이나 밭일, 매춘행위 등 숨겨진 아동노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의정부 환경미화원 10여년만의 저항

1년에 휴일은 단 3일 · 일방적 정년단축

“얼마 남지 않은 생...,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최근 환경미화원 김기열 (56, 시설관리공단노조 위원장) 씨는 작업이후 의정부 동부광장으로 나가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10여년간 묵묵히 환경미화원 일만 해온 김 위원장이 의정부시(시장 김기형)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 의정부경찰서로부터 매일마다 협박성 전화에 시달리게 된 것도 불과 몇달 사이에 일이다.

지난 8월 의정부시 환경미화원들이 시설관리노조를 결성한 이후 시작된 시 · 경찰 · 공단의 탄압은 70 · 80년대를 연상시킬만큼 원색적이다. 의정부시 환경미화원들은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추석 연휴 3일을 쉬었고,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연행돼 이틀간 조사를 받았다. 또 지난 10월 서울 명동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기 위해 이동 중인 노조원들에 대해 2백여명의 전투경찰이 의정부역에서 승차를 원천봉쇄하고 불법 불심검문을 벌여 가방에 들어 있는 ‘원적복직’ 머리띠를 빼앗아 가는 일도 발생했다.

이 싸움은 시청이 관할하던 폐기물 담당 사무가 지난 7월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면서 비롯됐다. 위탁과정에서 미화원들은 일괄사지 후 6개월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진 퇴직하는 것 중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공단과 시는 미화원들에게 단순한 사무위탁이므로 노동조건은 차이가 없다고 약속까지 했다.

그러나 61세였던 정년을 57세로 단축하고 정리해고까지 실시해 백여명이 하던 일을 남은 73명의 미화원이 감당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시설관리공단은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작업시간도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1차 작업,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2차 작업으로 못하고 지정된 작업시간과 장소를 매시간 확인하며 블루 카드와 옐로우 카드제까지 시행했다. 노조의 흥희덕 사무장은 “7월 동부간선도로에서 청소도중 사망한 미화원의 경우, 전에는 차가 덜 다니는 오전 9시부터 작업을 시작했는데 공단 위탁 후 오전 6시에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공단측은 리어가 수리업체도 한곳으로 지정해 다른 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미화원이 자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오토바이나 휴대폰을 사라야 할 때까지 넣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미화원에 대한 후생복지는 도외시돼 저녁모임을 가질 만한 번번한 장소조차 없이 배수리가 지나가는 시민회관 지하실에서 미화원들은 모임을 갖곤 했다. 공단측은 노조가 결성되자 지하실의 의자마저 치워버렸다.

한편 지난 10월 의정부시 노동 · 시민단체는 환경미화원 임금형편에 대한 공동조사를 벌여 시와 공단이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횡령 및 착복했으며 그 액수만도 5억여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의정부 환경미화원의 60%이상은 40 · 50대로 30일 기준 기본급 42만원에 각종수당을 합쳐 평균 15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지만, 이들의 휴일은 일년에 단 3일인 생일 · 설 · 추석 뿐이다.

<독자투고>

###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저는 장애우일할권리찾기연합(이하 일권연)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호경입니다. 우리 실업 장애인 9명(일권연 회원)은 지난 11월 17일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외벽에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파가 밀어닥치는데 웬 단식농성이냐구요? 맞습니다. 한파가 밀어닥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거리가 없어 길거리를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그 한파를 맞으며 단식농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거리를 찾기 위해 우리는 추위 속에서 텅 빈 속을 달래며 떨고 있습니다.

따스한 물 한 모금보다 더운 밥 한 그릇 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이 필요합니다. 일을 해서 당당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장애인은 남에게 손을 빌려 빌어먹고 살아야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부 당국은 우리가 직업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대책(장애인가용촉진법)을 세웠지만 우리는 그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는 상담조차 받지 않으려고 할뿐 더러 아예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설혹 몸이 덜 불편한 경증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고용율 0.54%라는 아주 미미한 수준에 불과해, 우리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33살의 지체장애인입니다. 대학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기업에서 이런 나를 바라본다면 결코 자기 기업에 채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저와 같은 사람은 결코 그 법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장애인직업재활법」은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 대한 고용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했습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들은 지원고용이라는 형태를 통해 얼마든지 기업에 고용 혹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정쟁으로 시간을 잡아먹고 있고 정부는 이렇다할 묘수를 찾지 못한 채 법 제정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직업재활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돼 우리 또한 일할 권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 장애인도 세금을 내는 당당한 국민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운 겨울을 앞두고 단식농성에 나선 것입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이 「장애인직업재활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우일할권리찾기연합 대표 박호경

###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④ ▶ 한국편

#### 민들레

1999/감독 이경순, 최하동하/제작 노동자뉴스제작단/45분/다큐멘터리

국민의 정부 이후 유가협 투쟁을 기록한 작품이다. 서울 여의도 한복판인 국회의사당 앞. 인도 한 귀퉁이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에는 유가협 소속 초로의 어머니, 아버지가 억울하게 숨진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유도 모른 채 숨저간 자식들의 사인을 규명하자는 한결같은 바람으로 10여 년의 세월을 씬 없는 싸움속에서 보내왔다. 이들은 농성을 멈출 생각이 없다. 투쟁을 멈추는 순간, 자식들에게 진 빛을 갚을 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 탈북 소년들 중국에 가다.

1999/연출 변재성/35분/다큐멘터리

이 영화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두만강을 건넌 꽃재비를 취재했다. 식량난을 전후로 정치범이거나 범죄자였던 소수의 탈북자들에서 자신과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는 대량 탈북자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강을 건넌 탈북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중국 공안들의 감시와 인신매매, 강제송환에 대한 두려움이다. 영하 30도에서도 땅바닥에서 잘 수밖에 없는 꽃재비들의 생활과 인간적 멸시, 성적유린과 천대는 중국 내 탈북자들을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게 하지만 이들은 식량을 기다리는 가족과 통일이라는 꿈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다.

#### 조국은 없다.

1999/감독 변재성/25분/다큐멘터리

1988년 탈북한 김용화. 남한정부가 그를 탈북자로 인정하지 않아 11년째 아시아 각국을 떠돌고 있는 김 씨의 기구한 사연을 담았다. 김용화 씨는 지난 1988년 북한 철도부내 승무 지도원으로 근무 중, 열차화재에 대한 문책과정에서 정치부장을 폭행한 뒤,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출했다. 이후 여러 차례의 귀순 요청을 거절당하고, 95년 '위조 중국거주민증' 때문에 또다시 추방될 위기에 처한 김 씨는 다시 일본으로 밀항을 해 지금은 일본의 수용소에서 일본정부의 난민자격을 얻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11년의 유랑생활은 그에게 "조국은 없다"라고 되뇌게 한다.

#### 열대야

1999/감독 김근호/195분/다큐멘터리

195분의 장편 다큐멘터리 <열대야>는 치밀한 구성도, 작가의 발언을 세련되게 배치하는 기술도 없다. 1998년 여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 현장에서 '마구' 찍어

이어 놓은 듯한 이 작품은 다큐멘터리로서 부담스러운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지루함 없는 현장의 긴장과 분노 그리고 유머를 보여준다. 영화는 정리해고에 처한 노동자들이 내뿜는 날 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담아 촘촘히 기록해, 이른바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투쟁실록'이 된 것이다.

#### 장애인 김진욱씨의 결혼이야기

1999/제작 김진열/40분/다큐멘터리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40살의 김진욱 씨는 얼마 전 정상인과 결혼을 해 정상아를 낳았다. 여성장애인이라는 이중고를 극복하며 밝게 살아가는 김 씨의 일상을 담았다. 장애인의 문제는 그들 또는 그 가족들의 문제로 사적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체 장애인의 45.7%인 47만 여명을 차지하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소수자 중의 소수자 문제로 제대로 거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가 발표한 '97 전국실태조사'와 '98년 차별사태 연구자료에 의하면, 여성 장애인들은 가족과 비 장애인들로부터 더 많은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가범죄 - 레드헌트2

1999/감독 조성봉/제작 하늬영상/90분/다큐멘터리

1997년 11월 경찰은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서준식을 구속했다. 혐의 중 하나는 '이적표현물인 <레드헌트>'를 제2회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했다는 것. 이후부터 지금까지 <레드헌트>는 이적표현물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상영되는 곳마다 정부와 잦은 충돌을 빚었지만 국내 독립영화 최고의 히트작이 되었다. 2년 후 감독은 그 때 못다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한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4·3 항쟁의 진실을 생존자의 증언과 역사자료를 동원해 밝혀낸다. 작품 전체는 제주도 사계의 아름다움으로 눈이 부신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화살의 그 때를 더욱 끔찍한 악몽으로 되새기게 한다. 감독은 말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 악몽의 세월을 공유하고 있는 노인들의 한 맺힌 증언과 삶을 통해 50년 전 제주의 참혹한 화살과 인권유린의 실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승만 분단정권과 미국의 범죄행위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 소리 Sound

1999/연출 최태규/13분/다큐멘터리

벌써 49년째,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매항리에는 미 제7공군 소속 비행기 사격훈련장은 주민들의 슬한 진정과 투쟁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이다. 그동안 오폭으로 인한 사상자와 소음 때문에 정신분열로 자살한 사람도 여러명이지만 그렇다할 피해 보상도, 진상규명도 없다. 매항리 사람들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강렬하게 표현한 이 작품은 마치 전시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떠올리게 한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전하: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11월 25일(목)

제 1504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뉴라운드에 모라토리엄을!

### WTO에 대한 포괄적 조사 촉구

'WTO-뉴라운드협상'이 오는 30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외 대표적 시민사회단체가 이에 대한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영화인회의, 환경운동연합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민중행동)은 24일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WTO-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민중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무역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WTO가 지난 94년 출범한 이래 세계적 빈곤이 더욱 극심해졌을뿐더러 고용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문화적 다양성이 제거되는 등 전세계 인류가 수세기동안 쌓아온 민주주의와 사회진보가 무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WTO-뉴라운드 협상'체제의 출범은 전 세계 민중들의 삶의 질을 더욱 하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에 대한 평가와 사전 대책없이 열리는 'WTO-뉴라운드 협상'을 즉각 유보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세계 민중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중행동은 오는 27일과 30일 'WTO-뉴라운드 협상'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서울과 지역에서 공동적으로 개최하고, 'WTO-뉴라운드 협상' 시기에 맞춰 미국 시애틀에 대표단을 파견해 이에 대한 반대운동을 가져갈 계획이다. 또 한국정부의 입장을 별도로 모니터해 'WTO-뉴라운드협상'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물론 정권 반대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세계 정부들 역시 기존에 전개된 WTO협정의 불평등성을 제기하며 'WTO-뉴라운드협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선전물 배포 철거민 연행

철거가 진행중인 서울시 이문동에서 대책없는 철거에 반대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만들어 배포하던 전국철거민연합회원 3명이 24일 오후 3시 30분경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 <자료> WTO-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의제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될 WTO 제 3차 각료회의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뉴라운드)을 출범시킨다는 목표아래 현재 뉴라운드에서 다루게 될 의제의 범위, 협상의 원칙, 기간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1백36개 국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뉴라운드의 쟁점으로는 지난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이미 논의가 약속된 '농업협정', '서비스협정', '지적재산권협정' 등이 있다.

농산물협정은 "공산품 교역 수준의 자유화"를 주장하는 입장과 "식량안보, 농민생존권 보호 등"을 주장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한국은 UR 협상에서 농산물관세의 대폭인하와 농민에 대한 각종보조금의 감축 등을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유전자 변형농산물(GMO)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미국 등은 "과학적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GMO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서비스협정(GATS)에서는 11개 분야 1백55개 서비스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유화·개방화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미 한국은 지난 UR 때 이 중 8개 분야 78개 업종에 대하여 시장개방을 약속한 바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개방확대는 물론 교육, 보건, 사회 서비스에 대한 시장개방도 논의도 전개될 전망이다.

지적재산권협정과 관련해서는 '생명특허권'을 둘러싼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프리카 정부그룹에서는 지적재산권협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식물 및 미생물은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미국 등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또, OECD와 WTO는 다자간 투자협정을 추진중이나 제3세계의 반대로 아직까지 의제설정은 되지 않은 실정이다. 다자간 투자협정은 '해외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차별원칙, 이익의 완전한 본국회수, 국내기업에 유리한 제도적 혜택 제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투기자본의 활동까지 보장하는 것은 물론 초국적기업들이 자신들이 이익에 침해되는 정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다.

## "비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없어야"

법조계·인권단체, '국제법의 국내법 적용' 촉구

이근안의 구속을 계기로 고문범죄의 공소시효 문제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24일 국회 본청에서는 '반인도적 범죄와 공소시효의 문제'를 논의하는 모임이 열렸다. 국회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모임이 주최한 이 모임은 법조계인사와 인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모임에서 조시현(성신여대)교수는 "국가가 저지른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국가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사실상 면책하는 것과 다를 없다"며 "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운 변호사도 "국내법에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처벌하도록 해야하며, 당장 이근안 사건과 같은 경우 특별법을 제정해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반인도적 범죄행위자에 대해서는 면책이나 사면의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 국제상설형사재판소법을 비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 관계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 내에서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됐음에도 일본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 단죄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한 모습이 국내에서도 재현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민가협은 남규선 총무도 "정권의 정치논리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처벌 여부가 판가름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국제법을 국내법에 적용해야한다"고 밝혔다.

### <해설>

반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라는 개념이 국제사회에서 처음 정립된 건 나찌전범을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뉘른베르그 재판부터다. 93년 유고슬라비아 임시 전범재판소, 98년 국제상설형사재판소의 설립 등을 거치면서 반인도적 범죄의 개념은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공격을 가함으로써 일반적인 형사범죄보다 그 비인도성이 강해 도덕적 비난 또한 큰 사안"으로 정리됐다.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와 관련해 국제사회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1968년에 열린 유엔총회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시효부작용조약'(시효부작용조약)을 채택했으며, 93년 비엔나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재확인됐다. 나아가 비엔나 선언은 불처벌(impunity)금지의 원칙을 확립해 △범죄인의 지위에 따른 면책행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는 행위 △정치적 편에 의한 사면행위 등을 일체 금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 헝가리 등을 비롯한 세계 80여국이 시효부작용조약에 가입했으며, 불처벌금지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시효부작용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두고 있다. 예외적으로 지난 95년 제정된 '5·18 특별법'은 전두환, 노태우의 재임기간을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으로 상정해 공소시효의 일시 정지를 인정하기도 했다.

##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⑤

### 변방 Outskirt

우크라이나/1998년/감독 피터 뤼지크/제작 레브 카그노/95분

우랄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필립과 그의 동지들은 민영화 이후 자신들의 농장이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팔렸음을 알게 된다. 그들은 땅을 되찾기 위해 동지들을 규합하고 '땅 되찾기 대장정'에 들어간다. 이들은 거래에 연루된 마을 이장, 당 간부, 공무원 등을 찾아가 그들을 응징하려 하지만 오히려 동지들이 죽거나 다치고 만다. 그러나 이들은 '병력'의 손실을 무릅쓰고 모스크바까지 진출해 이 거래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석유 자본가를 찾아낸다.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 준비해 온 돈을 건네는 이들에게 자본가는 코웃음을 치며 자신이 전세계에 이룩해 놓은 석유왕국의 건설을 역설한다. 영화 말미, 주인공들이 자본가를 응징하고 집단 농장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공산주의의 부활을 염원하지는 않는다.

"이 영화가 코믹한 패러디라고 하지만 러시아 사람들에게겐 결코 그렇지 않다. 이 영화는 러시아의 현재를 가장 리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코드를 가지고 있다"는 한 러시아 네티즌의 평처럼, 이 작품은 변화된 체제 아래 시달리고 있는 '민중들의 삶'을 담고 있다.

### 소코로 노브레 - 삶은 어딘가에

### Socorro Nobre - Life Somewhere Else

브라질/1996년/감독 윌터 살레스/제작 미니 커티/23분

<소코로 노브레>는 <중앙역>의 윌터 살레스 감독이 1996년 제작한 시적인 다큐멘터리이다.

조각가 프란스 크라지크베르그는 나치의 탄압으로 가족을 모두 잃은 후 브라질로 망명했다. 그는 인적이 드문 브라질 해안에서 일생을 보내면서 조각가로 입지를 굳힌다. 어느 날 그는 브라질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여성 제조사 소코로 노브레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 소코로는 남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죄로 21년 4개월을 선고받고 4년 9개월 체 수감 중.

그녀는 프랑스의 예술이 표현하는 희망과 인간에 대한 신뢰에 대해 질문한다. 희망을 향한 갈망과 그것에 대한 회의의 양극단을 오가는 그녀의 편지에는 수인의 서러움이 진하게 베어있다.

브라질 여성교도소의 폐쇄적인 공간을 접사로, 프란스의 조각들이 받을 담고 있는 브라질의 광활한 해안은 먼 거리 샷으로 잡아 이들의 희망과 구속을 대비시키고 있는 이 작품은 95년 소코로가 가석방되는 것으로 끝나는 해피엔딩이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전하: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11월 26일(금)

제 1505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차라리 국가를 민영화하지

### 전력산업 분할·해외매각 위협에 전력노조 등 농성

“전력산업을 분할·해외매각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며,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가가 외면하겠다는 반민중적 행위에 불과하다”

전력산업의 분할과 해외매각을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구조개선추진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력산업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전력노조 등 전력산업 노조로 구성된 「전력산업 구조개혁저지 공동투쟁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력산업 분할·해외매각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들은 25일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력산업의

분할과 해외매각 및 제벌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농성에 들어감은 물론 오는 29일부터 경교성 준법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력산업의 분할과 해외매각은 물론 잇따라 추진될 공공부분의 민영화 정책은 국가가 책임져왔던 공공영역을 초국적 자본과 제벌에게 팔아치우는 반민중적 행위”라며 “결과적으로 국가의 공공성 포기는 물론 국부의 유출과 대외종속의 심화, 나아가 국가주권마저 포기하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의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국전력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등 6개 전력산업 노조를 중심으로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 2일을 총력투쟁의 날로 정하고 국회 앞에서 대규모 투쟁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이들은 본격적인 반정부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 술취한 철거용역, 철거민 폭행 경찰, 실신 철거민 조사 중용

동절기 철거가 불법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던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회원들이 철거용역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관련기사 본지 11월 24일자> 24일 이문3동 재개발지역에서 유인물을 나눠주던 김상초 씨 등 전철연 회원 10여명은 이를 방해하려는 백주건설 소속 용역원 10여명에게 폭행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회원들은 타박상과 인대가 늘어나는 부상을 입었고 김영란 씨는 실신하기도 했다.

김 씨는 “겨울철 강제철거는 국무총리령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선전물을 배포할 뿐이었는데 술냄새를 풍기는 철거용역들이 다가와 폭력을 행사했다”며 “폭행신고를 받고 달려 온 이문3동 파출소 경찰관들 역시 철거용역들을 추궁하기는커녕 병원으로 후송중인 전철연 회원들에게 ‘폭행 현행범’이라며 조사를 받기 위해 파출소로 이동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신작파의 상상력」 저자 조지 카치아피카스 교수와의 간/담/회/

일시: 11월 26일(금) 오후 3시  
장소: 사회진보연대 사무실  
주최: 사회진보연대 (778-4001)



만화사랑방

여동수

## “법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 고문피해자들, “고문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당신은 나를 죽이겠다고 했지만 나는 살아있다. 만약 당신이 지난날에 대해 참회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법이 아닌 내가 당신을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25일 목요일에 참가한 이장형(일본간첩사건, 84년 치안본부 남영동분실에서 67일간 이근안에게 고문당함) 씨는 이근안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하며 이렇게 외쳤다.

이근안에게 고문을 당한 서경원, 이장형, 함주명(83년 치안본부 남영동분실에서 이근안에게 60여일간 고문당함) 씨를 비롯해 박동운(81년 진도간첩단 사건으로 일가족 7명이 안기부에서 고문당함), 김삼석(93년 남매간첩단사건) 씨 등 고문피해자 25명은 25일 오후 탑골공원에서 열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목요일집회에 참석해 기자회견을 갖고 고문수사관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전면적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이근안 등을 처벌하기 위해,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시효부작용, 고문범죄행위 등에 대한 진상규명,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 치료를 위한 재활센터 건립 등을 그 내용으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 <고문피해자들의 증언>

- ▲ 중부지역당 사건(92년)의 손병선 씨 : “안기부 수사관들이 의사까지 대기시켜 놓은 상태에서 고문했다”
- ▲ 조선노동당 가입사건(95년)의 박창희 교수 : “문민정부는 출범 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는 등 고문종식을 주장했지만 잠안제우기, 집단구타 등 고문수사를 기했다”
- ▲ 민족해방 노동당사건(86년)의 심진구 씨 : “손을 뒤로 한채 제끼고 책상위에다 내 성기를 놓고 몽둥이로 쳤다. 두차례.. 10분씩.. 차라리 죽는게 낫지.. 한 대만 맞아도 기절초풍할 정도다. 그들은 좋아라 히히덕거리며 즐겼다”며 정형근에 의한 고문피해 주장
- ▲ 일본관련 간첩사건(84년)의 이장형 씨 : “나를 발가벗긴 후 물고문, 전기고문을 시킨 다음 만약 간첩혐의를 시인하지 않으면 자녀와 부인에게도 똑같은 고문을 가하겠다는 협박을 해왔다”며 이근안의 의한 고문피해 주장.

제 4회 인권영화제가 바로 오늘(26일) 오후 7시 동국대학교 학술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 개막식 : 11월 26일(금) 오후 7시
- 개막작 :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
- 문의 : 김정아, 남수영 (02-741-5363)

##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⑥

### 모략당한 나의 이름

#### Scandalize My Name-Stories from the Blacklist

미국/감독 알렉산드라 아이슬리스 /60분/다큐멘터리

1950년 2월 9일 상원 의원 매카시(Mccarthy)는 웨스트버지니아의 선거 유세장에서 “정부 관리 중에 공산당원이 2백5명이나 있고, 그 명단까지 갖고 있다”고 폭탄 발언을 한다. 그의 발언은 견잡을 수 없는 폭풍이 된다. 정부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민간단체나 극우조직들까지 소위 ‘리스트’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에 할리우드의 영화인들 중 2백여 명이 공산당원으로 낙인 찍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에 ‘자유의 나라’ 미국을 찾아와 무대에 선 수많은 흑인 배우들은 하루아침에 ‘빨갱이’로 몰려 청문회에 불려다니게 된다. 그 대표적 배우가 3, 40년대 축구선수·가수·배우·흑인인권운동가로서 다방면에 재능을 발휘하던 폴 로베슨. 그의 노래 ‘모략당한 나의 이름(Scandalize my name)’이 불운한 그의 인생의 전주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 외에도 흑인배우의 명예라고 평가받았던 캐나다 리, 뮤지션으로서 명성을 날린 헤이즐스카트, 미국 흑인 극장의 프레드릭 오닐, 배우 헨리 벨라폰테, 오지 데이비스, 로제트 르노와르 등. 이들은 이후 오랫동안 무대나 스크린에서 사라져야 했다.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캐나다 리처럼 생계를 위해 거리를 떠돌다가 사라져버린, 그리고 그 모략의 광풍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참한 운명들이 밝혀진다.

영화는 매카시즘이 만연한 그 당시, TV산업에 아프로 아메리칸의 등장을 반대하는 일련의 정치적, 경제적 힘이 작용했음을 또한 알려준다.

### 잃어버린 지평선 Lost Horizon

인도/1996/4분/애니메이션/감독 아룬 곤개이드/  
제작 Films Division, Govt of India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두어라”라는 것이 <잃어버린 지평선>에서 감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이다. 그의 힘찬 애니메이션은 한 마을이 부패한 힘에 의하여 서구화·도시화되면서 어떻게 타락하여 가는지를 전통적인 전원생활과 대비시켜 보여준다.

섹스와 폭력, 도박과 음주로 인해 오염되어 가는 그들의 땅을 바라보는 한 시골 사람의 눈에는 그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11월 27일(토)

제 150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삼성해고노동자 14일째 단식

### 노조건설에 보복 해고, 농성·복직·해고·농성 10년

"내가 죽든 문제가 해결되든 둘 중에 하나다."

삼성그룹 해고노동자 김용희(40·전 해투 조직국장) 씨가 삼성측에 복직이행을 요구하며 14일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실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 씨는 지난 5월에도 삼성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인바 있으나 16일째 되던 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돼, 2개월간 구금된 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82년 삼성시계에 프레스공으로 입사한 김 씨는 91년 노조결성을 시도하다 해고됐고, 94년 1년간 복직했으나 곧 대기발령됐다. 당시 삼성측은 대기발령 기간 3년이 지난 98년 3월에는 복직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지금까지 김 씨를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재열 신부)는 "김 씨의 복직이 삼성의 약속대로 하루속히 이루어져, 지난 10년간 받은 온갖 고통이 사라지고 김 씨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아들 급식비도 못 쥐

김 씨는 노조설립을 준비하던 91년 3월 여사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그날 바로 해고됐다. 이후 여사원은 회사측의 사주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김 씨는 복직되지 못했다.

해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김 씨에 대해 회사측은 고항에서 농사를 짓던 김 씨의 아버지까지 찾아가 "취도 세도 모르게 아들을 죽일 수 있다"는 협박을 해왔다. 결국 아버지는 김 씨가 해고당한 그해 10월 유서만을 남긴 채

사라져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줄기찬 복직요구에 김 씨는 94년 한 차례 복직되기도 했다. 하지만 회사는 곧 그를 대기발령시켰고 이에 그는 지금까지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아내는 병들어 누웠고, 그는 98년부터 지금까지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다.

어떻게 사느냐고 물을 때 대답하기가 가장 힘들다는 김 씨는 "해고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큰애가 지금은 고등학교 학생인데 급식비도 챙겨주지 못하고 있다"며 참참한 심정을 밝혔다.

#### 최 씨일가, 에바다 장악 기도

##### 최실자 사돈 복지관 채용

평택 에바다 농아원의 비리 및 인권 침해의 주역이었던 구 제단 실권자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제단 장악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바다 장애인 종합 복지관 이사진은 10월 1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최실자

전 이사장의 사돈인 양봉림 씨를 복지관 사무원으로 채용했다. 복지관 노조측이 "양 씨는 최 씨 일가의 인척으로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으나 인사위원회는 "일반직에 지원한 사람이 양 씨 밖에 없고 그는 결격사유도 없다. 단지 최 씨 일가라는 이유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묵살했다.

그러나 홍순기 노조 위원장은 "지난 번 직원 모집 때는 지원자가 39명이나 됐는데 이번만 양 씨 혼자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홍 위원장은 또 "평택시도 일반직원보다는 언어, 물리치료사의 채용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일반직원부터 채용한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최 씨 일가가 이사진에 영향력을 발휘해 또 다시 에바다를 장악할 음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발령을 받고 24일 에바다 학교로 출근하던 권오일(39) 교사는 교문을 막고선 농아원생들에 의해 학교 출입을 거부당했다. 권 교사는 "교장이 교문을 열어주기는커녕 초등학교 교과서를 주면서 집에서 제택근무를 하라고 했다"며 "최 씨 일가가 원생들을 사주해 출근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교사는 이에 대해 경찰에 공개적인 수사를 의뢰했다.

### 행사와 동정

- ◇ 인권활동가와의 만남 - "21세기 인권을 준비하는 사람들"  
 때: 11월 28일(일) 오후 4시 장소: 동국대 학술문화회관 제 1세미나실  
 주최: 인권운동사랑방 제 4회 인권영화제 (02-741-5363)
- ◇ 2001년 중학교 역사교과서 개정을 위한 토론회  
 때: 12월 4일(토) 오후 2시 장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교육관  
 주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02-365-4016)
- ◇ 성폭력사건 지원체제 확립을 위한 경찰간담회  
 때: 12월 7일(화) 오후 2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장 4층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02-576-5513)

## 제 4회 인권영화제 성황리 출발

### 동국대에서 12월 2일까지, 다양한 부대행사도

반인권의 '굴리앗 문화'에 매서운 돌팔매를 던지는 '다윗 정신'으로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탄압과 비타협의 길을 걸어온 인권영화제가 26일 오후 7시 동국대학교 학술문화회관에서 3백 50여 관객이 참가한 가운데 4회 인권영화제의 막을 올렸다.

영화배우 문성근 씨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식에서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검열을 거부하는 인권영화제가 언제까지 살아남을 지는 모르겠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검열제도와는 타협없이 계속 싸우겠다"고 밝히고 "인권영화제가 인권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자리가 아닌 인권을 느끼고 답아가는 자리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가로 유금이의 억울한 죽음을 담은 '금이'를 부른 가수 정태춘 씨는 "법에 의한 노래 검열을 폐지했으나 우리사회 전반에는 기독교에 의한 검열이 계속되고 있다"며 "끝까지 살아남는 인권영화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영화제가 걸어난 길과 4회 주요상영작을 담은 슬라이드가 상영됐으며,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들이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이기도 했다. 개막작으로는 흑표범담을 재조명한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가 상영됐다. 상영관 밖에서는 이에 맞춘 부대행사로 무미아 아부자발에 대한 사형중지와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탄원 엽서 쓰기 캠페인이 진행됐는데, 이 캠페인은 영화제 폐막식 때까지 계속된다.

#### ▶ 4회 인권영화제가 마련한 다양한 부대행사

20세기 인권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인권운동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인권활동가와의 대화가 28일 오후 4시 동국대학교 학술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는 '난민' '전쟁과 인권'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장애인' 등 이 사회 소수자들을 위해 함께 싸우고 있는 인권활동가들이 직접 출연해 고민과 경험을 나눈다. 관객과 함께하는 OX퀴즈와 20세기의 인권 역사를 담은 슬라이드도 상영된다.

특별한 부대행사의 또 하나는 '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특별부분'. 오는 11월 30일 미국 시애틀에서 'WTO-뉴라운드 협상'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에 대항하는 전세계 민중들은 11월 30일을 민중행동의 날로 정하고 대규모 반대 행동을 준비중이다. 이에 인권영화제도 30일, 민중행동으로 자신의 피해를 알리는 <황제의 벼> <베일 벗기기> <Global Village or Global Pillage> 등을 상영할 예정이다.

### 반민주약법 철폐 및 민주개혁법안 쟁취 "범국민 연대행동"

▷ 오늘(27일) 오후 3시 국회 앞.  
문의 (이윤주 011-720-4212)

## "경찰서비스 헌장을 떼어달라"

### 경찰 폭력에 남편은 분신, 아내는 농성

지난 8월 20일 아산시 모종동 신기공업사 후문 교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겪은 수모와 강압에 항의해 8월 28일 아산경찰서 앞마당에서 분신한 택시 노동자 지용석(32·온천운수) 씨. 그는 온몸에 3도 45%의 화상을 입고 현재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두 차례의 수술을 받은 후 입원중이다.

지 씨의 부인 김자영(22·주부) 씨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야 임마 너 살살 다니지, 왜 그렇게 빨리 다니서 사고를 냈냐"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조사도 않은 채 몇 시간씩 경찰서에 붙잡아두기를 5일 간 되풀이했다. 결국 가해자로 물린 지 씨는 대전지방경찰청에 민원이라도 접수하려 해봤지만 "최초 조사 결과가 뒤집히는 일이 없다"는 담당자의 말 앞에 절망, 분신에 이른 것이다.

그로부터 석달이 지난 11월 26일, 아내 김 씨는 아산경찰서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남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번번이 허사였기 때문이다.

지 씨의 이러한 사연이 알려지자 아산시민모임, 아산 YMCA 등 15개 아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경찰의 폭언으로 인한 모멸감으로 평범한 시민이 하나뿐인 목숨을 담보로 함의 분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경찰관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이들은 지 씨의 가족을 도와 국가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흥현 아산경찰서 부청문감사관은 "제조사를 진행했지만 관련경찰관의 위법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사고 당시의 아산경찰서 서장과 담당 경찰관은 이미 다른 경찰서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분신 전 지용석 씨가

동료 이경수(민주택시연맹 충남본부장) 씨에게 남긴 편지

"내가 이렇게 미워 보이기 처음이다.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 그들에게 있어서 나는 무엇이었나. 아주 작은 교통사고였고 결과에 대해 승낙할 수도 있었지만 7일간 경찰서에 들락거리며 얻은 것이라고는 수모와 혐오감, 그래서 더 결과에 승복할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승객을 태우고 다니며 구두발로 맞아보기도 하고 욕도 먹어보고 갖은 수모를 다 당했어도 뒤돌아서 담배 한 가지 피우면 잊어버릴 수 있었는데 왜 그들에겐 미움을 버릴 수 없을까? 내가 이렇게 무능력했던가. 3일을 고민했다. 어머니와 아내,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해서 가슴에 묻어둔 채 다시 살아가려 애를 썼지만 또 다른 내가 있다면 그 사람도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고생을 할까 혹시나 아들이 커서 나와 같은 상황이 된다면... 이 서운함이 가실 때까지 당분간 경찰서비스헌장을 떼어달라 청해주시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천·하)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oang.or.kr · http://www.iworld.net/~rights

## 잃어버린 3년, 계속되는 싸움

### 에바다 농성 3주년, 사태해결 촉구 집회 열려

평택의 에바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농아원생들이 제단비리와 인권유린에 항의하며 농성에 돌입한지 만 3년이 되던 지난 27일,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소속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대학생들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에바다 정상화와 이를 위한 특별감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사회를 맡은 권오일(에바다 농아원 선생님)씨는 "인신매매법 최실자(에바다 전원장)는 평소에 농이는 소문이 안나서 좋다고 말했다"며 "최미선 양은 알몸 변사체로 발견됐고 오은숙은 살해됐는데 도대체 이 나라 법은 있는 것이냐? 정부는 장애인을 돈벌이로 부려먹는 사람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환 에바다문제해결을 위한 평택 시민 공동대책위 대표는 "에바다는 선교사의 것이었으나 이후 최실자 일가족의 사유재산으로 둔갑했다"며 "특별감사제 도입으로 모든 의혹과 비리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의지부족 때문"이라며 "에바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주노총 역시 힘을 모아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곧 이어 열

린 8대 개혁 법안 집회에 참석해 국회 앞 행진을 시도하던 중 경찰과의 몸싸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에바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연대회의' 소속 오현준(22) 씨는 경찰에 강제연행되면서 온몸에 심한 타박상을 입기도 했다. 또한 경찰과의 몸싸움을 벌이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소속 오영자 씨도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맞아 이를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 에바다 농성의 의미와 현실 —

▶ 에바다 농아원생들이 3년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장애인 운동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투쟁으로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이 나서서 사태해결을 약속한 것만 해도 3차례에 달한다.

에바다 농아원에서든 그렇듯이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의 가장 큰 문제는 인권침해 및 비리 실상이 세상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인의 관심이 수그러든 틈을 타 비리재단이 다시 복귀해 실권을 장악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 없이는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96년 에바다 사태가 발생한 이후

1999년 11월 30일(화)  
제 1507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올해 이성재 의원(국민회의)은 우여곡절 끝에 에바다 복지관 이사장으로 부임해 복지회의 정관을 바꾸고 해직교사의 복직을 추진했다. 그러나 비리재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최성호씨(전이사장 최실자의 동생)를 비롯한 최 씨일가 3명이 현 관선 이사진에 포함돼 있고 최성호씨의 처인 양봉애씨도 농아원장 직무대행으로 남는 등 최씨 일가가 여전히 중책을 맡고 있다. 따라서 지난 22일 복지명령을 받은 권 교사는 재단의 배후조정을 받은 일부 학생들의 저지로 교단에 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 "8대 개혁법안, 처리해라"

12월 6일 국회 앞 농성 계획

국회가 정쟁만 일삼아 개혁법안들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위협에 처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한 규탄행동에 나섰다.

'반민주악법 철폐 및 민주개혁 법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범국민연대행동)은 지난 27일 국회 앞에서 노동자와 학생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8대 개혁입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홍근수 목사는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는 정부는 국민의 정부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의료보험노조의장 김한성 씨는 "의보통합법이 8대 법안 중에서 유일하게 상임위에 상정된다지만, 30일 열리는 WTO 협상으로 민중건강권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분개했다.

한편 전능은 "8대 개혁법안에 농업관련 법안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연대행동의 개혁입법의 9대과제로 선정해달라"고 말해 많은 집회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범국민연대행동은 8대 개혁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 6일 국회 앞에서 전면 농성에 들어갈 계획이다.

##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올바른 내용으로 제·개정돼야 할 8대 개혁법안의 내용과 쟁점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 ◎ 교육관계법

29일, 서울지역 학교운영위원 3백69명은 학교운영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전과가 없는 학교운영위원들의 집단행동은 교육개혁을 위해 필수적 과제였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교육부가 판자를 걸었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위원들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 때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을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교육부도 위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6월에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 아직도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2001년 지방교육자치법 전면개정 시 함께 개정하겠다는 것이지만 실상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교육감들의 눈치가 무섭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자치법 뿐 아니라 지난 8월 개정된 교육관계법 역시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교조의 여준성 간사는 "지난 8월 교육부의 주도하에 통과된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은 사립학교의 이익만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어 교육개혁은커녕 사립학교의 비리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8월 결성된 '교육관계법 재개정을 위한 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도 교육주체의 의견과 교육의 공공성을 무시한 제 제단에 파다한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등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사립학교법에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이사로 선임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과 △재단 수익 사업에 대한 관할청 신고제 도입 △임시 이사에 대한 임기제한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대해서도 학사운영의 투명성과 민

주성을 피하기 위해 각각 운영위원회와 교수협의회를 공식적인 의결기구로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과거 전교조 등에 연루돼 해임된 교사들에 대한 '해직교사와 임용제외교사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과 작은학교 지원 등을 규정한 '농어촌교육특별법' 등도 교육개혁을 위해 조속히 제정돼야한다는 것이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 ◎ 부패방지법

정부여당의 누치에 걸친 제정 약속에도 불구하고 제정은커녕 후퇴만 계속되고 있는 부패방지법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올바로 제정돼야할 민주개혁법안 중 하나다.

96년 11월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고위공직자비리조사

처의 신설, 돈세탁금지,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 뇌물죄의 처벌강화 등을 그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김영삼 정권시절 내내 서랍 속에 잠자고 있던 이 법안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현실화되는 듯 했다.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부패방지법 제정지시를 내린 데 이어, 각 정당의 총재 등도 부패방지법 제정에 찬성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부패방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검찰과 법무부, 감사원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이 검찰 등의 역할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국회의원회는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고위공직자 비리를 통제할 구체적인 범조항 부분을 생략한 채 법안을 재구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법안은 크게 후퇴했고 지금 안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부패방지법이 제정된다하더라도 개혁적 의미는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다.

### "소수자 스스로의 싸움을 만들기 위해"

그들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 싸워온 인권활동가들이 일반 시민들과 함께 20세기 인권상황을 진단하고 21세기 인권과제를 고민해보는 뜻깊은 자리가 열렸다.

지난 28일 오후 4시 동국대학교 학술문화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는 인권영화제 부대행사 가운데 하나로 '인권활동가와의 대화 - 21세기 인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개최됐다. 추운 날씨 탓인지 관객은 40여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 1세미나실의 열기는 다른 영화상영장 못지 않았다.

첫 번째 패널로 나선 김미선(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조합) 씨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라는 말처럼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 돼 왔다"며 "이들은 노동자로서 인식되지 못해 법적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적절한 노동조건과 사회보장에서도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난민과 인권'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한 좋은벗들의 김정남 조사연구 부장은 "국제법상 난민의 개념이 정치적 난민에 한정돼 있어 경제위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보호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경제적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쟁과 독재가 있는 한 난민은 재생산될 수밖에 없어 평화와 민주주의의 실현만이 난민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서울장애인연맹의 김효진 씨가 장애인들의 인권실태를 이야기 해주었으며, 전쟁을 둘러싼 여성들의 인권과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현황이 활동가들의 입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기도 했다.

일반시민과의 OX퀴즈도 함께 진행된 이 자리에서 참가한 패널들은 모두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응급처치식 구조 혹은 지원활동에서 벗어나 소수자들이 직접 그들의 인권을 위해 싸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 제4회 인권영화제 오늘(11월 30일) 상영일정

장소 : 예술극장

일정 : 오후 1시 슬픔과 연민 3,4부

오후 3시 피로물든 청춘(50)

오후 4시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섹션

▶ 황제의 새 옷, 베일벗기기, Global Village or Global Pillage

인권  
시평

**배고픈 아이들이 있는 한**

윤정숙 (여성민우회 사무처장)

"8일 동안 먹을 것이 없어 물만 먹었어요."  
"배고파 그냥 돌아다니다가 책상에 누웠어요."  
"그냥 자요."

얼마전 한 TV에서 본 밥을 굶는 아이들의 이야기이다. 아이들은 배고프다, 아프다, 친구가 없다 그리고 '죽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카메라에 찍히는 것이 부끄러워 등을 돌리고 밥 먹는 아이들, 아무 가족도 없이 3만원으로 한 달을 산다는 열살 박이 아이. 친구들을 의식해 학교급식을 거부하는 아이의 주인 없는 도시락.

지난해 8월 현재 11만 명이던 결식아동은 경기가 회복되어 경제성장 8%가 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지금 그 수는 15만 명을 넘고 있다. 정부가 올림픽 개최국의 망신이라며 결식아동을 위한 학교급식을 시작한 것은 1988년, 이제 10년이 넘었다. IMF 이후 빈곤대책을 위해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마련한 지도 2년이 지났다. 그래도 굶는 아이들은 늘고 있다. 뭐가 그리 어려운가? 무슨 할 말이 더 있는가? 아이들 끼니 챙겨주는데 큰돈이 드는 것도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배고파서 죽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의 가슴을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라. 어찌 국회에결위에서 결식아동급식예산을 100억여원이나 깎을 수 있으며, 학교나 동사무소가 직접 파악해 제시한 결식아동의 통계를 보고도 교육부가 '경기가 회복하는데 굶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말이다. 실제로는 17만여명으로 집계되는 아이들 중 교육부 예산부족으로 2만명은 그나마 학교 급식에서 제외되었다. 바로 그 교육부는 BK21사업으로 7년간 1조 4천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 돈으로 연구중심의 대학원을 지원하고 우수학생 유학을 보내준다고 한다. 우수대학과 인력의 양성을 위한 투자도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에서 먹는 점심만끼로 하루를 버텨야 하는 많은 아이들을 그리고 그 아이들의 저녁밥을, 학교에 다니지 않아 집에서 굶고 있는 그 아이들의 동생들인 미취학 아이들을 생각해 보라.

배고파 허기져 있는 아이들을 두고 예산과 통계를 따지고 가족해체가 어떻고를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아이들에게 하루 세끼의 밥은 '권리'이다. 이제 겨울이고 방학이다. 예산이 바닥나 결식아동지원사업을 하는 많은 단체들은 울겨울 아이들을 끼니 챙겨줄 일이 걱정이다. 아이들의 배고픔과 막막함, 상처받은 자존심은 단서없이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한다. 밥대신 물로 배를 채우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있는 한 '밝아오는 21세기 신한국창조'라는 구호는 삼가되어야 할 것이다

**하루소식 구독료 납부**

지로번호 7618848 (문의 이창조 02-741-5363)

**주간인권흐름**

(99년 11월 22일-11월 28일)

- 우리는 언제쯤이나...  
이스라엘 정부, 48년 중동전쟁 이후 채택돼 지난 51년간 고소나 재판 없이 아랍인을 구금하고 민간재산을 군용으로 몰수하는 것을 허용해 왔던 비상사태법을 폐기하기로 하고 의회에 입법조처 제안 -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돼
  - 고문경관, 배상도 직접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용), 국가가 85년 김근태씨 고문사건의 관련자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대신 낸 손해배상금을 검찰관들이 물어주라"며 원고승소판결 (11/24)
  - "법이 외면하면 내가 옹정한다."  
고문피해자들, 민가협 목요일집회에 참석해 고문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면적 진상조사와 고문범죄 시효부작용,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 등 촉구 (11/26)
  - 노조 정치활동 축쇄 풀렸다.  
헌법재판소,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대해 "헌법이 정한 표현·결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 내려 (11/25)
  - 등돌린 조국...164일만의 장례  
국내 체류중이던 조선족 동포 서문봉 씨, 노임이 450만 원이나 체불된 상태에서 지난 6월 11일 한국인에 피살됐으나, 가해자와 회사측이 모두 진료비와 입원비를 책임지지 않아 164일간 냉동실에 갇혀 있다가 뒤늦게 장례 치러 (11/23)
  - 니들 눈엔 똘들 안 거슬릴까  
국회 문화관광위, 등급의 판정을 받은 성인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등급의 전용관 설치안 백지화 (11/26)
  - 차라리 국가를 팔아먹어라  
전력산업 분할·해외매각에 반대하는 전력산업 노동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명동성당에서 농성돌입 (11/26)
  - 뉴라운드에 모라토리엄을!  
WTO-뉴라운드 협상을 앞두고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1개 시민사회단체들, "뉴라운드 협상이 전 세계 민중들의 삶의 질을 더욱 후퇴시킬 것"이라며 "뉴라운드 협상의 즉각 유보" 촉구 (11/24)
- <해외 소식> "암살학교 폐교하라"  
미국 평화운동가를 비롯한 약 1만명의 시위대, 중남미 군부독재정권 지원을 목적으로 중남미 군인들에게 특전훈련과 고문기술 등을 가르쳐온 미 육군 군사학교(일명 암살학교)의 폐쇄를 촉구하는 시위(벌여 (11/21)

# 인권하루소식

## 99년 12월

### (제 1508호 ~ 1528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천하: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12월 1일(수)

제 1508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자해공갈단식 철거폭력

### 철거용역, 오물·신나 뒤집어쓰고 주민 협박

철거용역원들의 횡포와 폭력으로 인해 서울시 봉천3동 세입자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11월 30일 오전 10시쯤 봉천3동 제계발지역의 세입자대책위원회(위원장김규영, 대책위) 소속 주민 20여명은 빈집에 대책위 사무실을 마련하려 했으나 철거용역회사 다원 소속 용역들의 협박때문에 포기하고 말았다.

주민들은 "다원의 김철호 소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용역들이 담을 타고 들어와 주민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고 구둣발로 짓밟고 심지어 달려와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대체로 50-60대 이상의 노인과 부녀자였기 때문에 용역들의 폭행에 변변한 대응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한 용역들이 '오물통'을 스스로 뒤집어 쓴 채 행패를 부렸고, 오물을 주민들에게 뿌렸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1시간여만에 용역들의 행패가 중단되자 주민들은 마을 공부방 '낮은자리'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때도 용역 30여명이 다시 나타나 "공부방에서 만나오면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 한 주민은 "심지어 김 소장이 자신의 몸에 신나를 뿌린 채 오후 4시까지 공부방 밖에

서 주민들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폭력사태를 방관하는 경찰과 구청도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있다. 주민들은 "신고를 받고 온 봉천3동 파출소장이 '맞았으면 얼마나 맞았나?' 표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자꾸 신고하지 마라. 억울한 사람 있으면 손등고 따라오라'고 말했다"며 "이들이 과연 세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고 분개했다. 또 주민들이 이용해야할 복지회관에 다원 소속 용역들이 상주하고 있어 세입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구청 측에서는 "세입자는 권리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봉천3동 세입자대책위원회 소속 50여가구는 가수용단지의 설치를 요구하며 철거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위원장 김규영 씨는 "지금은 임대아파트가 나와도 못들어간다. 우리는 2-3백만원 보증금에 월 15만원의 월세를 내고 사는데 1천5백만원의 임대아파트는 임대도 못낼뿐 아니라 다달이 내는 관리비조차 부담스러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이 생산협동조합을 만들어 목돈을 마련한 뒤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가수용단지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 실업예산삭감 철회 촉구 실업자들 국회 앞 집회

11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는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소속 활동가와 실업자 3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의 실업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집회에서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됐음에도 생활보호대상자 지원금은 감축됐고, 1인당 세금은 2백만원으로 늘었는데 실업예산은 줄었다"며 "지금의 국회의원들에게 표를 주지 말고 '실업자당', '서민당'을 만들어 민중 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 실업자취업지원센터 이창석 사무국장은 "국회의원은 60일만 일하면서도 세비를 올리는 반면, 2백80일 이상을 일하는 노동자는 거리로 내몰렸다"며 국회의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실업률이 5%이하로 떨어져 한시적 실업대책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실업예산을 99년 3조2천여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5천여억원으로 약 51.5%나 삭감했다. 그러나 최근 참여연대와 UNDP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빈곤인구가 1천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본지 11월 11일자 참조), 통계청은 '98년 8월 기준의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실업률이 약 9.2%, 단시간 근로자와 공공근로 종사자 등을 합친 실업률은 12.4%라고 발표하 바 있다.

### 제4회 인권영화제 6일째(12월 1일) 상영일정

장소 : 동국대 예술극장

일정 : 오후 12:00 열대야(195) / 3:00 알로핀도(63) / 4:10 끝나지 않은 싸움-에바다 (50) / 5:00 꽃파는 할머니(50) / 6:30 독방의 활력(6) / 나의 아이 나의 땅(4) / 콜롬비아 치욕의 전쟁(30) / 7:20 모락당한 나의 이름(60) / 8:30 국가의 살인(77)

### 반민주약법 철폐 및 민주개혁법안 쟁취를 위한 2차 범국민행동

◎ 때 : 오늘(수) 오후 3시

◎ 곳 : 여의도 국회 앞

###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②

#### 근로기준법·노동시간단축특별법

98년 불어닥친 경기침체로 노동자들의 초과근로와 조업시간이 단축됐음에도 불구하고, 98년말 전산업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390시간(주 평균 45.9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노동 1,500-1,600 시간대인 유럽은 물론, 선진국 중 가장 노동시간이 길다는 일본의 1,900시간에 비해서도 훨씬 긴 것으로 세계 8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노동시간이 긴만큼 우리나라의 산재발생률 역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세계 최정상 수준의 노동시간과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재해율을 낮추기 위한 전면전에 돌입했고 민주노총은 현재 주 44시간으로 돼 있는 법정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법정노동시간에 여전히 장시간 초과근로가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해 실제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한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의 제정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은 '99년 8월 현재 정부 통계상 실업률은 5.7%이지만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와 18시간 미만의 불안전취업층, 반실업상태의 일용노동자층을 포함하면 실제 실업자는 3백만명을 넘는다고 "실노동시간단축을 통해 고용을 계속 창출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꾀하는 것만이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고 사회통합과 21세기형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민주노총 등이 요구하는 노동시간단축특별법은 △구조조정, 경기침체 등으로 대량의 인원조정이 불가피한 경

우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의무화하고 △전 사회적으로 '노동시간단축계획'을 수립해 사업장단위에서 노동시간단축 추진체제를 갖추도록 하며 △실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저하를 막기 위해 노사간 소득보전기금 조성과 국제적 기준에 따른 최소 생활기준을 명시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아직 냉담하기만 하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오는 12월 중순경 제2차 민중대회를 갖고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노동시간특별단축법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 뉴라운드 반대 행동돌입

#### 항의시위·설명회 등 열려

11월 30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WTO-뉴라운드 협상'이 시작됨에 따

라 이에 반대하는 민중행동이 전세계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민중행동의 일환으로 'WTO-뉴라운드 협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소속 활동가 30여명은 30일 낮 12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집회를 갖고 WTO 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집회참가자들은 "WTO-뉴라운드 협상이 전세계적으로 빈곤을 확산시켜 국가간 불평등과 전세계 민중의 빈곤을 부추기고 있다"며 "WTO-뉴라운드 협상을 유보하고 WTO에 대한 평가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국대 학술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4회 인권영화제도 '투자협정·WTO 뉴라운드'에 반대하는 특별부문'이라는 부대행사를 마련했다.

5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 행사에서는 초국적자본의 횡포와 민중의 저항을 보여주는 <황제의 세웃> <베일벗기기> <Global Village or Global Pillage> 등의 영화가 상영됐으며, WTO-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설명회가 열려 WTO-뉴라운드 협상의 위경성과 부작용을 경고했다.

###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 국보법 51주년, 줄잇는 항의행동

국가보안법 제정 51주년을 맞는 12월 1일을 하루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 개·폐를 촉구하며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국보법폐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공동대표 김영진 등, 천주교연대)는 30일 오후 4시 국회 앞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한 시국미사를 가졌다. 미사를 마친 천주교연대 회원들은 '국보법폐지 범국민연대의'측과 함께 국회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국보법 철폐를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또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이 제정돼 51년이 넘게 존재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인권이 말살되어왔다는 것"이라며 "국보법의 개·폐를 통해 치욕의 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전북연대회의'(전북연대회의)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도 각각 성명을 내 "국보법이 존재하는 21세기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보법은 조속한 시일내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연대회의는 1일 오전 10시 30분 전북고백교회 앞에서 국보법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가보안법 개·폐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국가보안법 제정 51년을 맞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개최한다.

#### <알림>

프린터 고장으로 인해 11월 30일자 하루소식이 글자꼴 등 편집에 변형이 있었습니다. 훼손되지 않은 원본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면 재발송해 드립니다. (02-741-5363)

### <인권하루소식> 99년 11월분 총목차(1487-1507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487	11/1	1	외국인노동자 "단결만이 살길", 열악한 인권개선 위한 노조설립운동 제기돼/ <국보법 반대투쟁 속보> 교수 1천명, 국보법 폐지 서명
		2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관한 몇가지 단상(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주간인권흐름(10/25-10/31)
1488	11/3	1	"다국적기업을 감시하자" - 세계화 명분, 인권·노동·환경 침해/ 청주시, 입원환자 지문 방문채취키로
		2	국회 앞 집회·식사술 농성 - "국보법 철폐" 23만명 국회청원/ <현장스케치> 유가협 농성 1년을 맞아 - "이대론 물러설 수 없다"
1489	11/4	1	국보법 개정반대 한나라당 규탄 - 김용갑 의원 등 63명 '인권의 적'으로 규정/ 국보법 철폐 3백명 농성 돌입, 전국에서 12일까지
		2	"당신의 결혼을 알리지 말라" - 여성민우회 등, 성차별적 구조조정 비판/ "SOFA 특혜조항 삭제, 전면 개정" - 국민행동, 공청회 열어/ 민변, 파업유도 수사팀 제구성 촉구
1490	11/5	1	30년만의 조출한 추모제 - 남조선해방전선당 사건의 고 권재혁 씨/ '고문특별법' 제정 촉구 - 민가협 "배후 철거 색출" 주장
		2	외국인노동자도 동등하게 - 일본 및 독일의 외국인노동자운동/ <국보법 반대투쟁 속보> 민교협 철야농성 돌입... 국보법 63쪽에 질의서 보내/ <만화사랑방> 국보법 존속주장 한나라당 63적
1491	11/6	1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준법서약서도 폐지해야"/ 색깔론, 이대론 안된다 - 민교협, 영남권 집회 중단 촉구
		2	유엔인권이사회, 한국정부 대표비판 - 불충분한 정보 제공...양심수 자료 등 제외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미흡
1492	11/9	1	정부, 파업노동자 '폭력배' 때도 - 유엔인권이사회 허위보고 드러나/ 노동부, 장애인 고용 외면 - 장애인고용 0% 부처에 면죄부/ <국보법 반대투쟁 속보> 전북 종교인들 단식 29일째, 전국종교인대회 열려... 청년단체들, 삭발식 가져
		2	<인권시평> 사실은 사실대로(강내희 중앙대 교수)/ 주간인권흐름(10/31-11/7)
1493	11/10	1	영세사업장 여성인권 사각 - 장시간 노동에 4대보험 가입율 30% 이하/ 재판장 사상시비 계속돼 - 법원, "복 찬양하면 비공개 재판"
		2	"비리시찰장 연구퇴출" - 10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 개정 제안/ 민중대회, 오는 14일 여의도서 ... 각계민중 4만명 결집 예상/ <민중대회 10대 요구안>
1494	11/11	1	학습지 교사, "우리가 노동자" - 학습지 업계 사상 최초로 노조 설립/ 최저 생계비 이하 빈곤층 1천만명 넘어 - UNDP·참여연대, 외환위기 이후 빈곤실태 점검
		2	<해설> 99민중대회 핵심요구안 ① 노·농·빈, 생존권 요구
1495	11/1	1	일하러 왔다가 성노예생활 - 국내 외국인여성 인권실태 심각/ <인터뷰 자료> 성노예 취급받는 외국인여성들/ 고문피해자 기자회견 "고문진상규명위 설치하라"
		2	<해설> 99민중대회 핵심요구안 ② "공기업 민영화·투자협정 중단"/ <만화사랑방> 정형근
		3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1496	11/13	1	해의진보인사 또 입국금지, 미국노동운동가 공항서 강제출국/ 서준식 대표 항소심 열려, 담당 경찰관 증인으로 신청/ "보안관찰자료 공개하라" 정보공개청구소송 잇따라
		2	<해설> 99민중대회 핵심요구안 ③ "건강권·교육권 보장"
1497	11/16	1	민가협, 제수감 양심수 석방운동 - 준법서약 폐지 주장하다 제수감/ 느린 걸음도 죄가 되다니 - 민중대회 참가 장애인, 시가행진 중 강제연행
		2	<인권시평> 이 사람들은 다 어찌할 것인가(공선옥)/ 주간인권흐름(11/8-11/14)

### <인권하루소식> 99년 11월분 총목차 (1487-1507호)

호	월/일	번	기 사 제 목
1498	11/17	1	"스티브 켈러 직접 와라" - 법무부, 입국금지 이유 공개 안해 / 7조 삭제없는 개정 무의미 - 연대회의·국민연대, 국보법 공동토론회/ "배후 색출해 처벌하라" 유가협 등 경찰청 항의시위
		2	<기고> 또하나의 전쟁터 : 버마·태국 국경지대 난민캠프를 다녀와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1499	11/18	1	'일할 권리' 요구 단식돌입 - 장애인들, 여의도에서 천막농성 / 장애동원, 노조원 폭행 - 고려운수, 완전월급제 갈등
		2	"우리가 당신의 가족이었다면..." 생사기로서 내몰리는 결핵환자들 /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소개> ①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 '에스코바의 자살골'
		3	제4회 인권영화제 상영일정표
1500	11/19	1	철거용역 다윈 다시 활개, 서울 봉천동·상암동 강제철거 시도/ "외국인 블랙리스트 웬말" 켈러 씨 동료들, 항의시위 계획/ <만화사랑방> 진보적 외국인 입국금지
		2	"정형근이 직접 고문했다" - 방양균씨, 고문수사관 지목 / 제능교육 노조위원장, 6일째 단식 투쟁/ <현장> 안양시청 앞 철거민노숙투쟁 - 반복되는 철거폭력, 명드는 심신
		3	야민의 21세기를 반추하는 인권영화제 - 한국영화 약진...올해의 인권영화상 시상
1501	11/20	1	시민사회, 대 국회 선전포고 - "인권·개혁법안 8개 즉각 처리" 촉구 / <국가보안법 속보> 전북 종교인, 40일 단식기도 정리
		2	해고자, 회사 차에 뺨소니 당해...경찰, 항의하던 노동자 강제연행 /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소개> ② '슬픔과 연민' '세계인권선언의 역사'
1502	11/23	1	뺨소니 차 찾던 해고노동자 구속 - 목비권도 문제삼아 / 재소자 생필품 불만 잇따라 - 인권단체, '교정협회'에 정보공개 청구 / 양근군 단식농성 돌입, "병역법 시행령 개정" 요구
		2	<인권시평> 386세대는 없다(이재훈 한겨레기자) / 주간인권호름(11월 15일 - 11월 21일)
		3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소개> ③ 한국편
1503	11/24	1	사장이 노조원 폭력 사주 - 고려운수 사태 세국면...서울시, 중재 나서기로 / 아동권리조약 채택 10년과 이동인권의 현실
		2	의정부 환경미화원, 10여년만의 저항 - 1년에 휴일 단 3일...일방적 정년단축 / <독자투고>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박호경 장애우일할권리찾기연합 대표)
		3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소개> ④ 한국편
1504	11/25	1	뉴라운드에 모라토리엄을! - 국내 시민단체, 뉴라운드 협상 반대 천명 / <자료> WTO-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의제 / 선전문물 배포하던 철거민 연행
		2	"비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 법조계·인권단체, "국제법의 국내법 적용" 촉구 /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⑤ '변방' '소코로 노브레-삶은 어딘가에'
1505	11/26	1	차라리 국가를 민영화하지 - 전력산업 분할·해외매각 위협에 전력노조 농성돌입 / 술취한 철거용역, 철거민 폭행 - 경찰, 실신한 철거민마저 조사 시도
		2	"법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 고문피해자들, '고문특별법 제정' 촉구 / <고문피해자들의 증언> /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⑥ '모락담한 나의 이름' '잃어버린 지평선'
1506	11/27	1	생사기로서 선 해고노동자 - 삼성그룹 해고자 김용희 씨 14일째 단식농성 / 구 재단, 예마다 장악 기도...최실자 사돈 복지관 채용
		2	제4회 인권영화제 성황리 출발 - 동국대에서 12월 2일까지 ...다양한 부대행사 마련 / "경찰 서비스 현장을 빼어달라" 경찰폭력 앞에 남편은 분신, 아내는 농성으로 맞서
1507	11/30	1	잃어버린 3년, 계속되는 싸움 - 예마다 농성 3주년, 사태해결 촉구집회 열려 / '8대 개혁법안 처리해라' 12월 6일 국회 앞 농성 계획
		2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인권영화제 부대행사> 인권활동가와의 대화 - "소수자 스스로의 싸움을 만들기 위해"
		3	<인권시평> 배고픈 아이들이 있는 한(윤정숙 여성민우회 사무처장) / 주간인권호름(11월 22일 - 11월 28일)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천하: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1999년 12월 2일(목)

제 1509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이미 반세기

### 국보법 제정 51년, 전국 국보철 함성

국가보안법 제정 51주년을 맞아 1일 전국 각지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반민주악법 철폐와 민주개혁법안 쟁취를 위한 범국민연대행동'은 1일 오후 3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와 종교인, 노동자 등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권오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의장은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철폐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국민회의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국가보안법 중 가장 악용되고 있는 7조 3항(이적단체 구성)을 존속시키려 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으로 얼룩진 치욕의 역사는 지난 51년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며 지난 9월 식발, 단식농성을 벌였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신부들은 11월 30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밤샘농성에 돌입한데 이어 집회에 참석해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신부들이 앞장서 국가보안법 어기기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 범국민연대회의'는 새정치국민회의에 보내는 항의서한

을 통해 "국민회의가 당리당략과 정권 유지에 눈이 멀어 국가보안법 폐지는 고사하고 탄압의 칼을 품고 있는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비난했다.

집회 후 참가자들은 항의서한을 국민회의에 전달하기 위해 당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이를 저지함에 따라 약 30여분간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오후 8시부터 국회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 인천에서 울산까지

한편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를 위한 울산 인권주간 추진위원회'도 낮 12시 울산 현대백화점 성남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가보안법 철폐 목소리를 높였다. 하루감옥체험도 함께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2백여명의 울산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전북지역은 전주 고백교회 앞에서, 광주지역은 금남로 가톨릭센터 앞에서 각각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1일을 국가보안법 반대 총력의 날로 정한 청년진보당 역시 전 지구당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반대 캠페인을 전개했다. 청년진보당 광주지구는 오후 4

시부터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을 나섰으며, 인천지구당도 시민들과 함께 '근조 국가보안법' 리본 달기 운동을 펼쳤다.

### '학습지 교사도 노동자다'

#### 제능교육노조 전면파업 돌입

10월 26일 제능교육의 일반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데 이어 제능교육 교사노조(위원장 김수복) 교사들이 부당해고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항의해 지난 29일 파업에 합류했다. 학습지 업계사상 교사노조의 파업은 처음있는 일이어서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파업에 돌입한 교사노조 교사들은 △위탁계약서 폐지 △관리예치금 반환 및 폐지 △노조인정 해고자 9명의 원직복직 △최저생활비 보장 등을 요구하며 서울 도곡동과 부산지사를 점거한 채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재 파업에 합류한 교사는 전체 8천5백여명 중 1천7백여명이다.

지난달 제능교육노조파업에서 지지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이지현(32) 씨는 "교사들은 9시에 출근해 밤 10-11시 퇴근할 때까지 모든 업무에 대해 회사의 지시를 받고 있지만, 회사는 위탁계약을 이유로 학습지 교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산재보험과 의료보험 등에 조차 가입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 씨는 또 "이미 다른 학습지 업체에서는 부당성이 제기돼 폐지된 보증금제도가 유독 제능에만 존속돼 교사 1인당 1백50만원의 보증금(전체 1백20여억원)을 걷고 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사용처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교사노조는 앞서 지난 13일 노동부에 노조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노조필증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 제4회 인권영화제 마지막날(12월 2일) 상영일정

장소 : 동국대 학술문화회관 예술극장

일정 : 오후 2:30 또 하나의 세상(42)/ 3:30 멈추지 않는 대량 학살-대인지뢰(15) 꼭 한걸음씩(45)/ 5:00 황제의 새 옷(53)/ 6:00 세계인권선언의 역사(30)/ 7:00 폐막식, 폐막작 - '올해의 인권영화상 수상작' 상영

###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③

#### 국가보안법,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가?

한국 재판부가 한 개인에게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및 이적)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사건에 대해 98년 말 유엔인권이사회는 최초로 이 사건이 '시민·정치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9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정부는 이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에 국가보안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통보했고, 지난 3월 박상천 전 법무부장관은 국정개혁보고회에서 국가보안법을 "북한에 이로운 행위"에서 '우리의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하는 구조로 개정할 것"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후 국민회의는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국가보안법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 △제2조 '반국가단체' 개념 중 '정부침탈'을 삭제,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라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장치 마련 △제7조(고무·찬양 및 이적)를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개인적인 이적활동에 대한 처벌을 삭제하고, 조직적인 선동·선전활동에 대한 처벌로 요건강화 △구속기간 연장 등 국가보안법 사범에게만 적용되었던 형사특별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자민련은 이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는 개정이 아닌 운영상의 문제'라며 '개폐 결사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국내의 상황에 힘입어 국내의 국가보안법 반대 운동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전개됐다.

9월 천주교 사제들의 식발단식농성을 계기로 통일·노동·진보를 아우른 1백20개 단체들이 '국가보안법폐지범국민연대회의'를 구성해 대중집회, 국회 청원 등을 전개했다. 또, 정기국회 내 국가보안법의 핵심조항인 7조 완전삭제를 주장하며 인권·여성·환경·보건의료 등 1백2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를 구성해 정치권에 대한 입력행사와 '활보'를 펴두로 대 국민 홍보운동에 나섰다. 이에 못하지 않은 원군까지 나타나

지난 11월 유엔인권이사회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심의한 결과를 발표해,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와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하도록 국가보안법 7조(고무·찬양 및 이적) 긴급히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국회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조차 국가보안법은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사회진보연대의 정종권 사무국장은 "김대중 정권은 국가보안법 개폐를 반대하는 집권세력 내 보수세력을 돌파해내려는 의지가 없는 데 이는 결국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1일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51년이 됐다. 한 인권운동가는 '작년 말부터 국가보안법이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너무 늦게 시작됐다'며 '지금 모은 힘을 한시적인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2~3년 내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겠다는 의지로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내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보안법과의 싸움을 결코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 '차라리 나오지 말라고 해'

문화계, '규제연령 상향' 철회 촉구

최근 국회에서 청소년의 문화공연 관람 연령을 상향조정할 것과 관련해 문화계의 비판이 일고 있다.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등 4개 단체는 지난 11월 29일 국회 앞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소년의 문화공연관람 연령을 상향조정할 것은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축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얼마전 국회 법사위에서 '청소년보호연령 기준을 19세로 일원화하기 위해

<알림>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주소 변경  
 현 www.iworld.net에서 www.sarangbang.or.kr 로,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로 변경됐습니다.

영화진흥법·공연법 등의 출입·관람 금지 연령을 기존의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한다. 이들은 "극장과 공연장 등은 유해업소가 아닌 문화공간으로, 문화계는 청소년의 정서와 문화적·비판적 능력을 함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소년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하지도 못한 채 규제연령을 상향조정할 것은 청소년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를 억압하고 부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규제연령의 상향조정 방침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 '올해의 인권영화상' <열대야>

현대자동차 정리하고 과정 담아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올해의 인권영화상'의 영광은 정리하고를 앞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분노와 좌절, 공포와 투쟁을 담은 이근호 감독의 <열대야>에게 돌아갔다.

제 4회 인권영화제 '올해의 인권영화상' 심사위원(서준식 외 2)들은 1일 '올해의 인권영화상'으로 <열대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들은 심사평을 통해 "<열대야>는 노동운동을 기록한 한국다큐멘터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작품"이라며 "크게 방만하지 않으면서도 힘이 있는 작품으로 노동자들의 고민과 아픔이 잔잔히 배어있다"고 말했다.

<열대야>는 작년 현대자동차 정리하고 과정을 울산현장에서 담은 1백95분의 대장편 다큐멘터리로 부산 KBS에서 근무했던 이근호 감독이 6mm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작품이다.

'올해의 인권영화상' 시상식은 오늘 오후 7시 제 4회 인권영화제 폐막식에서 있을 예정이며, <열대야> 팀에게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가 후원한 상금 50만원과 인권운동사랑방이 제작한 상패가 주어진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전하: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1999년 12월 3일(금)

제 1510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시애틀의 함성을 서울로

### 민주노총 등 WTO 뉴라운드 반대시위 지지

"초국적 자본은 WTO 뉴라운드 출범에 반대하는 전세계 민중들의 분노를 똑똑히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 시애틀에서 'WTO 뉴라운드' 출범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환경단체, 농민단체 등 전세계 민간단체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민간단체들이 전세계 민중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일 성명을 내고 '성장, 발전, 효율만을 앞세운 초국적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가 각국의 경제주권을 유린하고 노동권을 비롯해 농민과 빈민의 생존권, 여성의 권리, 환경생태에 대한 권리를 짓밟고 있다'며 "세계각국은 세계민중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WTO 뉴라운드 출범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내외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농업포기를 공언하는 한국통상대표단은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애틀의 열기를 서울로 이어 오는 10일 민중,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2차 민중대회를 개최해 WTO 뉴라운드 반대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녹색연합, 영화인회의 등 30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도 2일 입장을 밝히고 민간단체의 시위에 '비상사태 선포'와 '주방위군 투입'을 선포한 미국 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했다.

민중행동은 "이번 시위는 전세계적으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권과 환경을 파괴해온 WTO에 대한 항의의

며, 새로 출범하는 뉴라운드에 대한 전세계 풀뿌리의 결연한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자처해온 미국정부가 시위대를 폭력진압하고 군부대를 투입했다는 사실에서 미국의 기만과 위선을 체험하게 됐다"며 "미국정부는 폭력진압에 대한 사과는 물론 현지에 모인 세계 시민·진보단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민중행동은 오늘 오전 10시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WTO에 반대하는 시위대에 대한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한편 WTO 뉴라운드 유보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어 외교통상부와 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전북민중연대회의 역시 성명을 내고 WTO 뉴라운드의 유보와 폭력진압에 대한 공식사과를 촉구했다.

### '전력산업, 날치기 안된다'

전력노동자 국회 앞 대규모 시위

한국전력 등 6개 전력산업 노동자들이 전력산업의 분할매각과 민영화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지난 11월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데 이어 2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1천7백여명의 노동자들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전력산업의 분할매각과 민영화를 골자로 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법'의 국회사정 3당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지만 언제 날치기 될 소지가 있다"며 "정부의 전력매각 추진방침을 철회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력산업장 중 한국중공업 노조는 28일째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회 마산창원 지구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 만화사랑방

이동수



### 청소년의 자율성 학교가 가둔다

두발, 복장 등 생활침해 심각해

2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는 '청소년, 보호의 대상인가 자율적 주체인가' 라는 주제로 청소년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관련자를 비롯해 대학생 등 2백여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 인권의 현실과 과제 그리고, 제도 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됐다.

조현해정 (연세대 사회학) 교수는 "90년대 후반 소비주제로 등장한 청소년은 문화에 대한 욕구가 큰데 비해 이들이 접근 가능한 공간은 한정돼 있다"며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과 자유공간을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자치능력을 기르는 것이 청소년 인권보장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최윤진 (중앙대 청소년학과) 교수는 지난 10월 서울시내 6개 중·고등학교 학생 5백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두발 및 복장과 같은 생활양식의 자유(36.9%)와 의사표현의 자유(13.8%)를 가장 침해받는 권리로 꼽고있다. 또 학생들은 인권이 가장 많이 침해되는 영역을 학교, 사회, 가정 순이라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충남대 천세영 교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장 먼저 두발과 복장의 자유화운동을 벌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허종렬 교수는 "교내 민주화를 위해서 학칙개정운동을 시급히 벌여야하며 그 과정에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대체로 청소년을 의사표현의 자율적 주체로 인식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청소년의 인권증진을 위해 청소년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인권교육을 시급히 실행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박동은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국제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지적하며 "국제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자율권보다는 생존권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전세계 인구의 5/6이 밀집된 개발도상국의 아동들은 강제노동과 매춘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라고 소개했다.

#### 하루소식 구독료 납부

(문의 이창조 02-741-5363)

2일 제4회 인권영화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인권영화제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④

국가인권기구와 인권법

국민회의는 지난 11월 24일 법무부의외의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인권기구(국민인권위원회, 약칭 인권위)를 특수법인화하기로 최종합의하고 그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권법안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이에따라 인권위는 시민사회단체의 환영은커녕 반발만 사는 가운데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권위는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해 피해를 구제하고, 인권현실의 개선을 위한 정책마련, 홍보, 인권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기구로, 지난해 정부는 인권위의 설치를 공식적으로 표명하 바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인권위가 그 역할을 올바로 다하기 위해서는 위상은 물론 인사·업무·재정 등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와 관련해 70여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로서의 인권위 설치 △인권위원의 공무원신분 보장 △인권위원 선출과정의 투명성 보장 △정규예산 편성 △정부간섭의 배제를 위해 인권위의 운영세칙을 대통령령이 아닌 위원회 규칙으로 제정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인권위가 정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는 특수법인이어야 한다'는 논리를 동원하면서 인권위의 특수법인화를 고집해왔다. 국민회의도 정부와 민간단체 사이의 조율 역할을 차임했지만 끝내 법무부의 특수법인화 주장을 수용하고 말았다.

한편 지난 1년간 시민사회계는 올바른 인권법 제정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강만길, 이돈명 씨 등 국내민주화운동로들은 2차례에 걸쳐 대통령에게 독립적 인권위의 설립을 요청한 바 있고, 지난 4월 17개 단체 소속 인권활동가 30여명은 전례가 없는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국제적으로도 국제앰네스티, 국제교문방지기구 등 대표적인 인권단체들이 법무부안을 비판했으며, 메리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도 "한국의 인권법 제정과정이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인권기구가 약체 기구화 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공대위측은 "교도소, 경찰, 검찰 등 주된 인권침해 기관들이 법무부 관할인 상황에서 이를 감시해야할 인권위마저 법무부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된다면 과연 그 기능을 다할 수 있겠느냐"며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 인권위라면 차라리 만들지 않는 것이 국민을 위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 인권법안대로 인권위가 설치된다면 이는 소외된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에 면죄부를 부여하기 위한 알리바이 인권위를 설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천하: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1999년 12월 4일(토)

제 1511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법 위에선 경찰 권력

집회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경찰이 집회 신고시 법적 근거도 없이 각서를 강요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경찰은 각서작성을 거부하면 집회접수증마저 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실정이다.

3일 전주중부경찰서로 집회신고를 하러 간 전주실업자지원센터 이창석 사무국장은 담당형사가 요구하는 각서 때문에 실경이를 벌여야만 했다. 이 씨는 "집회 신고서를 제출한 후 경찰이 각서까지 강요해 거부했으나 각서를 쓰지 않으면 접수증을 주지 않겠다"며 "98년부터 법령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며 모아둔 각서용지를 들어 보였다"고 말했다. 이 씨에 의하면 단체명과 단체 대표자 이름을 기재하도록 한 각서는 △불법집회를 하지 않겠다 △경찰의 가이드 선을 넘지 않는다 등 10개 항목으로 돼 있다.

근거도 없는 각서를 요구하고, 이를 조건으로 삼는 것은 집시법을 사전허가제로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한 것이며 무효"라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고상만 씨는 "경찰의 관료적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사회단체는 집회신고를 할 때 각서 안 쓰기를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덧붙여 그는 "경찰의 불법적인 집회 각서 요구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국보법 7조 피의자 또 유죄 책갈피 홍교선 씨 실행 받아

국가보안법 개폐논란이 활발한 가운데 제7조 관련 재판이 열려 세인의 관심을 모았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단독 2부(임준호 재판장)는 2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524호에서 책갈피 출판사 대표 홍교선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홍 씨는 지난 6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판매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이날 임준호 재판장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선고이유에 대해 "책 자체가 순수한 학문의 목적으로 제작됐다고 해도 판매한 사람의 의도가 학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하려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의 7조 1항(고무찬양)과 7조 5항(이적표현물 판매)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홍 씨가 제작·판매한 혐의가 인정된 이적표현물로는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소련 국가자본주의」·「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 등이며, 이중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은 서울대 등 10여개 대학에서 이미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홍교선 씨 석방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선고당일 법원지원이 홍 씨의 재판이 연기됐다고 했는데 이후 재판이 진행돼 법원에 남아있던 방청객들이 이에 항의했다"며 "이에 재판부가 12월 6일로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방청객이 없는 상태에서 홍 씨에게 선고를 내렸다"고 전했다.

대책위원회는 "재판부가 인의로 방청객을 배제한 채 비밀재판을 실시했다"며 "재판부가 약속한 12월 6일 재선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항의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 21세기, 양심수 사면부터 기독교 단체, 성탄절 특사 요청

기독교 단체들이 양심수들의 성탄절 전원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제열 신부)와 한국교회 인권센터(이사장 신삼석)는 1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길 법무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성탄절을 맞아 1백38의 양심수 전원을 석방해달라고 청원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은 국민들이 현 정부가 세 천년에는 과거 구태의연한 인권정책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이 우선되는 인권정책을 펴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21세기를 앞두고 국민 대화합과 과거청산차원에서 1백38명의 모 든 양심수를 석방해 이들이 희망찬 국가건설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 노동법 어겨 고소된 노동부장관 재능교육 교사노조 설립신고서, 보름째 방치돼

이상용 노동부 장관이 고소당했다. 9일 재능교육 교사노조(위원장 김수복)는 이상용 노동부 장관과 송봉근 노동부 노동조합과장, 박승희 서울 북부노동사무소장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재능교육 교사노조는 "노동부가 지난 11월 8일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 처리를 법정시한 3일을 훨씬 넘긴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며 고소 이유를 밝히고 "이같은 노동부의 불법행위로 재능교육의 교사들이 더욱 심화했으며, 사측의 탄압으로 교사들의 피해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1월 8일 재능교육 교사노조는 노동사무소에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바 있으나 노동부가 보안을 요구해오며 따라 19일 서류를 보완해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12조 '보안된 설립신고서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한다'는 조항과 정부의 민원사무처리규정 제 15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긴채 설립신고서

를 보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다. 재능교육 교사노조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교사들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위탁계약서의 폐지와 1인당 1백50만원의 보증금 반환 및 제도 폐지 등을 주장하며 12일째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12월 2일자>

## 노근리 대책위, KNCC 인권상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단초"

"저희들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노근리 미군양민학살사건대책위원회'(위원장 정은용, 노근리 대책위원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수여하는 13회 인권상을 받았다. KNCC는 9일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인권상 시상식을 갖고 노근리 대책위원회에 상을 수여했다.

정은용 노근리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소감을 통해 "미군의 기관총 사살로 노근리에서 죄없는 양민들이 3백여명이나 죽어야 했다"며 "죽은 자의 가족들은 지난 49년간 비참한 생활을 계

속했다"고 회고했다. KNCC 이명남 목사는 인권상 선정이유를 통해 "노근리 사건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원혼을 씻을 수 있는 명예회복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노근리 주민들의 싸움은 약자가 강자를 이긴 것이며 약소국이 강대국을 이긴 싸움"이라고 밝혔다.

94년 결성된 노근리 대책위원회는 미국과 한국정부에 대해 수 차례 노근리 학살에 대한 진상 조사와 손해배상을 요구해왔으며 학살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사료를 발굴해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 "또 다른 검열을 막아라" 문화계, 청소년연령 상향 비판

최근 정부가 청소년문화관람연령을 상향조정하려고 하자 이에 대한 문화계의 비판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해 사안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청소년 연령의 통합정책을 추진하면서 영화진흥법의 개정을 계기로 청소년 영화수용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영화인회의 등 10개 문화단체들은 9일 성명을 내 "청소년 문화관람 연령을 19세로 높인 것은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이는 문화계에 대한 검열 확대와 청소년의 문화 향유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들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소년연령 19세 상향조정'에 대한 문화계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오는 13일 국회 본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12월 3일자>

### 바로 잡습니다

일부 독자들에게 전달된 12월 9일자 하루소식 내용 가운데 건국대 법학교수의 이름은 이승오가 아닌 이승호임을 알려드립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천,하,참)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1999년 12월 11일(토)  
제 1516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너희가 민주주의를 아느냐"

### 한나라당, 국보법 개·폐 반대 당론 확정

끝내 한나라당은 인권의 적이길 자처한 반대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국보법 관련 논쟁이 수면위로 떠오른 뒤 한나라당이 '당의 입장'이란 표현 하에 국보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나라당은 10일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가 세계인권선언 51주년을 맞아 개최한 국가보안법 관련 특별세미나에서 "국보법이 일부 남용되고 있다고 해서 국보법의 존재이유까지 부정할 수 없다"며 국보법 개정 및 폐지에 대

한 반대입장을 공식 천명했다. 국보법 관련 논쟁이 수면위로 떠오른 뒤 한나라당이 '당의 입장'이란 표현 하에 국보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당초 정창화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하기로 했으나 돌연 참석을 거부했다. 정 의장은 대

신 '국보법 개정논쟁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이란 제목의 발제문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그리고 이 발표문을 통해 "국보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편한 국민들보다는 국보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끼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더 많다"며 "국보법은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들에게는 다름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의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 반하는 무력저항통일은 적극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에도 우리의 국보안에 준하는 형법이 있기 때문에 국보법은 계속 유지돼야한다고 밝혔다.

## <긴급속보> 민중대회 부상자 속출

### 항공대생 오른쪽 눈 실명... 중앙대부속병원 아비규환

10일 오후 서울역에서 열렸던 제 2회 민중대회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민중대회에 참석했던 여주 농민회 안영서(64) 씨는 집회도중 전경과의 마찰로 부상을 입고 중앙대부속병원으로 후송됐으나 12일 새벽 2시 현재 뇌출혈 현상을 보이고 있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한 민중대회가 끝난 후 오후 9시경 서울 충무로 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려 했던 서울지역 대학생 3-4백여명 가운데에서도 경찰의 토끼몰이식 시위진압으로 인해 부상자가 속출했는데 이중 대부분이 중태다.

항공대학교 총학생회 집행부장 이재희 씨는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오른쪽 안구가 파열돼 중앙대부속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실명이 확실한 상태다.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는 "안구 뒷편이 완전히 손상된 상태로 상태가 악화되면 왼쪽 눈 역시 실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토끼몰이식 진압으로 골목안에 갇혀 도망을 가던 중 시위대가 넘어지면 밭에 깔렸던 정은숙(세종대 인문대 96학번) 씨 역시 중앙대부속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11일 새벽 2시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정 씨는 호흡곤란과 심한 발작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와 마찬가지로 이유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된 윤미정(외대 왕산 캠퍼스, 여) 씨는 현재 호흡곤란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혈압이 70까지 떨어지고 있어 담당의사는 "더 이상 혈압이 떨어질 경우 저산소증이 일어나 뇌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함께 있었던 세종대학교 인문대 99학번 김 아무개(19) 씨는 "사람이 쓰러졌다고 앰블란스를 불러달라고 했으나 경찰들은 '너희들은 죽어도 된다'는 폭언을 퍼부으며 부상자들을 방치했다"고 분개했다.

한편 집회 과정에서 30-40여명의 학생들이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 '반국가단체·불고지죄' 개·폐 반대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반국가단체(2조) 개념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우리 헌법 제 3조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는 한'이라고 규정하는 한 북한은 당연히 반국가단체일 수밖에 없다"며 "남북교류의 확대를 발생하는 관계변화는 남북교류협력법과 같은 다른 법률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불고지죄(10조)와 관련해서도 "공익을 위해서는 신고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더 큰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를 들이밀며 불고지죄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7조(찬양·고무)에 대해 한나라당은 7조의 남용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부작용 때문에 이 조항을 완전히 삭제할 수는 없다"며 "목적성·위험성·이적성 등이 분명히 드러난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용과 해석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는 있다"는 선에서 7조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2면으로 이어짐>

## 만화사랑방



이동수









# "이근안 처벌, 고문범죄 단죄 시초"

## 즐거는 고문피해자들의 고문경관 고소 행렬

"이근안은 악마로밖에 달리 이해할 수가 없다. 그는 조작간첩 사건을 만 들기에 혈안이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 지 않고 사람들을 고문했다. 우리는 공소시효의 문제를 넘어서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법과 역사가 단죄해 줄 것으로 믿는다"

지난 10월 이근안 씨가 자수하면서 그가 저질렀던 고문범죄에 대한 검찰 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로부터 심한 고문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줄이

어 사법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함주병(64, 월북 간첩사 건) 씨 등이 '비인도적 범죄일 경우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 제법을 근거로 이근안 씨 고소하고 나 선 데 이어, 15일 이수일(46, 남민전 사건) 씨 등 4명이 서울지검에 그를 불법감금 및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 다.

이들은 모두 불법체포·감금된 상태 에서 전기고문과 물고문, 가혹한 폭행

등을 당했다고 밝혔다.

81년 전민노련 사건으로 대공분실에 고문수사를 받은 이태복 씨는 "성기 끝에 전신을 감고 전기고문을 하는 등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여지리라고 상상 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들을 일삼았 다"고 밝혔다. 이 씨는 또 "전기고문 에 이어 침대각목으로 발바닥을 수천 번 얻어맞아 결국 발이 썩은 상태에서 봉합수술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태복 씨와 박문식(41, 전민노 련사건) 씨는 당시 치안본부 대공분실 장이었던 박처원 전 치안감을 함께 고소했다. 이 씨 등은 "이근안 씨의 고문은 상부의 지시와 국가기관의 비 호아래 저질러졌다"고 지적하고 "박 처안감이 고문행위를 묵살을 리도 없 으며 그 역시 직접 고문을 가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①

## 동성애 왜곡한 교과서가 바뀐다

인권하루소식이 99년을 걸어오면서 취재했던 취재수첩을 열었습니다. 취 재사건 가운데 뒷소식이 전해지지 않았던 기사들 중 7가지를 선정해 후 속 취재합니다. <편집자 주>

"동성간의 사랑이나 성행위는 에이즈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는 불건전 한 성문화의 하나이다"

앞으로는 이렇게 동성애를 비하하는 내용의 문구가 교과서에서 잠정적으 로 사라질 전망이다.

지난 7월 동성애자인권연대(대표 임태훈)와 김길남 씨 등 동성애자 33명 은 교육부가 발행한 <윤리>와 <교련> 교과서가 동성애를 왜곡 비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에 수정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본지 7월 29일 자>

동성애자들의 항의에 일격을 맞은 교육부는 교과과정 평가팀 회의를 갖 고 <윤리> 등에 대한 교과서 검토에 나섰고 회의 결과에 따라 2천년 개정 발행되는 교과서에서는 '동성애를 에이즈의 주범 또는 성도덕 문란의 원인' 이라고 기술했던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교육과정 평가정책팀 이우용 교육연구사는 "동성애자인권단체의 수정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동성애에 대한 교육부 기술에 미흡한 점이 있 었던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 위 내용의 시정을 약속했다.

잘못된 성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이유로 동 성애를 무서운 질병쯤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성애와 에이즈가 무관하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성립된 정설이며, 세계보건기구(WHO)와 미 국정신의학회(APA) 등은 동성애가 "질병의 대상도 치료의 대상도 아님"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는 동성애자들 간의 결혼도 합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미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나라가 성적 다양성에 대한 인 정으로부터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했으며, 유럽공동체 역시 성적 지향성 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하고 있다. 여기에 영국 법원까지 얼마전 동성애 자 사이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동성애는 그야말로 세 계적인 합법화의 바람을 타고 있다.

## 전철연 의장 4년 선고

### 사제총포 배후조정 혐의 인정돼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의장 에게 실형 4년이 선고됐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7단독 김원종 판 사는 14일 오전 1심 선고재판을 열고 남경남 전철연의장에게 실형 4년을, 고천만 경기동부 철거민연합 의장에게 실형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남 의장 등은 지난 7월 수원 권선 4 지구의 사제총포 사용을 배후조종했다 는 혐의로 구속됐었다.

## 인권운동사랑방 송년회

20세기의 끝자락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이 마련한 송년회가  
오는 20일 열립니다.  
참석해주시어 자리를 빛내주시시오

- 때 : 12월 20일(월) 오후 7시
- 장소 : 성균관대 앞 육교 건너 '술익는마을' (02-765-6981)
- 문의: 이창조 (02-741-5363)

① 올해 인권 10대 뉴스를 선정해주세요.  
파손된 설문지는 다시 넣어드립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1999년 12월 17일(금)

제 1520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김대통령 "인권법 강행처리 않겠다"

## 민가협·유가협 회원들과 오찬

김대중 대통령이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인권법을 원안대로 강행처리하지 않겠 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16일 오전 11시 30분 인 권사회단체 인사들과 가진 오찬 간단 회에서 "시민사회와의 완전한 협의 없 이는 인권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없 으며, 지지받지 못하는 법안이라면 강 행 통과시킬 필요도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김 대통령은 "전세계에서 으뜸가는 모범적이고 독립성이 보장되 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싶다"며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바대로 인권위 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해놓 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

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는 국가인권위에 대한 시민사 회단체의 입장을 대통령에게 전달했 으며,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해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 된 인권법의 지지를 위한 행동에 들어 갈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공대위의 최종 적인 입장은 △인권위 상임위원을 정 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것 △예산을 법무부를 경유하지 않고 기획예산처에 직접 제출하도록 할 것 △인권위 시행 령의 제·개정 과정에 법무부의 관여 배제 △설립과정에서의 법무부 관여 배제 △인권위원회에 민·형사상의 면 책특권 부여 등이다.

한편 이날 오찬모임에서 김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권오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장의 발언에 대해 "국보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대통 령으로서도 어려움이 있었다"며 즉답 은 피했다. 또 양심수 사면과 정치수 배자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알고 있다"는 말 외에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날 오찬에는 이소선 씨 등 민주화 운동 원로 40여명을 비롯해 민가협, 유가협 회원 1백여명이 참석했다.

## 베트남에 사죄와 용서를

### 엽서보내기·거리캠페인 전개

최근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양민학살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국군의 양민학살을 반성하고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인권과평화를위한한국제민주연대'(공동 대표 채수일 등, 국제민주연대)는 지 난 6일부터 한달간 '베트남전 양민학 살 진상규명 및 화해'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 캠페인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주말마다 진행되며 양민학살 피해자 사진전시, 베트남 민중에게 사과엽서 보내기, 진 상규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모금활 동을 전개하고 있다.

24년전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군 은 아동, 여성, 노인 등 5천여명의 무 고한 베트남 양민을 학살한 것으로 확 인되고 있지만, 아직 한국정부는 공식 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국제민주연대의 이준형 씨는 "우리는 노근리 학살에서는 피해자였지만 베트 남전에서는 가해자라며 '베트남인에 대한 사죄와 용서없이 정신대나 노근 리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일본에게 몇 몇하게 사과를 요구할 수 없다"고 주 장했다. 동참을 원하는 사람은 국제민 주연대로 문의(전화 : 02-3676-5808)

## 만화사랑방



이동수

# 새천년 인류의 지향점 "인권"

## 전쟁 · 빈곤 · 차별의 역사 담은 폴리처상 사진전

2000년대를 불과 보름 앞두고 1900년대 역사속에 묻혀진 진실과 인권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펼쳐지고 있다. 바로 세종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폴리처상 사진대전. 1942년 미국 노동자들의 분노를 담은 '포드사의 파업'이란 작품을 비롯해 전시된 사진 하나하나가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인권침해의 역사가 무엇이

있는가를 지시하게 한다. 얼어붙은 강에 떨어져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며 무너진 대동강 다리를 필사적으로 건너가는 피난민의 행렬과 등에 겨누어진 총부리에 밀려 벌거벗은 채 걸어가는 사람들(1951년 한국전쟁), 온몸에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칼을 겨누는 군인을 응시하던 베트남인(1965년 베트남 전

쟁)의 사진은 20세기 전쟁이 안겨다준 계약들을 낱알이 고발하며 우리를 꾸짖는다.

양상한 살가죽 밖으로 드러난 뼈와 왜소한 몸에 비해 기형적으로 거대한 머리. 엄마 품에 안겨있는 에디오피아의 아이는 굶주림에 찬 시선으로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고 있다. (1984년 에디오피아의 아이) 그 사진 뒤로는 평온한 식당의 큰 창문을 통해 배고픔에 지쳐 쓰러진 사람들의 시선이 잡힌다. 그리고 비오는 거리 한 모퉁이에서 상자를 뒤집어 쓴 채 까니를 때우고 있는 노숙자의 사진(1986년 필라델피아의 홈리스)은 이 세상 다수가 빈곤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을 고발한다.

또한 사진은 차별의 문제에도 접근한다.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없애고자 국도를 횡단하던 흑인대학생이 백인들로부터 60여군데의 총상을 입은 채 고통에 울부짖고(1967년 미시시피주에서 총맞은 메레디스), 할례의식을 치르는 16살짜리 케냐 소녀는 피문은 면도칼 옆에서 머리를 땅에 댄 채 울고 있다. (1961년 케냐의 여성할례)

그러나 전쟁과 빈곤, 차별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한줄기 빛을 발견한다. 감전된 동료를 살리고자 전봇대 위에서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모습(1968년 생명의 키스)은 다가오는 새천년 인류사회가 지향해야할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우쳐 준다. 바로 생명과 인권의 존중을.

굳이 인권과의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없는 사진도 눈에 띄는 이 전시회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휴관 없이 계속될 예정이다. (문의 02-399-1512)

### 인권운동사랑방 송년회

인권운동사랑방이 마련한 송년회가 오는 20일 열립니다.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 때 : 12월 20일(월) 오후 7시  
 · 장소 : 성균관대 앞 육교 건너 '술익는마을' (02-765-6981)  
 · 문의 : 이창조 (02-741-5363)

○ 올해 인권 10대 뉴스를 선정해주세요. 설문지를 분실한 분께는 다시 보내드립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1999년 12월 18일(토)

제 1521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비정규직 노조 최초 합법화

### 재능교사노조, 41일만에 노조 신고필증 받아

국내 최초로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노조가 합법화됐다. 이로써 그동안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었던 노동자들도 합법적으로 노조를 설립해 회사측과 단체협상을 벌이거나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위원장 김수복, 교사노조)은 17일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지 41일만에 노동부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교사노조는 지난달 7일 출범한 후 그 다음날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별다른 이유없이 법정 처리기한인 3일을 훨씬 넘긴 채 40일에 이르도록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교사노조는 지난 9일 이상용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송봉근 노동부 노동조합과장장 박승희 서울북부노동

사무소장 등 3명을 직무유기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본지 12월 10일 자>

교사노조가 합법성을 쟁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계는 전체 노동자의 50%가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살길이 생겼다고 반겼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그간 정부와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이름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폭 늘려 노동자들의 고통을 짜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교사노조의 합법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박차를 가해 노동자 권익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고필증 교부를 지연한 노동부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노동부 개혁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능교육교사노조는 교사들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위탁계약서와

1인당 1백50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제 폐지를 요구하며 지난 11월 29일부터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 경찰, 사건 해결 의사 밝혀 아산 지용석 씨 사건

아산경찰서 앞에서 분신한 택시노동자 지용석 씨 사건이 해결기미를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11월 27일 자> 17일 오후 아산경찰서 윤홍기 정보과장은 성공교회회 소속 박명순 신부와 만나 지 씨에 대한 경찰측의 사과와 보상사를 밝혔다.

"지용석 씨 분신대책 공대위"(공대위)에 따르면, 박 신부와 만난 정보과장은 "서장이 직접 사과하고 8백만원의 치료비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으며, 18일 오전 11시 공대위 소속 4명의 대표와 지 씨 부인인 김자영 씨가 참석한 자리에서 정식으로 이를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한다.

지 씨는 지난 8월 경미한 교통사고로 아산경찰서에 일주일간 조사를 받으러 다니다가 경찰의 모욕적인 말투와 태도에 심한 모멸감을 느끼고 경찰서 앞에서 분신해 지금까지 병원에서 투병 중이다. 현재까지 지 씨의 병원비는 약 3천만원에 달해 가족이 도저히 부담할 수 없는 형편이며, 공대위는 중재안으로 가족과 공대위, 경찰이 각각 1/3씩 부담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공대위는 지난 12월 1일부터 아산경찰서 앞에서 농성을 진행중이며 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작업도 벌이고 있다.

### 행사와 동정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세미나 '중국의 사형집행유예제도'  
 때: 12월 18일(토) 오후 2시 장소: 서울 가톨릭회관 3층 대강의실  
 주최: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02-776-7208)

◇ 북한교육현실과 세계교원단체의 현황  
 때: 12월 18일(토) 오후 4시 장소: 한국기독교연합회관 4층 404호  
 주최: 한국교육연구소 (02-708-4163)

◇ 농어촌·작은학교살리기 운동의 평가와 전망 워크숍  
 때: 12월 18일(토) 오후 5시  
 장소: 충북 옥천 명가(0475-731-5501)  
 주최: 농어촌·작은학교살리기운동본부

◇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때: 12월 19일(일) 오후 5시 장소: 장충체육관  
 주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02-762-2606)

### ○ 설문지를 보내주세요

올해 인권 10대 뉴스를 선정해주세요. 설문지를 분실한 분은 다시 보내 드립니다.

# 시민의 신문 기자, 집단 사직

## 회사운영 둘러싸고 경영진과 마찰

주간 <시민의 신문>(대표이사 이형모)이 심한 내부갈등을 겪고 있다. <시민의 신문> 사 소속 기자와 노조원 등 14명은 1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사무실에서 농성을 돌입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최근 편집국장이 인사위원회와의 논의없이 독단적으로 계약직 기자에게 부서이동을 권고함에 따라 노조는 "지난 7월 노사간에 맺은 단체협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농성을 시작한 것.

13일 노조는 △조 아무개 기자에 대한 부서이동 권고를 철회할 것과 △이미 합의한 인사위원회를 조속히 설치·운영할 것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사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다음날 회사는 전사원이 모인 자리에서 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노사간 단체협약 당시 회사는 조합원 징계, 인사 시 '인사위원회 구성'과 '편집권 독립'에 대해 구두로 약속한 바 있으나, 사측은 협상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배영환 노조위원장은 "현 편집국장 선임시에도 노조대표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천군 편집국장은 기자들의 집단사직에 당혹감을 표시하며 "부서를 옮기라고 한 것은 이동권고일 뿐 해고의 의미가 아니다. 기자에 대한 자질 판단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인사방식이 회사와 같다고 비판하는데 주시회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 위원장은 "조 기자는 출판국 직원으로 입사했지만 기자가 부족해 부서가 이동했으며 이미 출판국도 없어진 상태에서 업무국으로 부서를 이동시킨 것은 결국 나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또 "시민의 신문이 시민 운동정론지를 지향하는 만큼 사내에서부터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사장 1인의 집중적인 소유구조를 깨고 기획위원 등으로 활

동중인 70여개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통해 시민언론재단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신문은 '93년 경실련 기관지로 출발해 97년 '시민단체공동신문'으로 모습을 바꿨으며 경실련·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등 70여개 시민단체가 기획협력단체로 참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민운동 대변지다. 그러나 시민운동을 표방하는 매체라는 대외적 이미지와는 달리 내부적으로 △이사장의 독단적 경영에 따른 사업실패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편집권 침해 △임금체불 등의 갈등을 겪어왔다. 이에 평직원들은 지난해 12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임금협약 등을 맺은 바 있다.

###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③

#### 지문날인 거부 운동

올해는 지난 68년 이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시행된 강제 지문날인 조치가 처음으로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친 한 해였다.

시민사회가 지문날인 거부운동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정부가 현 주민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일제 경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였다. 정부는 "주민증 경신과정을 통해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지문을 디지털 방식으로 채취하겠다"고 밝히고 "지문날인을 하지 않으면 새 주민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주민증을 만들 때 열손가락의 지문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행위"이며 "디지털 방식의 지문 채취는 국민에 대한 전자적 감시와 통제수단으로 적용돼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반대 여론 속에 사회진보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사회단체는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를 구성했으며 김진균(서울대 교수), 문정현(신부), 이부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씨 등 사회인사 1백51명은 지난 7월 "지문날인이 폐지되지 않는 한 주민증 없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 소수 지식인을 중심으로 출발한 지문날인 거부 운동은 채 2주일이 지나지 않아 평범한 회사인과 주부 등으로 확대돼 지문날인 거부 선언운동에 동참한 사람은 1천여명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문을 채취하고자 하는 정부의 불법행정은 줄어들지 않았다. 정부는 동사무소 직원들은 물론 통·반장까지 주민증 경신 사업에 동원했다. 주민증을 경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줄잇는 독촉전화와 공무원들의 방문에 시달려야 했다. 또 이들의 집 앞에는 '주민증을 경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을 말소시킨다'는 내용의 협박성 공문서가 붙기도 했다.

한편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펼쳤던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9월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 전산화 폐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별다른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직 미성숙한 시민의식을 파고들며 끊임없이 통제와 감시를 기도하는 국가폭력 지문날인. 감요된 굴종의 폭력이 우리사회에서 사라질 날은 아직도 희미하기만 하다.

### 인권운동사랑방 송년회

인권운동사랑방이 마련한 송년회가 오는 20일 열립니다.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 때 : 12월 20일(월) 오후 7시
- 장소 : 성균관대 앞 육교 건너 '술익는마음' (02-765-6981)
- 문의 : 이창조 (02-741-5363)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1999년 12월 21일(화)

제 1522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조계사 농성 5백일 해산

### 정치수배자 농성단 검찰 자진출두

정치수배자들이 5백일동안의 농성을 정리하고 검찰에 자진출두한다. 수배 해제를 요구하며 지난 98년 9월부터 조계사에서 농성을 벌여온 '정치수배 해제 조계사 농성단'(단장 오창규, 농성단)은 20일 "정치수배해제 문제가 정부측과 일정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해 자진출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성단은 "청와대측이 '자진출두해 성실히 수사에 협조할 경우 최대한 수배자 전원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중 구속처리가

예상되는 6명에 대해서도 청와대측은 '구속기간이 40일을 넘지않고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농성단은 합의의 결실들로 문제가 됐던 준법서약서 작성과 관련해 "청와대측과 준법서약서를 없애는 대신 '내용과 형식에 상관없이 각 개인의 소회를 밝히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성단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조계사에서 농성 5백일을 맞는

법회를 개최한 후 오후 2시경 1차로 서울지검에 자진출두할 계획이다. 또한 연락이 단지 않는 수배자들을 위해 오는 27일을 2차 검찰 출두일로 정했다. 현재 남아있는 김영삼 정권시절 수배자들은 모두 42명으로 이들은 21, 27일 양일간 대부분 검찰에 자진출두할 계획인데, 이들 가운데 오창규 농성단장을 비롯해 유병문(96년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씨 등 6명은 구속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농성단의 박제철(31, 97년 한총련 간부) 씨는 "김영삼 정권 시절에는 구정권의 수배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석달 정도 걸렸는데 현 정부에서는 2년이 넘게 걸렸다"며 착잡한 마음을 표시했다. 박 씨는 이어 "수배자들이 검찰에 출두하지만 국가보안법이 남아있는 한 정치수배자는 계속 양산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국보법폐지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④

#### 해고노동자 단식투쟁

올해는 유달리 단식투쟁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사건들이 많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관련한 인권활동가들의 집단단식, 한상철 목사의 53일간 단식투쟁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나선 각계 사회단체 활동가 및 사회인사들의 단식투쟁, 생존권을 걸고 단식투쟁에 나선 천거민, 노점상, 장애인들.

이들 외에도 해고노동자 두명은 30-40여일이 넘는 단식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삼성그룹 해고노동자 김용희(40·전해투조직국장) 씨의 단식투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11월 13일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에서 시작한 단식농성이 벌써 38일째. 96년 삼성측이 약속한 계열사 원직복직 이행을 요구하며 농성중이지만, 거대제벌 삼성은 일개 해고노동자의 단식에 쿡방귀도 끼지않고 있다. (본지 11월 27일 참고) KNCC 장창완 목사는 "삼성과의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으며, 김 씨의 건강상태가 매우 위험해 병원으로 옮기는 등 관련단체들과 향후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6일부터 40여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던 해고노동자도 있다. 고려화학 해고노동자 연기홍(31) 씨다. 연 씨는 지난 95년 부당해고후 법정소송으로 복직했으나 96년 제해고돼 고등법원에서조차 적법한 해고였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본지 10월 16일자 참고) 고려화학 노조는 "단식 41일경(10월 17일) 회사측과 해고기간 동안의 밀린 임금을 지급받는 선에서 농성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 전국연합 한총목씨 체포

#### 북경민족대토론회 배후조정혐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의 한총목 집행위원장이 지난 19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돼 현재 구로동 대공본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한 집행위원장은 지난 8월 북경에서 열렸던 북경민족대토론회를 배후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연합은 "북경민족대토론회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국보법 상 회합통신죄로 이미 지난 8월 구속돼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상태"라며 "사건이 마무리된 지금, 뒤늦게 한 집행위원장을 체포한 것은 현시기 국보법 폐지 논의를 가로막고자 하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국연합은 20일 오후 1시 구로경찰서 앞에서 함의집회를 개최했다.

인  
권  
시  
평

### 죽음에 대한 예우

공선옥 (소설가)

얼마전 가까운 친지의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13년간을 중증 뇌성마비를 앓으며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갔다.

아이의 부모는 물론이려니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슬픔 속에서 아이를 보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을 위로하려고 그랬다고 이해를 하려고 했으나 나를 좀 의아하게 했던 몇몇 사람들의 반응도 있었다. 일테면, 아이가 저 세상으로 간 것이 실은 그렇게 나쁜 일만도 아니라는 견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제 힘으로는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아이가 저 세상으로 간 것이 어쩌면 아이를 위해서나 아이의 부모를 위해서도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는 나로서는 '섬뜩한' 논리를 피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한 세상을 살만큼 산 사람들이었다. 한 세상을 살만큼 살아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이미 알아서 그런 말들을 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세상을 아직 제대로 다 살아보지 못해서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험난한 곳인지 몰라서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한 죽음을 두고, 더군다나 그 아픈 몸으로 겨우 13년을 살다간 한 어린 영혼을 두고 그런 소리를 해서선 안된다. 라는 강한 반발의식을 지울 수 없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무섭고 험난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이 살아야 하고 살 수 있어야 하고 살 수 있도록 도우며 살아야 하는 것이 생명 가진 사람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이 세상은 그저 건강하고 가진 것 많은 사람들만 살아야 하는 곳인가. 실지로 그런 것도 사실이다. 이 세상이란 곳은 건강한 사람만, 돈 많은 사람만, 권력 가진 사람들만이 살아가기 좋은 곳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니 그래서 더욱 우리는, 사람이기에,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사람이려면 이 세상 살아가기 힘든 조건을 가진 이를 도와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놓고 우리는 무슨 말을 해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즈음의 세상을 보면 너무나 살아있는 것만을 찬미하여 죽은 이를 천대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되어 있는 분위기로 되어 있다.

그것이 나는 무섭다. 죽음을 예우하지 않는 사회, 그 사회가 바로 죽은 사회가 아닐까. 사람이 죽으면 쓰레기 치우듯 그저 빨리빨리 치워버리는 사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할려면 죽은 이를 대접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천도제는 지내지 못하더라도 한 죽음에 대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조차도 나 몰라라 한다면, 그리하여 그 죽음들을 영원히 쓰레기 매립하듯 역사 속에 묻히게 한다면 우리의 사회는 앞으로 도 끝없는 죽음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주간인권흐름

(99년 12월 11일-12월 20일)

1. **핍박받는 여성해방 사상**  
강단 안팎에서 여성해방 사상을 전파해온 효성카톨릭 대학의 진보성향 여교수 손터수(사회복지학과) 씨, 강의부실 등의 이유로 전격해임돼 여성단체 심하게 반발 (12/15)

2. **비정규직 노조 최초 합법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주)제능교육 학습지 교사노조, 노동부로부터 41일만에 노조설립신고필증 받아내 (12/17) ...이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설립과 단체행동, 단체협약의 길 열려

3. **성년 농민들**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등 개혁입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민들, 각 지역 국회의원 지구당사 점거하고 농성 전개 (12/14)

4.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 통과**  
난항을 겪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문제에 관한 법률안',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통과돼 (12/17)

5. **무기한 연기된 인권법**  
국민회의, "시민사회와 야당의 합의없는 인권법안 제정, 무기한 미루겠다"고 밝혀 (12/20)

6. **이젠 분단없는 곳에서**  
사회안전법 등에 의해 30년간 옥고를 치른 비전향장기수 최남규 옹, 숙환으로 운명 (12/11)

7. **특검 받아야 할 특검팀**  
강원일 특별검사,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은 감회복전 조폐공사 사장의 독자적 판단이라고 수사결과 발표 (12/17) ...김형태 전 특검보, 대검공안부가 파업을 유도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제시하며 특검팀 결과 반박 (12/17)

8. **검찰 결국 '고문'에 면죄부**  
검찰, "공소시효가 지난 고문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이근안 씨가 저지른 모든 고문범죄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 내려 (12/16) ... 반인도적 범죄인 고문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에 비판 잇따라 / 검찰, 85년 김근태 씨 수사당시 김 씨가 고문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검찰이 은폐했다는 것과 정형근 의원이 고문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 확보 (12/16)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1999년 12월 22일(수)

제 1523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정광훈 전농 의장 체포

### 농민들 격앙, "정권퇴진투쟁 불사"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정광훈 의장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또한 지난 10일 민중대회에 참가했던 농민 18명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확인돼 이를 둘러싼 농민들의 분노와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⑤ 탈북자, '인권피해 기자회견' 그후

"그때는 너무 어려워 사실 괜한 짓 했다는 생각도 했는데 요즘 넘어온 사람들을 만나보니 잘했다 싶어 보람이 생깁니다."  
그의 목소리에 이젠 제법 서울사람 억양이 배어나고 있었다. 어느새 3년째로 접어든 이남생활. 그러나 탈북자로써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던 시간이었기에 한창권(39) 씨는 그 중 올 한해가 유난히 힘들기만 했다.  
지난 1월 15일,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탈북자들은 어느 탈북자들이 갖는 기자회견과는 다른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섰고 이 기자회견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켰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탈북자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자유민주주의라 믿었던 한국사회가 탈북자에 대해 어떤 이존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폭로했다. 그들은 국가정보원(국정원, 옛 안기부) 직원들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폭력을 자행해왔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한 달 후 이들은 안기부가 저지른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관련기사 본지 1월 16일, 2월 20일 자).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기자회견을 주도했던 한 씨 등 탈북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폭행·감금 사건 등에 휘말렸다. 한 씨는 기자회견 이후 친구와의 사소한 싸움 끝에 폭력혐의로 고소돼 한동안 철창신세를 지기도 했다. 또한 기자회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홍진희(31) 씨 역시 사귀던 여자로부터 고소당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곧 이러한 일들은 국정원이 탈북자들의 주변사람들을 교묘히 회유·협박해 만들어진 공작이었음이 밝혀졌다. 결국 홍 씨 등에 대한 고소는 취하됐다.  
한 씨 등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기자회견이 있던 후, 국정원에 의한 탈북자 인권침해 행위는 중단됐다. 또한 무분별하게 진행되던 감시와 제약도 많이 없어져 탈북자들의 해외여행도 가능하게 됐다. 한 씨 등의 용기있는 행동이 빛을 본 것이다.  
얼마전 서울 길동에 고기집을 치렀다는 한 씨는 말한다. 배고픔을 못 이겨 탈북했지만 먹고사는 문제 말고도 소중한 '인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를 받고 있다. 정 의장을 집결한 이상희 변호사는 "경찰이 2차 민중대회와 관련해 정 의장과 배 대외협력부장을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 이들에게 뚜렷한 혐의를 추궁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전농 중앙집행부를 비롯해 농민대회에 참가했던 농민들 18명에게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유상욱(전농 사무총장), 최진국(전농 정책위원장), 김영동(광주전남농민연맹 사무처장) 등으로 이들은 2차 민중대회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장 등의 연행소식이 알려지자 전농은 21일 오후 2시 30분을 기해 전국 비상투쟁을 선포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해 농민들을 남대문경찰서 앞으로 집결시키고 있다. 또한 비상전국위원장 회의를 소집해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의장단 회의는 즉각 전농 농민단 압분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 의장에 대한 연행과 농민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김대중 정권이 대 농민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사회단체와 연대해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화해자주통일협의회(상임의장 단병호, 문규현 등)도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 정권이 계속해서 농민들의 정당한 생존권 요구에 기만적인 대응과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 의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전농은 2차 민중대회에서 농가부채특별법 제정 등 4대 농민생활개혁법의 제정을 촉구한 바 있으나, 정부와 언론이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 채 민중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 등만 문제삼자 지난 14일과 15일에는 전국 40여개 지역 각 국회의원 지구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현장스케치>

아름다운 아이들의 겨울 외출

"저의 경험을 솔직히 풀어놓으면서 생각이 지졌던 일들을 많이 반성했습니다.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구요."

22일 장충동 여해문화공간에서 열린 연극 '아름다운 아이들 2'를 준비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내면과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되었다는 서동윤(18세)군의 이야기. 지금은 '고봉실업고등학교'로 문패를 바꿔 단 경기도 의왕시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동윤이는 이 연극에서 친구 11명과 함께 그동안 감추어왔던 내면의 억압과 아픈 상처를 고스란히 뽐내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기억, 대화와 온기가 사라진 가정, 폭력과 불신만을 가르쳐준 학교와 사회, 본드와 도둑질로 이어나가야 했던 겨울이후의 생활, 경찰서에서 당해야 했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으면서, 아이들은 용기있게 자신들의 상처를 마추웠다.

잠시의 자유, 그러나 다시 멀어질 발걸음

'아름다운 아이들 2'는 아이들이 준비한 무대에서의 독백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느 연극과 다른 차별성을 보였다. '억압받는 사람들의 연극공간-해(解)'(대표 노지향)의 도움을 받아 개최된 이 연극은 '토론연극'이라는 색다른 형식을 도입, 관객과 배우의 이분법을 해체했다. 토론연극이란 관객들이 원하는 장면에서 직접 배우가 되어 펼쳐진 문제상황에 대한 대안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참여연극의 한 형태다. 이날 연극에서 관객들은 아이들의 상처를 풀어주는 교사나 부모가 되기도 하고, 가정과 학교, 사회가 가하는 폭력에 저항하는 아이들이 되기도 하면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억압적인 현실의 변화를 요청했다.

간혀있는 아이들이 배우가 되어 펼쳐놓고 관객들이 또다른 배우가 되어 새로운 상황을 연출했던 이 색다른 연극은 '차별과 일방적 교화'가 아닌 자신의 내면과 사회와 호흡하는 방식으로 소년원 교육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도 낯다른 의미를 갖는다.

잠깐동안 허락받은 자유로운 공기, 오랜만에 부등켜안은 친구들과 가족들의 눈물을 뒤로 한 채 또다시 소년원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남긴 질문. "당신은 과연 우리들의 상처와 무관한가?" 이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는가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던져진 몫이다.

**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하는 '올해 인권 10대 뉴스'**  
**10대 뉴스 선정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파손된 설문지는 제발송해 드립니다.  
 문의 유해정 (02-741-5363)

<평화와 인권>이 뽑은 99년 전북지역 인권 10대 뉴스

1. 노동자들 공안탄압 맞서 연대투쟁 (1월)  
노동탄압에 맞서 전북지역 노동자들은 '투쟁사업장 연대회의'를 결성해 연대투쟁에 나섰다.

2. 총기남용 등 만성적 경찰폭력  
전북경찰청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청산하에 '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했으나 경찰에 의한 인권유린 시비는 끊이지 않았다.

3. 손성모, 신광수 씨 끝내 석방 안돼 (2월)  
긴 감옥살이에도 불구하고 손성모(71세, 19년 복역), 신광수(71세, 15년 복역) 두 비전향장기수는 끝내 석방되지 못했다.

4. 최초의 지문날인 반대 운동 (7월)  
정부가 주민증을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일체 경신하겠다고 지문을 전산화하자 시민사회는 '지문날인 거부 운동본부'를 결성, 지문날인 거부운동에 나섰다.

5. 노동탄압 맞서 문정현신부 단식투쟁 (7월)  
북지투쟁을 벌이던 기아특수강고교자들을 검찰이 구속하려하자 문정현 신부는 공안탄압의 중단과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고 결국 해고노동자에 대한 구속의도는 무산됐다.

6. 군산 미군, 평화운동가 강제구금 (8월)  
8월 군산 미공군 기지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문정현 신부 등이 미군에 강제연행돼 불법 감금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일은 '불평등한 한미 SOFA개정 국민행동'이라는 전국조직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7. 비정규직 노동자들 조직화 시작 (8월)  
건설일용노동자가 군산과 익산지역에도 만들어졌으며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 추진위가 결성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했다.

8. 한상렬 목사 53일 단식 (10월)  
올 한해 국보법 폐지 운동이 지속적으로 벌어진 가운데 한상렬 목사는 국보법 폐지를 촉구하며 53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다.

9. 집회 시위의 자유 크게 제한 (10월)  
집시법이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게 개정됨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가 크게 제한됐다. 경찰이 집회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이른바 '(준법)각서'를 받아온 것도 윤희의 일이다.

10. 농민 농가부채 급증 (12월)  
2차 농민대회에서는 농가부채로 인한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지만 정부와 언론은 농민의 요구는 묵살하고 오직 폭력시위만을 보도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하·참)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1999년 12월 24일(금)

제 1525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실업상태 호전 안됐다

저소득층 3명중 1명 장기실업자

과연 우리사회의 실업은 감소했는가? 최근 정부와 언론이 경기가 IMF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IMF로 인한 실업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단법인 한겨레노동교육연구소가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 1천4백7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97년 IMF여파로 실직한 사람들 중 70% 이상이 1년이 넘는 장기실직에 시달리고 있으며 재취업한 숫자는 3백40명에 불과했다. 더구나 재취업자들의 상당수가 이전 직장에 비해 임금 및 근로조건이 열악한 직장에 취업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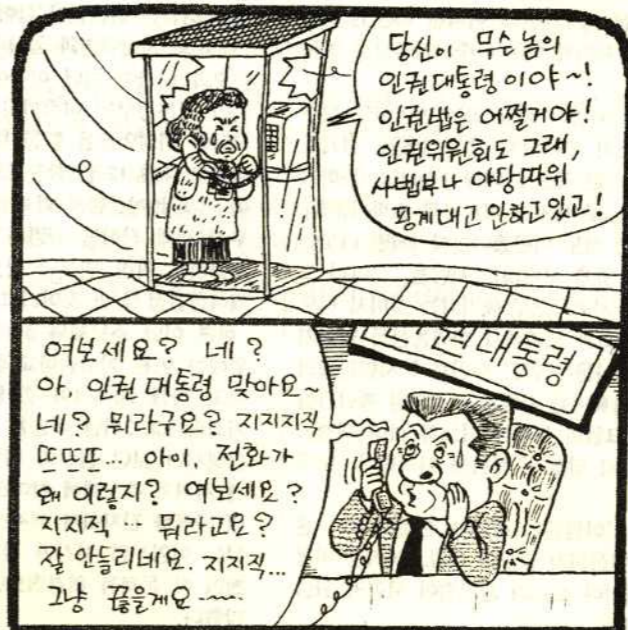
대상자의 80%이상은 자신의 실업이 사회구조적 측면에 의한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대부분(71%) 실직이전에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했었는데, 실업이 가장 집중됐던 부문은 건설업(21.1%), 제조업 중 경공업(21%), 개인서비스업종(20.7%) 등이었다. 이들의 실업은 장기화돼 16개월 이상 실업자가 3명중 1명 꼴(32.5%)이었고 1년에서 16개월 미만의 실직자 역시 3명중 1명 꼴(30%)이어서 장기실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실업대책 효과없어

저소득층 실업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만화사랑방

이동수



고 정부의 실업대책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자들 중 절반이상(61.5%)이 친구나 친지, 전 직장의 지인을 통해 직장을 구했다고 답한 반면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직업알선망을 통해 실직을 해결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8.5%에 불과했다. 특히 정부의 실업대책 중 소득보장대책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조사대상 중 고용보험,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의 실업대책으로 도움을 받은 가구는 10가구 중 3가구(29%)이 채 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공공근로마저 한시적으로 진행돼 정부실업대책의 효과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업이 가져다주는 위기는 가정마저 뒤흔들었다. 실직 이후 이혼이나 별거 등을 고민한 사람이 1백가구 중 8가구며 이중 이혼과 별거에 들어간 수가 2가구였다. 또한 실직은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마저 박탈했다. 1백가구 중 7가구가 자녀의 진학을 연기하거나 연기시켰고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자녀를 친지 혹은 시월에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분석한 김연명(삼지대)교수 등은 '경제활동 중심이 아닌 생활전반에 걸친 통합적 실업대책이 수립돼야한다'고 지적하고 △실업 극복을 위한 시스템 개발△기혼여성의 노동기회 창출 △실직가정 아동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 등이 더욱 강화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하루소식 25일자 쉽니다

**비전향 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결성식**  
 때: 12월 27일(월) 오전 11시  
 장소: 종로5가 기독교회관  
 주최: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02-3273-2890)

# 봉천3동, 철거폭력 극성

## 주민들 온몸에 피멍, 전치 5주 부상

전문 철거용역회사 '다원'이 또다시 철거민들을 폭행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있다.

22일 다원 소속 용역원 김철호, 윤석현 등 20여명이 공가를 철거하면서 항의하는 봉천 3동 주민들을 집단폭행해 주민들이 크게 다쳤다.

주민 김하실(여·52) 씨는 "오전 8시경 용역들이 우리 뒷집을 철거해 집이 흔들거려 항의하자마자 용역들이 '이사가라는데 왜 안가느냐며 팔꿈치로 배를 연속해서 쳤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박순애(여·

37)씨는 "먼지가 뽀얗게 올라와 앞이 분간안될 지경이어서 물 좀 뿌려가면서 철거하라고 하자 갑자기 20여명이 우루루 돌러와 우리를 들어 올렸다가 땅으로 내리치더니 발로 마구 밟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주민들이 오기 전까지 용역들에게 2-3시간 동안 얻어맞은 김 씨와 박 씨는 온몸이 퍼렇게 멍이 들었다. 더구나 박순애 씨는 얼굴이 찢어지고 양손과 얼굴이 시퍼렇게 부어올랐으며 치아 전체가 흔들리는 상태다. 박 씨는 "인근 치과에서 5주 진단을 받았으

며 담당 의사에 의하면 5주 정도 지난 후에 의치를 해야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봉천 3동 사회복지관에 상주하는 다원용역이 최근 주민들에게 직접 폭행을 가한 것만도 이번이 세번째다. 용역들의 폭력으로 주민들이 갈비뼈와 허리를 다치는 경우는 예사로운 일이 됐으며, 심지어 콩팥이 터지는 경우도 있었다(본지 11월 19일, 12월 1일 기사 참조).

### 위안부 할머니 추모제 열려 올 한해 11명 영면

"못다 쓴 한을 안고 가신 분들의 아픔이 아직도 귓가에 들려온다. 생전의 한이 47개의 초와 함께 녹아내리기를..."

강요란, 조순덕, 김원양, 강막달 씨 등 올해 돌아가신 11명의 할머니의 영정 앞에 진혼무가 올려졌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2일 오후 2시 정대협교육관에서 '제2회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추모제'를 가졌다.

홍순관 할머니는 "우리가 겪은 것은 창피한 사실이지만 역사의 진실 앞에 침묵하는 너희가 부끄러움이요, 범죄"라고 울먹였다.

할머니들은 한결같이 살아 생전에 일본정부의 진상규명과 공식사죄를 통해 증오의 대상이 아닌 이웃이 되고자하지만 일본정부는 아직까지 한번도 공식적인 사과입장을 밝힌 바 없다. 정대협은 내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아시아 피해국 여성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일본군 성노예전범 국제여성법정'을 열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날 추모제와 3백90차 수요시위에는 인천 가좌중학교와 서울 상명여고 학생 3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가좌중학교 3학년 이승용 군은 "TV를 통해서만 보던 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 시위와 추모제에 참여하게 돼 정신대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 정부는 어영부영 시간만 끌지 말고 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㉑(끝)

## 대형화재 당했던 화훼마을

주변 어디에도 화훼마을의 존재를 알리는 이정표는 없었다. 17년이나 된 마을역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생긴 장지역 역사 지도에서조차 화훼마을이 있는 자리는 논으로 표기돼 있었다. '버림받은 사람들', 화훼마을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곤 했다.

혹한이 들이닥쳤던 지난 1월 19일, 8백여 명이 모여살던 서울 송파구 장지역 동 화훼마을에는 큰 화재가 나 3백7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노점이나 일용직노동 등으로 간간히 생활을 연명하던 사람들이었기에 화재의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었지만 송파구청은 마을을 복구하는데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 주민들이 거주하던 땅이 불법점유지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주민들은 분노에 차기 시작했다. 엄연히 사람이 살고 있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정식주거지역이 아니라 이유로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수도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땅,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다른 곳으로 돼있어 장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하는 아이들, 주거환경의 열악함으로 생기는 피부병과 소화기질환. 집 없는 이의 설움이라며 꼭꼭 참아왔지만 해도 너무했다. 때만되면 나오는 세금과 선거철이 되면 이곳까지 찾아와 표를 부탁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도와주지 못할망정 화훼마을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것마저 막으려 했다. 마을사람들은 구청과 기독교연합회관 등지에서 항의농성을 벌였지만 당국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결국 화훼마을은 인근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도움 속에 복구됐다. 이번 투쟁을 통해 화훼마을 사람들은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그들의 문제는 어느것 하나 해결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요즘 그들은 '주소지 되찾기' 운동을 시작했다. 비록 세상살이가 험겨워 더딜지라도.

감남향린교회의 김경호 목사는 말한다. "이들은 유령같은 존재입니다. 존재는 있지만 우리사회는 그들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죠. 아직도 이곳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인근에서 끌어다 쓰느라 전기줄이 뒤엉켜 있습니다. 항상 화재의 위협이 존재하는 거죠"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1999년 12월 24일(금)

호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속보>

## 출소 비전향장기수들 강제연금

### 통일농구대회 관람 막기 위한 조치

24일 새벽 3시경 전남 광주 민중당제원 김영태(69·89년 출소) 씨가 집 앞에서 광주 동부 경찰서소속 형사 10여명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비전향장기수 출신인 김영태 씨는 2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리는 통일농구대회에 장기수 30여명과 함께 관람할 예정이었다.

김영태 씨를 광주역까지 배웅하려던 '광주통일의 집' 비전향 장기수 김동기, 이재룡 씨에 의하면 "괴한 10여명이 김 씨의 출발을 막아 김 씨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봉고차에 태웠다"고 밝혔다. 당시 김동기 씨가 동승하려하자 괴한들은 '공무집행 방해'라며 강제로 끌어내린 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김동기 씨와 이재룡 씨가 119에 전화를 걸어 김영태 선생이 납치됐다고 신고하자 동부경찰서는 김 씨가 현재 지리산 온천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부경찰서 담당자는 "본인이 몸이 안 좋아 온천에 갔을 뿐이며, 연행이나 납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도 코피가 나는 건강상태에서 서울에 어떻게 가겠냐"고 말했다. 이와관련 YTN에 따르면, 동부경찰서는 "비전향 장기수인 김영태 선생이 농구장에서 '송환을 하라'고 외칠까봐 격리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앞서 김영태 씨가 통일농구대회 관람을 위해 서울로 간다는 사실을 안 동부경찰서 담당 형사 심학수 씨는 김 씨에게 "절대 갈 수 없다"며 출발을 만류했다고 한다.

또한 대전에 살고 있는 비전향장기수 출신 김용수, 최선목, 최수일, 한장호 씨 등도 통일농구대회 관람을 위해 새벽에 출발하다 경찰의 제지를 받고 집 안에 연금됐으며, 김용수 씨는 형사의 감시를 피해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다 천안역에서 연행돼 되돌아왔다.

한편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은 오전 10시경 동부경찰서 앞에서 김영태씨 납치와 관련해 항의시위를 가졌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민주화운동보상·의문사법 통과

### 유가족 천막농성 30일 해단식

드디어, 드디어였다. 짧게는 2년, 길게는 수십년을 끌어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민주화운동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피눈물을 흘려왔던 유가족들에겐 세상 다 른 것과 견줄 수 없는 기쁨이었다.

국회는 28일 오후 3당 국회의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별다른 반대없이 민주화운동 관련법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통과시켰다.

28일 통과된 민주화운동 관련법은 삼선개헌안 발의일인 69년 8월 7일 이후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 불명, 부상, 질병, 그에 따른 휴유증으로 사망한 것이 인정된 사람과 유족 관급·해직·하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해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은 대통령 소속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핵심골자로 한다.

국회 앞 천막 농성장에서 법안 통과 소식을 전해들은 유가족들은 얼싸안고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배은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은 "이제야 자식들 볼 면목이 생길 것 같다"며 기쁨의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두 법의 제정은 민주화운동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일의 시작일 뿐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두 법은 보상 체계 중심으로 하고 있어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보상과 명예회복 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이후 만들어

지는 시행령에 좌우되기 때문에 시행령의 올바른 제정 역시 필수적이다.

유가족들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국회 앞 천막 농성장에서 해단식을 가질 예정이다.

### 저무는 '99... 끝나지 않은 싸움

#### 해고·산재노동자 단식농성 계속

요란한 새해맞이 속에서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위해 노동자들이 목숨을 건 단식을 벌이고 있다.

'콜리엇' 삼성그룹과 9년간 복직싸움을 하고 있는 삼성해고자 김용희(40·전해투 조직국장) 씨는 목숨을 걸고 45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 씨는 삼성이 약속한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11월 1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는데 현재 정신이 혼미한 상태다. 이에 김 씨의 부인 이용화 씨(39)와 가족들이 서울 삼성본관 앞에서 27일부터 항의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12월 21일자 참고>

군산의 기아특수강 해고노동자(위원장 김정기)들도 '정리해고 현회'를 주장하며 23일부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생산직 노동자 20여 명이 정리해고된 기아특수강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4백57일에 걸친 천막농성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한편 28일 이상관 씨 공동대책위원회의 고재엽 대표 등 8명도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공대위는 '산재노동자 이상관씨 자살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요구하며 여의도

공단 본부 앞에서 1백53일째 철야농성 중이다.

### "내 아들을 살려내라"

#### 고 조중필 씨 살해용의자 출국

고 조중필 씨 살해용의자 아더 제이 페터슨이 검찰의 부주의 속에 한국을 빠져나가자 이에 대한 가족들의 반발이 거세다.

유족들은 오늘 오후 2시 서초동 법원 앞에서 사건을 담당한 한동영 검사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는다.

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에서 가슴과 목 등을 난자당한 채 살해된 조중필(당시 홍익대생) 씨 사건은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있는데, 두명의 살해용의자 중 살인죄로 기소된 재미교포 에디리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풀려나자 유족들은 곧바로 한 명의 용의자 페터슨을 살인죄로 고소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 한 검사가 페터슨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지 않아 페터슨은 지난 8월 김포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서도 한 검사가 페터슨을 살인사건과 관련해 수사중이라고 거짓말을 한 바 있어 유족들은 한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소했다.

### 진관스님, 실형 1년 선고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진관스님에게 실형 1년이 선고됐다. 28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진관스님 1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유승남 판사)는 진관스님에게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죄 등을 적용해 실형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진관스님은 10차 범민족 대회와 관련해 지난 8월 구속됐다.

##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인권하루소식>은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하루소식 독자들 상대로 99년 한해동안 발생한 국내 인권사건(총 55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가운데 '99 인권 10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모두 72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편집자 주>

민에게 불법행정을 일삼아 사회적 불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현재는 지문날인 거부를 선언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전산화 폐지'를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 1. 국가보안법 개폐투쟁 불붙어(72%)

#### 보수 벽 앞에 개정안 상정도 못해

80년대 말 '반민주악법철폐투쟁', 90년대 초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 결성이래 거의 10년 만인 올해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종교, 시민사회단체를 아우르는 연대 기구가 구성돼 활발한 국가보안법 개폐 투쟁이 전개됐다. 신부들의 단식사발농성을 시작으로 각계 시민사회에서 농성, 집회, 신문광고, 서명운동이 연일 이어졌다. 여기에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11월 자유권규약에 대한 한국정부 2차 보고서 심의 결과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하도록 국가보안법 7조의 즉각적인 폐지 등을 권고해 힘을 보탰다. 이런 투쟁과 유엔인권이사회와 권고는 우리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인권보장을 가름하는 기준이 돼가고 있다.

그러나 보수의 '벽'은 견고했다. 초기부터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의 주도권은 정치권에 있었다. 김대중 정권은 '인권'을 내세울 때마다 '국가보안법 개정'을 약속했고, 국민회의는 구체적인 개정안까지 마련했다. 이에 한나라당, 자민련 등 보수세력들은 '색깔론'과 안보논리를 들이대며 반발했다. 결국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김대중 대통령은 "시간을 주면 해결하겠다"는 말로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또 다시 외면했다.

### 2. 국가행포에 대한 시민사회의 자성(57%)

#### 지문날인 거부운동 시작돼

국가권력의 부당한 강제행위에 대한 30년만의 저항 지문날인 거부, 68년 이후 단 한번의 문제제기 없이 지속돼 온 주민등록증과 지문날인에 대한 시민사회의 자성이었다. 지난 5월 정부는 주민등록증 경신 계획을 발표하면서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의 지문을 채취하고 디지털로 보관하기 시작했다. 전 국민 동원체제를 연상케 하는 정부의 일제 지문채취와 지문 전산화 작업은 결국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혔고, 사회인사 1백50여명을 시작으로 한 지문날인 거부 선언운동은 PC통신과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정부는 지문채취와 전산화 작업을 그치지 않고 있으며,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국

### 3. 이근안 출현과 고문 공소시효 논란(47%)

#### 고문 사실 잇따라 확인...가해자 처벌 못해

이근안이 나타났다. 80년대 악명 높은 고문행각 후에 은신, 11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전 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이근안이 지난 10월 28일 제발로 검찰청사를 찾은 것이다. 이근안의 출현은 곧바로 △과거 고문 사건에 대한 증언 △고문범죄 공소시효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근안이 직접 고문을 담당한 김근태(국민회의 부총재) 씨 사건을 비롯해, 함주명, 김성하 씨 등의 간첩조작사건 등이 주목을 받게 됐고, 나아가 90년대 안기부에 의한 고문사건에 이르기까지 역대정권의 비인간적인 범죄행각에 대한 증언이 잇따랐다.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검찰도 곧바로 수사에 착수, 이근안의 도피행각을 도와준 전직 경찰청 고위간부를 찾아내고, 정형근(한나라당 국회의원)의 고문개입 사실도 일부 확인·발표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국내 인권단체와 법률가들은 "고문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으로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고문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검찰은 이근안의 고문행위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려 역사 앞에 또 한 번 무거운 자취를 남기고 말았다.

### 4. 국가인권위 설립 좌초 위기(39%)

#### 법무부의 탄죽결기, 인권법 제정 연기돼

법무부의 오만과 아집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좌초위기에 몰아넣고 말았다.

98년 9월 첫 시안이 발표된 이래 '법무부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정권의 법안'이라는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인권법안의 문제는 현 정권의 인권정책의 허상을 드러낸 리트머스시험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4월 특수법안으로 인권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인권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 인권활동가 30여명은 일주일간의 단식농성으로 이에 응답했다. 특수법안 인권위원회는 검찰과 법무부의 감독과 통제 하에 놓일 수밖에 없는 필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국내의 인권단체들과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한 여당은 9월 이후 인권법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법안수정의 가능성

###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2)

을 탐색했지만 검찰세력의 저항을 끝내 극복하지 못해 12월 20일 법안제정의 연기를 선언했다. 인권에 대한 철학과 전망이 부재한 상태에서 여당과 법무부가 정경홍보용 상품으로 인권위를 설치하려고 하는 한 다음 국회에서도 국민을 위한 인권위 설치는 결코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 5. 지속적 언론개혁 토대 <조선일보> 사건(37%)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확대에 영향

지난해 (월간조선) 11월호로부터 촉발된 <조선일보> 취재거부운동과 국내의 학계의 언론·학문·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방은 올해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마녀사냥식 사상공세 앞에 지식인사회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처음으로 <조선일보>는 궁지로 내몰렸다. 올 1월 <조선일보>는 최 교수가 제기한 고소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그의 기고문과 논문을 게재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조선일보 취재거부운동은 1차적인 승리로 귀결됐다. 하지만, 4월 초 갑작스럽게 최 교수는 경질됐는데,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보수층을 대변하는 <조선일보>가 견제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하지만 <조선일보> 취재거부운동은 이후 '언론개혁시민연대'로 거듭나면서 언론개혁운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게 됐고, 진보적인 지식인들의 <조선일보> 비판 활동도 활기를 찾았다. 이로써 보수우익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선일보>는 처음으로 정치적 타격을 입었고,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개혁에 대한 대중적 열망을 자극하는 한 계기로 자리잡았다.

#### 6. 생존을 위한 사투 지하철 파업(34%)

김대중 정권 노동탄압의 전형적 사례

지난 4월 19일 새벽 4시 서울지하철 노조는 정부의 구조조정에 맞불을 놓는 대규모 파업에 들어갔다. 지하철 파업은 작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에 맥을 잇는 올해 가장 치열했던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었다. 지하철 노조는 파업을 감행하기 전 고건 시장 면담 등 정부와의 협상을 꾸준히 추진해 왔지만 정부는 오히려 공안대책협의회를 꾸려 노동자들을 탄압해 왔다. 정부가 울고 싶은 노동자들의 뺨을 친 격. 지하철 노조 파업은 공공연한 총파업에 도화선이 되어 모두 19개 사업장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했다.

그러나 서울대와 명동성당을 진지로 삼은 파업은 8일만에 끝났다. 정부의 강공,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의 매도, 자신·불편만을 생각하는 국민들의 힐난 그리고 백만 원군

을 약속했던 한국통신의 파업 유보 등이 그 원인. 지하철 파업은 복귀 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공사 측은 파업에 참가했던 노동자들을 상대로 '직권면직 소명서'라는 이른바 '노동자용 전향서'를 강제했으며, 징계와 해고, 고소고발 등 인권유린을 일삼았다.

#### 6. 되풀이되는 대형참사의 악몽(34%)

총체적 부실공화국, 안전지대는 없다

99년은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악몽이 되살아난 한해였다.

지난 6월 30일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수련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망유치원생 19명의 어린 생명을 앗아가더니, 10월 30일에는 또다시 인천 인현동 호프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중고등학생 60여명이 죽고 40여명이 부상당하는 대형참사가 벌어졌다.

씨랜드 수련원과 인천호프집 화재사건은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의 먹이사슬과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눈먼 이윤추구의 논리가 정교하게 맞물려 언제 벗어날지 모르는 무수한 참극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참사공화국'이라는 한국형 위험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번 사고는 대형참사가 불러올 절멸의 위기로부터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 국가가 이러한 절멸의 위기에 국민의 생명을 방치하는 것 또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 그리고 총체적 부실공화국을 전면적으로 개조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당연히 국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 8. 정부가 유도한 조폐공사 파업(33%)

특검제 도입됐으나 수사 공정성에 의문남아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의 취증반언을 통해 엄청난 공작과 음모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조폐공사의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노조 파업이 검찰의 개입 아래 유도됐다는 것.

특별검사팀의 일원으로 활동하다 수사방향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수사팀에서 철수했던 김형태 전 특검보와 특별수사관들은 대검찰청 명의의 '공기업구조조정과정의 문제점 및 대책'(98.10.7) 등 3종류의 파업대책 문건을 공개하며 대검 공안부가 직접 파업을 유도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강원인 특검팀은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을 감회박 전 사장의 1인극으로 규정하며 정부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은 없었다는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최초 검찰수사와 국회 청문회, 그리고 특별검사팀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파업유도

###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3)

사건의 전모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결국 이 사건은 무성 한 의혹만 남긴 채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지고 있다.

#### 9. 노조 정치 활동 마지막 족쇄 풀려(31%)

노동단체 정치자금 기부금지 위헌 결정

노동단체의 정치활동을 가로막는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됐다. 지난 11월 헌법재판소(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관련 조항(12조 5호)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이 정한 표현·결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위헌 결정의 내용이다. 이에 따라 노조 등 노동단체에게도 사용자 단체 등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사실 지난 97년 3월 노동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삭제됐지만 실제로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에 걸려 노동단체의 정치활동은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선거법이 개정돼 노조의 선거운동이 보장된 데 이어,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제 노동단체의 정치 활동을 막아 온 제도적 규제는 모두 풀리게 됐다.

#### 올해의 인권침해자

##### 1. 정형근 (16명)

많은 사람들이 고문가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지 않고 국회의원이 돼 국정을 좌지우지함으로써 국민의 도덕감을 혼란시키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했다는 이유로 정형근을 선정했습니다.

그밖에 김대중 대통령( 집시법 계약 / 겹으로 인권대통령이란 탈을 쓰고 군사독재 못지 않게 민중 탄압)과 제정경제부(복지 예산 삭감으로 빈곤층 생존권 무시), 한나라당( 인권침해자 정형근을 보호 / 국가보안법 개정 반대), 이근안 등이 선정됐습니다.

#### 올해의 인권기여자

##### 1. 국가보안법폐지 운동단체 (6명)

선정 이유 : 국보법 반대운동 대중화에 기여 이외에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보도한 한겨레 강희철 기자와 지문날인 거부운동, 이미경 의원(동티모르 파병 찬성), AP통신 기자(노근리 학살사건 보도), 김어준 판지일보 총수(금기사항에 대한 도전) 등이 인권기여자로 선정됐습니다.

#### 10. 빈곤인구 1천만 시대 도래(29%)

정부의 공허한 빈곤정책,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빈곤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는 발표가 나왔다.

지난 11월 참여연대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법정 최저생계비인 월소득 23만4천원 이하의 빈곤인구가 전 인구의 18.8%인 1천29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은행도 한국의 도시빈민 비율이 97년 9%에서 지난해 18%로 두배 가량 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소득의 경우 96년 하위 20%의 소득이 상위 20%의 30.5%였으나, 99년에는 17.4%로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빈곤계층이 확대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생활보호예산에 대한 축소방향을 발표했다. "경기의 활성화로 실업자수 감소가 예상돼 생활보호 예산의 증액이 필요없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더구나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아 정부의 빈곤정책은 공허함만 더하고 있다.

#### 10. 유가족들의 국회 앞 농성(29%)

민주화운동 보상·의문사 법안 마침내 국회 통과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들의 농성은 99년 한해도 계속됐다.

유가족들은 지난해 11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그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거라 믿었던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유가족들은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천막농성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친 단식농성과 삭발농성, 국회의원실 점거농성 등을 계속해왔다. 유가족들의 지난한 투쟁은 마침내 올 12월 정기국회에서 두 법안이 통과되는 결실을 낳았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시행령을 제대로 만드는 일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일 등 과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그외에 10대 뉴스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정신지체장애인 강제불입수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도감청 시비' '집시법 계약' '농어촌 작은학교 통폐합'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에바다 농성 3년'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고문경찰관 실형 선고' 등이 올해의 주요 인권뉴스로 주목을 받았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하·참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1999년 12월 30일(목)

제 1528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 <99년 중간사>

### 새 천년, 묵은 때부터 씻자

20세기가 저물고 Y2K의 불안과 함께 21세기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새 천년을 맞는 지구촌의 풍경은 매우 분주합니다. 대형 행사들이 줄을 잇고, 새 천년 해맞이 여행 상품이 매진되고, 은행과 상점에 사람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희망과 불안이 공존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21세기는 그러나, 냉정하게는 20세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놀랄 만한 생산력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진보를 이룩했던 세기,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실험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진행되었던 세기. 반면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끊이지 않는 국지전이 학살과 고문, 폭력을 지구에 만연시킨 것도 20세기였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인류는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등 각종 인권보장체계를 다듬어 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의 끝자락에 와 있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어둡고 비참한 반인권의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의 경우, 20세기는 식민주의에 맞선 치열한 민족해방투쟁에서부터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순간도 자유와 평등을 향한 투쟁을 멈춘 적이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의 고문, 제주 4·3의 상처, 전쟁시기의 학살, 독재시대의 고문과 폭력 등 산적한 문제 가운데 어느 하나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한 채 21세기를 맞게 됩니다.

또 1990년대에 들어와 비로소 우리 사회는 군사독재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주화의 시대로 진입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계자본주의의 확장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노동소의 현상의 강화, 구시대적 법과 제도에 의한 폭력이 여전히 상존했습니다. 여의도 앞 천막농성이 상징하듯이 20세기를 마감하는 오늘날에도 생존권조차 박탈당한 민중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으며, 빈곤층 1천만명의 광범위한 권리 박탈 상황이 인권의 진보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상식으로서의 인권을 수용하는 첫걸음으로 인식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도, 국가보안법의 개폐도 여전히 보수 수구세력의 힘을 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21세기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가 낳은 극단적인 빈부의 격차, 그로 인한 각종 불평등과 권리의 심각한 박탈 현상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20세기까지 그래왔듯이 21세기에도 자유와 평등을 향한 진보적 인권운동의 행진은 끝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인권하루소식>에게 있어 2000년은 장미빛 희망의 세해일 수만은 없습니다.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를 짓눌러온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노동자의 파업권이 계속 여론의 못매를 맞아야 하는 한, 1천만 빈곤계층의 삶이 밑바닥을 기어야 하는 한, 고문가해자들이 버젓이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는 한, 어디선가 또 다른 어린 이들이 때죽음을 당하게 되는 한, 2000년은 '지난해'의 연장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93년 9월 7일 첫 호를 낸 이래 인권침해의 현장을 고발하고, 권리를 박탈당한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권하루소식>은 올 한해 동안도 분주하게 인권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되돌아보니 때로는 나태하고 때로는 관성에 젖은 모습으로 독자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이제 올 한해의 활동을 집고 <인권하루소식>은 새해 첫 주 다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좀 더 현실적이고 치열한 <인권하루소식>으로 거듭나는 세해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신년 첫 호는 1월 7일에 발행됩니다>

### <알림> 유가협 천막농성단 해단식

◎ 때: 12월 30일(목) 오전 11시 ◎ 곳: 여의도 국민은행 앞 천막농성장

## 만화로 되돌아본 1999년 한국의 인권

### 만화로 보는 1999년 인권 10대 뉴스

글그림 이동수



### 〈인권하루소식〉 99년 12월분 총목차(1508-1528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508	12/1	1	자해공갈단식 철거폭력 - 철거용역, 오물·신나 뒤집어쓰고 주민 협박/ 실업예산삭감 철회 촉구 - 실업자들 국회 앞 집회/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② 근로기준법·노동시간단축 특별법/ 뉴라운드 반대 행동 돌입 - 항의시위·설명회 등 열려/ 국보법 반대투쟁 속보 - 국보 제정 51년 항의행동 잇따라
		2·3	99년 11월 총목차(1487호-1507호)
1509	12/2	1	이미 반세기 - 국보법 제정 51년, 전국 국보철 합성/ "학습지 교사도 노동자다" - 제능교육 교사노조 전면파업 돌입
		2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③ 국가보안법/ "차리리 나오지 말라고 해" - 문화계, '규제연령 상향'철회 촉구/ '올해의 인권영화상' <열대야> -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과정 답아
1510	12/3	1	시에틀의 합성을 서울로 - 민주노총 등 WTO뉴라운드 반대시위지지/ "전력산업, 날치기 안 된다" - 전력노동자 국회 앞 대규모 시위/ <만화사랑방> 국보법 제정 51주년
		2	청소년의 자율성 학교가 가둔다 - 두발, 복장 등 생활침해 심각해/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④ 국가인권기구와 인권법
1511	12/4	1	법외에선 경찰권력 - 집회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국보법 7조 피의자 또 유죄 - 책갈피 종교선 써 실행받아/ 21세기, 양심수 사면부터 - 기독교 단체, 성탄절 특사 요청
		2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1512	12/7	1	무너져내리는 자유의 상이탑 - 대학인론, 교육당국 탄압에 곳곳서 신음/ "각서"를 거부합시다 - 집회신고시 경찰 요구, 협조사항에 불과
		2	<인권시평> 우리 딸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면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주간인권호름(11/30-12/5)
1513	12/8	1	파업, 돈으로 막을 수 있다? - 맨하탄 호텔·한국전력, 노조간부 시위 공작/ 민주노총, 정권 퇴진 투쟁도 불사 - 국회 앞 농성장 침탈에 분노 들끓어
		2	<판결문 요약> 연대시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 "시위집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1514	12/9	1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실질화 - 국회의원, '형사사건의 인권보호 특별법' 제출/ "김대중은 퇴진 하라" - 민주노총, 무기한 농성 돌입/ 정의평화상, 로잘린 코스타 - 방글라데시 인권운동의 대모
		2	"김훈 중위 사건, 특검제 도입" 촉구 - 천주교 인권위, 추가 의혹 제기/ 생존을 위해 싸워온 모든 이에게 영광을 - 정의평화상 수상한 로잘린 코스타 씨
1515	12/10	1	새천년...풀리지 않은 매듭 - 세계인권선언 1년, 국보법 등 인권문제 해결 촉구/ 진관스님, 3년 구형 - 조계종, 무죄석방 탄원서 제출
		2	노동법 어겨 고소된 노동부장관 - 제능교육교사노조 설립신고서, 보름째 방치돼/ 노근리 대책위, KNCC인권상 수상 -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단초/ "또 다른 검열을 막아라" - 문화계, 청소년 연령 상향비판/ <만화사랑방> 대학인론 탄압
1516	12/11	1	"너희가 민주주의를 아느냐" - 한나라당, 국보법 개·폐 반대 당론 확정/ <진급속보> 민중대회 부상자 속출 - 항공대생 오른쪽 눈 실명...중앙대부속병원 아비규환
		2	베트남에도 '노근리'가 있다 - 한국군, 임산부·어린이 총으로 무차별 사살/ 끝내야할 전쟁, 대인지뢰 - 대인지뢰 전시회 열려
1517	12/14	1	난데없는 최루탄 사용 선동 - 평화시위 논의 불발탄/ 분단없는 곳에서 편히 쉬소서 - 비전향 장기수 고 최남규 선생 영결식
		2	<인권시평> 소유권 대 향유권(강내희, 중앙대학교 교수)/ 주간인권호름(12/6-12/13)
1518	12/15	1	농민들, 각지 국회의원실 점거 '농기부채특별법' 등 농민 개혁법안 제정 촉구/ 민주노총, 국회 앞 차량시위 - "주 5일 근무 실시" 촉구
		2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당연한 권리 - 양대노총, 노사정위안 "노조 단결권 방해한다"며 반발/ "고엽제 살포, SOFA 위반" - SOFA개정 국민행동 미대사관 앞 시위/ <세로나온 논문> "인권 및 인권 흥정 논리의 아시아적 조망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 강사 정영선)

### 〈인권하루소식〉 99년 12월분 총목차(1508-1528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519	12/16	1	국회의원 74명 국보법 개·폐 찬성 - 응답자 108명 중 69% 지지/ 마지막 목숨까지 건다 - 삼미특수감 노동자 고용승계 투쟁 3년되던 날
		2	"이근안 처벌, 고문범죄 단죄 시초" - 고문 피해자들 고문경관 고소 줄이어/ 전철연 의장 4년 선고 - 사재총포 배후조종 혐의 인정돼/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① 동성에 왜곡한 교과서가 바뀐다
1520	12/17	1	김대통령 "인권법 강행처리 않겠다" - 민가협·유가협 회원들과 오찬/ 베트남에 사죄와 용서를 - 염서보내기·거리캠페인 전개/ <만화사랑방> 민중대회 폭력시위로 보도한 언론
		2	새천년 인류의 지향점 "인권" - 전쟁·빈곤·차별의 역사 담은 폴리처상 사진전/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② 끝나지 않은 '작은학교 지키기 운동'
1521	12/18	1	비정규직 노조 최초 합법화 - 제능교사노조, 41일만에 노조 신고필증 받아/ 경찰 사과 의사 밝혀 - 아산 지용석 씨 사건
		2	시민의 신문 기사, 집단 사지 - 회사운영 둘러싸고 경영진과 마찰/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③ 지문날인 거부운동
1522	12/21	1	조계사 농성 5백일 해산 - 정치수배자 농성단 검찰 자진 출두/ 전국연합 한층목 씨 체포 - 북경민족대토론회 배후조정혐의/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④ 해고노동자 단식 투쟁
		2	<인권시평> 죽음에 대한 예우(공선옥, 소설가)/ 주간인권호름(12/11-12/20)
1523	12/22	1	정광훈 전농 의장 체포 - 농민들 격앙, "정권퇴진투쟁 불사"/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⑤ 탈북자, '인권피해 기자회견' 그후
		2	<토론회 지상중계> 한국의 사회복지와 노동운동 - "국가복지 확대로 노동자 통합 모색"/ 이주노동자조약 비준 촉구 -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맞아 외노협 성명
1524	12/23	1	민중대회 48명 체포영장 발부 - 시민사회, '대정부 투쟁' 선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⑥ '예술의 전당 앞에 횡단보도가 생겼어요'
		2	<현장 스케치> 아름다운 아이들의 겨울 외출 - 소년원 아이들, 연극 행사/ <평화와 인권>이 뽑은 99년 전북지역 인권 10대 뉴스
1525	12/24	1	실업상태 호전 안됐다 - 저소득층 3명중 1명 장기실업자/ <만화사랑방> 인권법 제정 연기
		2	봉천 3동, 철거폭력 극성 - 주민들, 온몸에 피멍, 전치 5주 부상/ 위안부 할머니 추모제 열려 - 올 한해 11명 영면/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⑦ (끝) 대형화재 당했던 회계마을
호외	12/24	1	<속보> 출소 비전향장기수들 강제연금 - 통일농구대회 관람 막기 위한 조치
1526	12/28	1	"고향에 돌려보내주오" 비전향장기수 송환 추진위 결성/ 사상전향 요구하는 법원 - "보안관찰처분 적법 판결"/ 예비대학생연대회의, 광화문 점거 기습시위 -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2	<인권시평> 밀레니엄, 그리고 여의도 '농성 천막촌' (이재훈, 한겨레 기자)/ 주간인권호름(12/21-12/28)
1527	12/29	1	민주화운동보상·의문사범 통과 - 유가족 천막농성 30일 해단식/ 저무는 99년, 끝나지 않은 싸움 - 해고·산재노동자 단식농성 계속/ "내 아이들을 살려내라" - 고 조중필 씨 살해용의자 출국에 항의집회 열려/ 진관스님, 실행 1년 선고
		2-4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년 인권 10대 뉴스
1528	12/30	1	인권하루소식 종간사
		2	만화로 되돌아본 1999년 한국의 인권
		3·4	99년 12월 총목차(1508호 -1528호)